

2002 연구보고서 210-27

#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김 원 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혜 영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김 민 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여성개발원

## 발 간 사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이하여 보다 선진화된 한국사회와 남녀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중에 있습니다. 한국사회는 80년대 말의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여성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여성운동도 활기를 띠어 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권익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자각과 세력화가 주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속에서도 여성의 삶의 질은 많은 장벽속에서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동체속에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가정책결정의 대리인인 국가통수권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여성운동은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치세력화를 기치로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본원에서는 2002년 12월에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기회로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을 통하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남녀유권자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라는 새로운 연구시도를 하였으며, 이를 향후 여성유권자에 대한 정치의식 고양 및 사회참여 활성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각계의 연구자 및 여성권익신장을 위한 활동가, 그리고 여성유권자에 대한 애정을 가지신 많은 관련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한해를 마무리하는 막바지에 조사분석에 심혈을 기울인 본원 연구진과 김민정 교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12월

한국여성개발원

원장 장 하 진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6
가. 연구내용 .....	6
나. 연구방법 .....	7
II.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9
1.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정의 .....	11
2. 최근 공직선거에서 나타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성차 분석 .....	17
가. 남녀유권자와 투표율 .....	17
나.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분석 .....	31
III. 16대 대선과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	45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47
가. 조사목적 .....	47
나. 조사내용 .....	47
다. 조사설계 및 분석기법 .....	48
라. 조사응답자의 특성 .....	49
2.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	51
가. 투표참여분석 .....	51
나. 지지후보 비교 .....	69
3.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도 .....	75
가. 정치적 관심도에서의 성차 .....	76

나. 지지후보 결정요인 비교 .....	85
다. 정책에 대한 성향 비교 .....	88
4.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12
가.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	112
나. 정책지향적 투표와 4가지 변수와의 관계 .....	115
5. 소결 및 요약 .....	125

#### IV. 요약 및 제언 ..... 135

1. 요약 .....	137
2. 제언 .....	142
가. 정책지향적 정당으로서의 변화와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 .....	142
나.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	143
다. 정부의 역할 .....	145
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	147
마.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	151
바. 여성유권자의 주체적인 투표참여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 .....	151
사. 여성의 정치력 강화 및 정치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정당의 역할 .....	152

#### 참고문헌 ..... 160

#### 부    록 ..... 163

## 표 목 차

<표 II-1>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유권자수 및 투표자수 .....	20
<표 II-2>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및 투표자 수 .....	23
<표 II-3> 역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유권자 수 및 투표율 .....	27
<표 II-4> 16대 총선에서 기권한 이유 .....	33
<표 III-1> 조사설계 .....	49
<표 III-2>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학력) .....	50
<표 III-3> 응답자 특성(직업, 소득, 지역, 도시규모, 단체가입여부) .....	51
<표 III-4>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참여 여부 .....	55
<표 III-5> 성별과 교육 교차분석표 .....	57
<표 III-6> 경로분석을 위한 인구통계변수의 변수값 지정 .....	66
<표 III-7> 경로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성별 구성비 .....	66
<표 III-8>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지후보 선택 .....	72
<표 III-9> 지지후보 결정 변수(회귀계수) .....	74
<표 III-10> 성별 * 선거관심도 * 학력별 .....	78
<표 III-11> 일반정책에서의 남녀의견분석(젠더갭) .....	90
<표 III-12> 여성관련정책에 대한 남녀의견차이(젠더갭) .....	93
<표 III-13>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성 · 연령별 요인 .....	113
<표 III-14>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학력별 요인 .....	113
<표 III-15>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직업별 요인 .....	114

## 그림목차

<그림Ⅲ-1>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 (전체) .....	52
<그림Ⅲ-2>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 (성별) .....	53
<그림Ⅲ-3>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전체) .....	58
<그림Ⅲ-4>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성별) .....	59
<그림Ⅲ-5>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	60
<그림Ⅲ-6> 정치 효능감 (성별) .....	60
<그림Ⅲ-7>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전체) .....	61
<그림Ⅲ-8>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성별) .....	62
<그림Ⅲ-9>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전체) .....	63
<그림Ⅲ-10>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성별) .....	63
<그림Ⅲ-11>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전체) .....	64
<그림Ⅲ-12>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성별) .....	65
<그림Ⅲ-13> 투표행태 경로분석 (성별) .....	67
<그림Ⅲ-14> 투표행태 경로분석 (남자) .....	68
<그림Ⅲ-15> 투표행태 경로분석 (여자) .....	68
<그림Ⅲ-16> 투표행태 경로분석 (세대별) .....	69
<그림Ⅲ-17>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대상 (전체) .....	70
<그림Ⅲ-18>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대상 (성별) .....	71
<그림Ⅲ-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성별) .....	77
<그림Ⅲ-20> 정치적 사건/선거 관심도 (전체) .....	79
<그림Ⅲ-21> 정치적 사건/선거 관심도 (성별) .....	81
<그림Ⅲ-22>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전체) .....	82
<그림Ⅲ-23>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성별) .....	82
<그림Ⅲ-24>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전체) .....	83
<그림Ⅲ-25>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성별) .....	84

<그림Ⅲ-26> 15대·16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결정기준 .....	86
<그림Ⅲ-27> 「제16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기준 (성별) .....	87
<그림Ⅲ-28> 대북지원에 대해 (전체) .....	94
<그림Ⅲ-29> 대북지원에 대해 (성별) .....	95
<그림Ⅲ-30> 기업활동 자율화에 대하여 (전체) .....	96
<그림Ⅲ-31> 기업활동 자율화에 대하여 (성별) .....	97
<그림Ⅲ-32> SOFA개정에 대하여 (전체) .....	98
<그림Ⅲ-33> SOFA개정에 대하여 (성별) .....	99
<그림Ⅲ-34> 복지증진에 대하여 (전체) .....	100
<그림Ⅲ-35> 복지증진에 대하여 (성별) .....	100
<그림Ⅲ-36>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 (전체) .....	101
<그림Ⅲ-37>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성별) .....	102
<그림Ⅲ-38>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전체) .....	103
<그림Ⅲ-39>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하여(성별) .....	103
<그림Ⅲ-40> 환경보전 우선에 대하여(전체) .....	104
<그림Ⅲ-41> 환경보전 우선에 대하여(성별) .....	105
<그림Ⅲ-42>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하여(전체) .....	106
<그림Ⅲ-43>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하여(성별) .....	106
<그림Ⅲ-44>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하여(전체) .....	107
<그림Ⅲ-45>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하여(성별) .....	108
<그림Ⅲ-46> 여성의 최적직업으로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하여(전체) .....	109
<그림Ⅲ-47> 여성의 최적직업으로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하여(성별) .....	110
<그림Ⅲ-48>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하여(전체) .....	111
<그림Ⅲ-49>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하여(성별) .....	111
<그림Ⅲ-50>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남녀전체) .....	118
<그림Ⅲ-51>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남성) .....	119
<그림Ⅲ-52>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여성) .....	120
<그림Ⅲ-53>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 여부 (전체) .....	124
<그림Ⅲ-54>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 여부 (성별) .....	124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금번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유권자 수는 34,991,529명으로, 남성이 약 49.0%, 여성이 약 51.0%로 여성유권자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우리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로 16번의 대통령선거와 16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정당이나 후보들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 여성공약을 제시한 것은 5공화국 이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치루어진 제13대 대통령선거부터이다. 국민의 직접투표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구체적인 여성공약을 제시한 것은 유권자의 반이 넘는 여성유권자를 의식한 것으로 직접선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는 고비용의 선거구조하에 여전히 유권자의 무관심, 후보자간 흑색 비방선전, 지역할거주의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200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국회의원 6.2%(17명), 광역의회가 9.2%(63명), 기초의회가 2.2%(77명), 지방자치단체장 0.9%(2명)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고도산업화사회를 맞아 우리 사회내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정책과제들이 쌓여있다. 예를 든다면 경제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하여 유권자의 50%가 넘는 여성유권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각종 공직선거에서 유권자의 50%가 넘는 여성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의식을 가지고 주권행사를 할 때 보다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이루게 될 것이며, 대표성을 가지는 여성의 정치참여도 늘게 될 전망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앞으로 교육 및 취업상의 문제, 성희롱, 여성인권, 여성복지 등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이제는 여성들도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을 보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해 주는 정치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는 일면 이익지향적 투표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클린턴이 1996년 대통령선거에서 재선할 수 있었던 것은 남성유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성유권자들에 의해 힘입은 바가 크다. 당시 선거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와 공화당 밥 돌 후보는 남성유권자들로부터 똑같이 44%의 지지를 받았으나, 클린턴은 여성유권자의 54%의 지지를 받아 여성유권자의 37%의 지지를 얻은 밥 돌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클린턴은 우선 공약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건강보험 개혁, 의료보험, 사회안전과 같은 복지문제와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였고, 여성유권자들도 이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17%나 더 높은 지지도를 클린턴은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여성유권자들의 태도는 클린턴이 대통령이 된 후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미국 최초의 여성국무장관인 매드린 올브라이트를 비롯한 3명의 여성이 장관에 임명되고, 2명의 여성이 장관급에 입각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도 21세기를 맞아 보다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이루어 나가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와 함께 직장에서의 성차별, 가정폭력, 여성인권문제 등 다양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50%가 넘는 여성유권자들의 투표권은 중요하다.

우리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 성차를 연구하는 이유는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이해관계가 가부장제하의 남성문화에 기반한 현재의 정치 형태로는 잘 대변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다. 투표행태에서 성차(gender gap)란 여성이 남성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여줄 수 있다는 여성투표(Women's Vote)와 여성의 권익이 남성에 의해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이 여성의 권익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한다는 여성주의적 투표(Feminist Vote)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여성

투표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투표행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여성주의적 투표란 여성발전기본법, 가족법 여성의 근로와 모성 및 보육, 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권익을 증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주의적 쟁점이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투표는 정책적 쟁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제목인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지니는 의미는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서 ‘새로운’ 성차의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많이 여성주의적 투표를 하여야 함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여성투표 중에 더 많은 여성주의적 투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sup>1)</sup>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급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들도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기틀마련을 위해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본인식하에서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16대 대통령선거를 대상으로 첫째, 여성과 남성과 투표행태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 둘째,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주의적 투표행태를 보였는지를 규명해 보고, 향후 여성들의 투표행태가 정책지향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가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김현희(1999년 가을호),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그 가능성 연구-1990년대의 여성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통권 제42호, pp.316-317.

## 2. 연구내용 및 방법

### 가.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목적의 수행을 위해 제Ⅱ장에서는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서 첫째,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개념을 설정하고, 둘째,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종전에도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에 실시했던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각종 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유권자에 관한 연구는 1967년 한국 여성정치문제연구회가 전국에 562명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여성의 정치의식」을 시발로 하여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비교,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남녀유권자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여성유권자에 관한 연구의 경우, 1960년-1980년대까지는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sup>2)</sup> 1991년 지방자치가 재개된 이후에야 비로소 여성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정치의식과 남녀유권자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1991년 이후 실시된 대통령선거, 총선,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2002년 12월 19일 실시했던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전국의 1,500명을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여부가 나타나는지를 중점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지향을 위하여 해야 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2) 성차가 없다고 보았음.

## 나.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에 소장하고 있는 유권자에 관한 1차자료와 2차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의 투표행태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질문지에 의한 투표행태 및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대한 조사분석이다. 예산의 범주에서 약 1,500명의 남녀유권자(남자 739명, 여자 761명)를 대상으로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 투표에서의 성차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은 20세 이상 남녀유권자의 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비례할당 층화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였다. 조사기간은 16대 대선이 끝난 직후인 2002년 12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셋째, 관계전문가와 협의회를 거쳤다. 유권자 조사경험이 풍부한 정치학자들과 함께 조사설계 및 결과에 대한 내용분석,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전문가회의를 거쳐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하였다.

## Ⅱ



#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적 배경

- 
1.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정의 11
  2. 최근 공직선거에서 나타난 남녀  
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성차 분석 17

## 1.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정의

우리는 대의민주주의 시대를 살면서, 대표를 선출하는 각종 선거로서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번씩,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4년에 한번씩,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회 의원 등 지방선거의 대표는 4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이란 유권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상적 대의(representativeness)의 3대 요소는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responsibility), 재신임 가능성(accountability)을 포함한다. 대응성(responsiveness)이란 대표자가 유권자의 의지를 얼마나 충실히 대변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대표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이나 정당의 강제적 명령과는 별개로 유권자의 의사를 철저히 존중할 경우 대응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책임성이란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에도 대표자가 그것을 넘어서서 책임을 지고 유권자나 사회의 이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재신임 가능성이란 유권자가 대표자가 행한 일에 대해 심판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재선이라는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달성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후보들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선거에 승리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공약이나 정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은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이나 정책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한다. 그간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각종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보고 지지하는 성향보다 후보자의 인물이나 지역 등에 의하여 지지해 온 경향이 컸다. 결국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대한 개념은 유권자들이 정당이나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이나 공약을 판단의 준거로 투표하는 경향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선거에 있어 기존의 선거운동방식이 후보자나 정당의 인물중심 내지 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것이 고비용·저효율의 타락된 선거문화를 조성하여 우리 선거문화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그 동안 정책정당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즉 인물과 돈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중심으로 경쟁하고, 선택하는 선거로 전환될 때 한국정치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의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문화를 타파하고, 정책지향적 정당문화의 구축을 위하여 유권자측면에서는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그간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국민대표의 선출에 있어 주로 인물이나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투표를 하다보니 정당이나 후보들이 공약이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많았다. 이는 결국 국민을 우롱하거나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처사로서 결국 후보와 유권자와의 괴리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부전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부활을 위해서도 공급자로서의 정치인과 정당의 공약, 그리고 수요자로서의 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선출직 공직에서의 여성의 과소 대표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정책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는 여성의 이해관계가 가부장제하에서 남성에 의해 잘 대변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남성에 의해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적·행태적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투표행태에서 성차(gender gap)란 여성이 남성과 다른 투표행태를 보여줄 것과 여성의 투표행태가 여성의 권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여성의 권익이 남성에 의해 대변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의

선택이 여성의 권익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현실정치에서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여성투표(Women's Vote)와 여성주의적 투표(Feminist vote)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여성투표란 남성과 구분되는 여성의 투표행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여성주의적 투표란 여성발전기본법, 가족법 여성의 근로와 모성 및 보육, 고용평등법 등 여성의 권익을 증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주의적 쟁점이 유권자의 후보자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투표를 의미한다.

실제, 조형(1996)의 연구는 여성관련법의 입법과정이 공적인 영역에서 가시화된 성의 정치 현상을 검토할 수 있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기존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변화를 추구하는 세력과 이를 고수하려는 세력간의 교섭, 갈등, 투쟁의 과정이 비교적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가부장적 사회는 권력의 기초가 되는 다양한 권력자원들에의 접근이 남성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고 결과적으로 양성관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남성이 권력화(empowered)된 사회이다. 이렇게 남성에 의해 권력화되어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변화의 추구는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여성의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통해서 큰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투표는 정책적 쟁점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투표행태에 있어서 '새로운' 성차의 문제가 제기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많이 여성주의적 투표를 하여야 함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여성투표 중에 더 많은 여성주의적 투표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여권투표가 여성투표에서 보다 많이 관찰된다는 긍정적인 증거들이 각국의 사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스웨덴, 스위스, 여타 서유럽의 경우에도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성을 축으로 한 사회적 권력관계, 즉 성의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은 사회적인 남성지배의 형태, 정도, 그리고 여성의 지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해 준다. 또한 여성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여성들의 정치참여 및 정치의식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즉 여성들이 가부장적 권력에 대한 도전을 하고자 하는 정치의식과 정치행위가 여성의 권력화 또는 정치세력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오늘날 서구에서는 이러한 여성투표(Women's Vote)의 변화와 더불어 이러한 여성투표가 여성주의적 투표(Feminist Vote)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관찰되고 있고 미국에서 이러한 차이는 1980년 선거에서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시작된 '여성투표의 여성주의적 투표화'라는 새로운 성차가 1980년대 대통령선거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난 후 1996년 대선에서는 클린턴의 당선에 여성표가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1980년대에 미국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쟁과 평화의 문제, 평등권, 낙태, 복지문제 등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투표의 여성주의적 투표화는 지난 1996년 대선에서는 클린턴의 당선에 여성 표가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의 탄생이라는 보상을 지불 받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유권자들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주장들-예컨대, '여성은 보수적이다' 또는 '여성들은 남편이나 가족의 의견에 따라 투표자를 결정하는 준봉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명제가 최근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정치의식에 있어 성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정치의식의 낙후가 끈질기게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여성의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새로운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특히 한국 유권자의 정치의식의 성차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차의 원인에 대한 서구의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차연구들은 사회인구학적 변수를 중요하게 지적한다. 교육, 고

3) 김현희(1999년 가을호), 앞의 글, pp.312-317.

용, 연령, 직업, 계급, 도시화 등의 변수가 여성의 정치의식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정치참여의 성차를 설명하려는 거의 모든 연구원들은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참여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차가 거의 없어진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고용의 경우 1955년 두베르제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라는 것은 정치권리를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수천 년간의 전통적인 사고를 단절시킨다는 지적을 한 이후, 미국과 캐나다의 연구들은 고용된 여성 중에서 가장 먼저 정치화된 여성들은 전문직 여성이며 가장 높은 교육을 받은 여성들임을 발견하여 두베르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있다.

연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에서 투표율의 성차는 나이든 층에서 가장 컸다. 연령은 또 여성의 보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고있는데 투표행위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저항에서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 더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계급은 특히 보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마이린과 매켄지는 영국여성유권자의 보수성을 중·상층 여성들의 장수라는 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르위스는 아르헨티나에서 상층여성들은 같은 층의 남성이나 하층 여성들보다 더 보수적임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화는 칠레 여성의 보수성을 미약하게나마 바꾸었고 캐나다, 미국의 북부주,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실하게 변화시켰음이 발견되었다.<sup>4)</sup> 성역할 이론에 따르면 여성은 성역할로 인해 정치적 지식의 습득에 제약을 받으며 정치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의 소유에 제약을 받는다. 즉 여성의 경우 가정에 한정되는 성 역할로 말미암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발전시키거나 펼칠 수 있는 기회에 제약을 받으며, 그 결과 여성의 정치적 태도는 남성보다 소극적, 수동적, 현실 유지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여성이

4) 이승희(1993년),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권 3호, pp.195-202

자신의 성역할을 강하게 긍정하는 경우 이 경향은 더 두드러진다.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규정하는 성역할과 여성의 정치적 행태는 이렇게 강한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여성의 정치적 태도의 변화는 성역할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성역할의 변화는 성별분업구조의 변화, 즉 사회구조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여성고용의 증대, 고등교육의 확대, 도시화, 새로운 세대의 등장 등의 사회적 변화로 여성의 영역이 사적 영역에서 공적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성역할이 부분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성역할 인식도 바뀔 수 있다. 즉 사회적 변화로 성역할과 그 이데올로기에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여성의 정치적 태도의 변화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가능하다. 198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미국의 새로운 성차는 이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구에서는 정치적 행태에서의 성차를 다양한 각도에서 규명하려는 노력들이 축적되면서 성차이론이 구축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의 연구는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못하다. 성차의 실태를 구체적, 체계적,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실태연구조차 전무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더욱 미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도전 또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여성유권자들의 여성주의적 주체(Feminist Subject)로서의 가능성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여성유권자의 집단화의 가능성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유권자의 정치적 세력화는 조직적 운동세력의 성장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정치의식이 성장하여 그들의 투표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2. 최근 공직선거에서 나타난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성차 분석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게 참정권인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에 남녀 보통선거권이 제정되면서 부터의 일로 헌법 제25조에 의하면 공무원을 선출할 권리와 헌법 제26조에 공무를 담당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참정권을 취득한 이후 16번의 대통령선거, 16번의 국회의원 선거, 6번의 지방선거, 8번의 국민투표와 2번에 걸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와 대통령선거인단 선거에 참여해 왔다. 2002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각종 공직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의 연령은 남녀 공히 대통령선거는 만 40세 이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는 만 25세 이상부터, 선거권은 각급 선거 공히 만 20세 이상의 남녀에게 부여하고 있다.<sup>5)</sup> 여기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여성유권자들의 투표가 남성과 구분되어지는 여성투표(Women's Vote)의 성향과 여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투표를 해왔는지의 여성주의적 투표(Feminist Vote) 성향을 파악하고자 먼저 그간 실시해왔던 16번의 대통령선거, 16번의 국회의원 선거, 7번의 지방선거에서의 남녀유권자 투표율 비교를 통한 남녀유권자의 투표성향을 분석하고 최근 연구에서 나타난 여성의 투표행태 및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가. 남녀유권자와 투표율

#### 1) 대통령선거

해방 이후 2001년 8월 현재까지 총15번의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는데, 선거방식으로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직접 선거방식이 8번(2대, 3대, 5대, 6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규집」, pp.20-22.

대, 7대, 13대, 14대, 15대, 16대)이고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및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거방식이 6번(1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내각책임제 하에 국회에 의한 간접 선거방식이 1번(4대) 있었다. 대통령 임기제로는 4년씩 3번까지 연임한 방식, 유신체제하의 6년제, 7년 단임제, 5년 단임제의 형태로 있어왔다. 제13대 대통령부터 현재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이다. 역대 대통령선거 중 여성후보로 출마한 사람은 1987년 실시하였던 제13대 대통령선거에 홍숙자씨<sup>6)</sup>와 1992년에 실시하였던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김옥선후보<sup>7)</sup> 등 2명이었다.

직접 선거로 실시된 대통령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자유당 정권의 지나친 부정선거로 인하여 무효가 되었던 제4대 대통령선거의 97%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80%이상의 유권자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다. 역대 대통령 직접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제3대 대통령선거였다. 유권자의 투표율은 94.4%로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다. 당시, 이승만 후보는 유효투표 총수의 약 70%를 얻으면서 당선되었지만,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유효투표율 75.2%에 비하여 5.2% 포인트 낮은 것이었다. 1954년 제3대 국회에서 '사사오입의 개헌'을 통해 이승만이 종신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에 반해, 이에 반대하는 야당세력으로서 민주당이 1954년 11월 탄생하였다. 민주당은 1956년 제3대 정·부통령선거에 대통령후보로 신익희씨를, 부통령후보에 장면 씨를 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시 선거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신익희 후보의 급사로 말미암아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장면후보가 자유당의 이기붕 후보를 누르고 당선된 것은 유권자들의 자유당에 대한 민심이탈과 민주당의 정치부상을 보여준 상황으로 결국 4.19 혁명으로 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6) 홍숙자는 1970년 뉴욕총영사관 부영사 등 여성외교관 1호, 1979년 동국대학교 교수, 1987년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등의 경력을 지니고 있었는데, 당시 선거에서 등록 무효로 출마를 취소하였다.

7) 당시 김옥선후보는 7, 9, 12대 국회의원의 경력과 신민당 부총재란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 대통령선거 상황(초대-제14대)』, pp. 217- 243.

그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대통령선거는 간접선거가 직접선거로 바뀐 제13대 대선으로 유권자들은 권위적 정치의 어두운 시대를 마감하고 16년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라는 점에서 89.2%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선거 중 유권자 수 및 투표율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II-1>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유권자의 분포비율이 남성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투표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제, 남녀투표율 통계수집이 가능했던 제5대, 제6대, 제7대, 제13대, 제14대,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남녀투표율은 제5대 대선의 경우 남성 투표율은 88.9%로 여성의 81.3%에 비하여 7.6% 포인트 높았는데, 제6대에서는 남성투표율 84.9%, 여성투표율 81.3%로 남성이 2.6%포인트 높았고, 제7대의 경우 남성투표율 81.4%, 여성투표율 78.3%로 남성투표율이 3.1%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제13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89.8%로 여성투표율 88.5%에 비하여 1.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14대의 남성투표율 82.6%, 여성투표율 80.9%로 남성이 1.7% 포인트 높았고,<sup>8)</sup> 제15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81.3%로 여성투표율 80.1%에 비해 1.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6대의 경우 남녀평균 투표율은 70.8%로 성별 투표율은 아직 없다. 대통령선거에서의 남녀투표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녀간 투표율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보아 긍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선거에서 남녀유권자에 대한 성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의 경우 1997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밥)돌 후보를 이긴 것이 여성유권자들의 표에 의하여 기인되었던 점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여성유권자들의 성차에 대한 연구를 중요한 이슈로 부상될 것으로 보인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3), 『각종선거 및 국민투표 등 결과통계 분석(1975-1981)』, pp.11-20.

&lt;표 II-1&gt; 역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유권자수 및 투표자수

구분	시행 년도	유권자 수						투표자 수(투표율, %)					
		총 계	비율 (%)	여자	비율 (%)	남자	비율 (%)	총 계	투표 율(%)	여자	투표 율(%)	남자	투표 율(%)
2대	1952	8,259,428	100					7,275,883	88.1				
3대	1956	9,606,870	100					9,067,063	94.4				
4대 (무효 선거)	1960	11,196,490	100					10,862,272	97.0				
5대	1963	12,985,015	100	6,624,795	51.2	6,360,220	48.8	11,036,175	85.0		81.3		88.9
6대	1967	13,935,093	100	7,044,887	50.5	6,890,206	49.5	11,645,215	83.6	5,795,898	82.3	5,849,317	84.9
7대	1971	15,552,236	100	7,810,633	50.2	7,741,598	49.8	12,417,824	79.8	6,113,773	78.3	6,304,051	81.4
13대	1987	25,873,624	100	13,099,891	50.6	12,773,733	49.4	23,066,419	89.2	11,593,808	88.5	11,472,611	89.8
14대	1992	29,422,658	100	14,923,300	50.7	14,499,358	49.3	24,095,170	81.9	12,094,530	81.0 (80.9)	12,000,631	82.8 (82.6)
15대	1997	32,290,416	100	16,418,262	50.8	15,872,154	49.2	26,042,633	80.7		80.1		81.3
16대	2002	34,991,529	100					24,784,963	70.8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pp.36-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p.9.

## 2) 부통령 선거

부통령선거는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시작되어 1960년 3월 15일 제5대 부정선거를 끝으로 별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역대 부통령선거 중 제1대, 제2대 선거는 국회의원에 의한 간접선거였고, 1952년부터 실시한 제3대, 제4대, 제5대 부통령선거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실시되었다. 제1대 대통령 임기 중 제1대 부통령이 사임하고, 제2대 부통령을 선출함에 따라 제2공화국 이후 부통령제도가 사라질 때까지 대통령선거 대수와 부통령선거 대수가 차이가 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통령제는 미국의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로 나오는 부통령제와는 달리 투표용지를 다르게 사용하는 개별 선거방식이었다. 따라서 1952년 정·부통령선거시 자유당의 이승만 대통령후보는 같은 소속 정당의 이범석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하고, 무소속의 황태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1956년 실시한 정·부통령선거에서도 대통령선거와 부통령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각각 사용함으로써,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정·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게 되기도 하였다.<sup>9)</sup>

직접 선거방식에 의해 선출한 부통령선거의 경우도 대통령선거와 유사하게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이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된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진다. 역대 부통령 선거 중 제1대와 제2대의 국회에 의한 간접선거를 제외하고 제3대, 제4대, 제5대의 부통령 직접선거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1960년 3.15 부정 선거 때의 일로 투표율이 97%이었는데, 실제 부통령이 탄생한 선거 중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선거는 4대 부통령선거에서의 94.4%로, 대통령은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는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46.4%의 유효투표를 얻어 당선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제3대 때의 일로 투표율은 88%이었다. 투표율중 성별로 분류된 통계는 없다

### 3)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부터 2000년 4월 13일 실시한 제16대 총선까지 16번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제헌국회 이래 현재의 제16대 국회까지 만 25세이고, 선거권은 제헌국회 이래 제4대 총선까지는 만 21세로 하였다가, 제5대 총선부터 만 20세로 한 살 낮추어 졌다. 역대 국회에서의 유권자 투표율은 제헌국회가 95.5%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높았다. 그 후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사는 계속 유지되어 제4대 까지는 90%이상의 투표율을 보여오다가 이후 투표율은 계속 하락되어 70%대를 보였으나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84.6%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낸 바 있다<표 II-2>. 역대 총

9) [http://election.go.kr/history/history/r1/1952\\_8.html](http://election.go.kr/history/history/r1/1952_8.html)  
[http://election.go.kr/history/history/r1/1956\\_5.html](http://election.go.kr/history/history/r1/1956_5.html)

선 중 특히 1960년 7월 29일 실시한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이 떨어지는 것은 1960년 3.15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진 것에 대한 반감으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963년 제6대 총선시 투표율이 72.1%로 떨어진 것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한 정치불안과 사회안정을 이루지 못한 시기로서 국민의 정치관심도가 극히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제6대부터 제11대 총선까지 투표율이 70%선에 머무르고 있으나,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총선에서는 84.6%라는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정치적 비중이 높았던 야당인사들의 정치규제가 해제되면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유권자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후 투표율은 제13대부터는 다시 70%대를 나타내다가 제15대에는 60%대로 낮아졌고, 제16대 총선에서는 보다 낮아져 57.2%의 투표율을 보임으로 점차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총선을 살펴볼 때 여성선거인 수가 남성선거인 수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녀투표율은 남성투표율이 여성투표율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데, 그 차이는 6대-11대까지 3.3%- 4.8%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12대 이후 1.3%-3.3%로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통계수집이 가능했던 제6대 총선 이후 남녀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남성투표율은 73.8%, 여성투표율은 70.5%로 남성투표율이 3.3% 포인트 높았으며, 제7대의 경우 남성투표율 78.6%, 여성 73.8%로 남성투표율이 4.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8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75.2%, 여성투표율 71.3%로 3.9%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9대의 경우 남성 72.3%, 여성은 70.2%로 2.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0대의 경우 남성은 79.0%, 여성은 75.2%로 3.8% 높게 나타났다. 제11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80.6%, 여성투표율은 76.3%로 남성투표율이 4.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2대의 경우 남성 85.4%, 여성 83.8%로 남성투표율이 1.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3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76.8%, 여성투표율은 74.7%로 남성이 2.1% 높게 나타났다. 제14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72.2%, 여성투표

율은 70.9%로 1.3% 높게 나타났다. 제15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65.3%, 여성투표율 62.0%에 비하여 3.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6대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58.7%, 여성투표율은 56.5%로 2.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보다 일제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투표자 수는 제6대와 제12대 총선을 제외하고 남성투표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2>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수 및 투표자 수

구분	시행년	유 권 자 수					
		총 계	비율(%)	여자	비율(%)	남자	비율(%)
1대	1948	7,840,871	100				
2대	1950	8,434,737	100				
3대	1954	8,446,509	100				
4대	1958	10,164,428	100				
5대	1960	11,593,432	100				
6대	1963	13,344,149	100	6,839,790	51.3	6,504,359	48.7
7대	1967	14,717,354	100	7,525,742	51.1	7,191,612	48.9
8대	1971	15,610,258	100	7,928,851	50.8	7,681,407	49.2
9대	1973	15,690,130	100	7,925,052	49.2	7,765,078	49.5
10대	1978	19,489,490	100	9,891,492	50.8	9,597,998	49.2
11대	1981	21,094,468	100	10,586,527	50.2	10,322,593	48.9
12대	1985	23,987,830	100	12,139,759	50.6	11,848,071	49.4
13대	1988	26,198,205	100	13,271,724	50.7	12,926,481	49.3
14대	1992	29,003,828	100	14,296,473	49.3	14,707,355	50.7
15대	1996	31,488,294	100	15,998,015	50.8	15,490,279	49.2
16대	2000	33,482,387	100	17,045,456	50.9	16,436,931	49.1

구분	시행년	투표자수(투표율, %)					
		총 계	투표율(%)	여자	투표율(%)	남자	투표율(%)
1대	1948	7,487,649	95.5				
2대	1950	7,752,076	91.9				
3대	1954	7,698,390	91.1				
4대	1958	8,923,905	90.7				
5대	1960	9,778,921	84.3				
6대	1963	9,622,183	72.1	4,822,860	70.5	4,799,323	73.8
7대	1967	11,202,317	76.1	5,551,672	73.8	5,650,645	78.6
8대	1971	11,430,202	73.2	5,656,684	71.3	5,773,518	75.2
9대	1973	11,196,484	73.0	5,564,416	70.2	5,632,068	72.3
10대	1978	15,023,370	77.1	7,437,083	75.2	7,586,287	79.0
11대	1981	16,397,845	78.4	8,081,374	76.3	8,316,471	80.6
12대	1985	20,286,672	84.6	10,172,829	83.8	10,113,843	85.4
13대	1988	19,850,815	75.8	9,918,234	74.7	9,932,581	76.8
14대	1992	20,843,482	71.9		70.9		72.2
15대	1996	20,122,799	63.9		62.0		65.3
16대	2000	19,156,515	57.2		56.5		58.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pp.112~121(6대~14대까지의 통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p.9.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분석』, p.9.

#### 4) 지방선거

지방자치제는 제헌헌법에서 위임한 법률에 따라 1950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려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미루어져 1952년 4월 25일과 1952년 5월 10일 시·도의회 및 시·읍·면 의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출발하였다. 1952년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선거가 제외되었던 것은 당시 광역단체장(서울시장과 도지사)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고 시·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되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1956년 2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단체장 가운데 시·읍·면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되었으나, 1958년 2월에 본 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시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내무장관을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읍·면장은 군수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후퇴하였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당시 시·읍·면장 기초단체장과 시·도지사 광역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으나, 1961년 5. 16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지방자치제가 중단되었다가 1987년 일련의 민주화 조치와 관련하여 1988년 시·도와 시·군·구를 자치단체로 규정하고 1991년에 이르러서는 만 30년 만에 재개하게 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시·군·구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부활되기 시작한 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1998년 6월 4일 제2차 전국동시지방선거로서 기초의회 의원 및 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역대 지방선거중 1995년 6월 27일 실시했던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4년 임기인 국회의원 선거의 중간 년도에 실시하도록 임기를 3년으로 한 것 이외에는 모두 4년의 임기였다.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투표율은 1952년 시·읍·면 의회 의원 선거와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을 당시 80%이상의 투표율을 보였던 것을 정점으로 1956년과 1960년도에 실시한 시·읍·면 의회, 서울시·도의회 의원 선거, 시장·읍장·면장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여 60-70%의 투표율을 이루다가 1960년에 실시한 서울시장·도지사 선거에서의 투표율은 38.8%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그래도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 지방선거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1960년대 실시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선거일이 12월 하순이라는 계절적인 영향도 작용했지만, 특히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38.8%라는 무관심을 보인 것은 1960년의 선거가 4단계에 걸쳐 복잡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유권자의 자치의식이 무관심한 상태로 돌아갔고, 한랭과 적설의 날씨였다는 것과 지방주민의 이해관계가 적은 자치단체의 선거라는 것을 주요 이유로 들 수 있다.<sup>10)</sup> 이는 30년 만에 재개된 1991년도의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주민들은 별다른 관심 없이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 실제 1995년부터 실시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68), 『역대 지방자치단체 선거결과 분석』, pp. 589-642.

한 제1차 동시 지방선거에서부터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68.8%이상으로 높아진 것은 물론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에 대한 매스컴, 사회단체, 선관위의 홍보효과도 컸지만 지방선거를 동시에 한번 실시한다는 측면에서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보다 낮은 투표율을 보였는데, 남녀 평균투표율은 52.7%로 역대 지방선거로는 1960년 12월 29일 실시한 서울시장, 도지사선거시 38.8%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의 투표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역대 지방선거중 남녀유권자 수 및 투표율 통계를 집계한 것은 1995년 제1차 동시 지방선거부터의 일이다.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여성유권자 수는 15,769,734명으로 남성유권자 15,278,832명에 비해 490,902명 많은 50.8%를 차지하였다. 당시 남녀 평균투표율은 68.4%로 1992년 14대 총선시 71.9%나 1992년 당시 14대 대통령선거의 81.9%에 비해 낮기는 했으나, 1991년 기초의회 선거시 투표율 55%나 광역의회 선거투표율 58.9%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sup>11)</sup> 남녀투표율은 시·도지사 기준 여성유권자가 68.2%, 남성유권자가 69.3%로 남성유권자가 1.1%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998년 6월 4일 제2차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역시 여성유권자는 16,539,484명으로 남성유권자 15,998,331명에 비하여 541,153명 많은 50.8%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투표율은 52.7%이고, 남성투표율은 54.3%로 여성투표율 52.1%에 비하여 2.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자치구·시·군 의장선거는 52.7%, 시·도의회의원 선거투표율은 52.3%, 자치구·시·군 의회의원 선거투표율은 53.2%이었다.<sup>12)</sup> 성별·연령별 투표율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성이 80.2%로 가장 높고, 20대 전반의 여성이 27.0%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2002년 6월 13일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성유권자는 17,678,518명으로 남성유권자 17,065,714명에 비하여 612,804명이 많은 50.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균투표율은 48.9%로, 남녀간 성별투표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p. 180, p. 192.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p. 258, p. 269.

율은 없다.<sup>13)</sup> 중앙선거관리위가 전체유권자의 약 5%의 표본조사로 실시한 성별·연령별 투표율에서는 남성의 경우 60세 이상의 남성이 79.3%로 가장 높았고, 20대 후반이 25.3%로 가장 낮은 반면, 여성은 50대가 69.4%로 가장 높고, 20대 전반이 26.7%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sup>14)</sup> 우리나라의 역대 지방선거의 유권자 수 및 투표율을 살펴보면<표 II-3>과 같다.

<표 II-3> 역대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유권자 수 및 투표율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pp.3-6.

14) 앞의 책, p.9.

선거별	선거일	유권자 수						투표자수			
		총계	비율 (%)	여자	비율 (%)	남자	비율 (%)	총계	투표 율(%)	여자	남자
시의회 의원선거	52.4.25	1,111,849						891,728	80.2		
	56.8.8	1,578,678	100					1,256,048	79.6		
	60.12.19	1,995,994						1,249,254	62.6		
읍의회 의원선거	52.4.25	734,538						649,544	88.4		
	56.8.8		100								
	60.12.19	989,574						766,696	77.5		
면 의회 의원선거	52.4.25	5,689,917						5,295,226	93.1		
	56.8.8		100								
	60.12.19	7,128,216						5,968,736	83.7		
도의회 의원선거 서울시.	52.5.10	6,358,383	100					5,165,226	81.2		
	56.8.13	8,421,772	100					7,223,605	85.8		
	60.12.12	11,263,445	100					7,595,752	67.4		
시장선거	56.8.8	209,815	100					181,863	86.7		
	60.12.26	2,035,429	100					1,110,943	54.6		
읍장선거	56.8.8	1,021,388	100					742,897	72.7		
	60.12.26										
면장선거	56.8.8	7,228,937	100					5,898,365	81.5		
	60.12.26										
서울시장 도지사선거	60.12.29	11,343,336	100					4,399,420	38.8		
구. 시. 군 의회의원선거	91.3.26	28,301,580	100	14,338,949	50.7	13,962,631	49.3	13,237,093	55.0		
시. 도 의회의원선거	91.6.20	28,416,241	100	14,406,927	50.7	14,009,314	49.3	16,533,934	58.9		
제1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 도지사							21,227,449	68.4	68.2	69.3
	구. 시. 군 장							21,227,449	68.4		
	시. 도 의회의원	95.6.27	31,048,566	100	15,769,734	50.2	15,278,832	49.8	20,233,444	65.2	
	구. 시. 군 의회의원							20,001,522	64.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 도지사							17,155,577	52.7	52.1	54.3
	구. 시. 군 장								52.7		
	시. 도 의회의원	98. 6. 4	32,537,815	100	16,539,484	50.2	15,998,331	49.8	52.3		
	구. 시. 군 의회의원								53.2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 도지사										
	구. 시. 군 장										
	시. 도 의회의원	02. 6. 13	34,744,232	100	17,678,518	50.9	17,065,714	49.1	16,793,665	48.9	
	구. 시. 군 의회의원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선거 및 국민투표 통계집』, pp. 210-2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투표율 분석-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98.6.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98.7.21)』, p.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분석』, pp.3-4.

결론적으로 역대 각종 공직선거를 통해 본 남녀유권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00년 4월 13일 실시했던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여성유권자는 전체의 50.9%인 17,045,456명으로 남성유권자 16,436,931명(49.1%)에 비하여 1.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8년 6월 4일 실시했던 제2차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여성유권자수는 전체의 50.8%인 16,539,484명으로 남성유권자 15,998,331명(49.2%)에 비하여 1.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997년 실시되었던 15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여성유권자수는 전체의 50.8%인 16,418,262명으로 남성유권자 15,872,154명(49.2%)에 비하여 1.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996년 실시되었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수는 전체의 50.8%인 15,988,015명으로 남성유권자 15,490,279명에 비하여 1.6%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남녀유권자의 투표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종 공직선거 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먼저 2000년 4월 13일 실시하였던 16대 국회의원 선거의 남녀평균투표율은 57.2%이었고, 이중 남성투표율은 58.7%로 여성의 56.5%에 비해 2.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998년 실시되었던 제2차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남녀투표율은 남성이 54.3%로 여성의 52.1%에 비하여 2.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5대 대선의 경우에도 남성투표율은 81.3%로 여성의 80.1%에 비해 1.2%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남성투표율은 65.3%로 여성의 62.0%에 비해 3.3%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4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82.6%로 여성의 80.9%에 비해 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제14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남성투표율은 72.7%로 여성의 70.9%에 비해 1.8%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sup>15)</sup> 이처럼 최근 실시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성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투표율에 있어서는 20대 전반의 여성들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6대 총선의 경우에 있어 성별·연령별 투표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p. 9.

을에서는 60세 이상의 남자가 83.1%로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의 여자가 30.6%로 가장 낮았다. 이는 20대 전반의 남성투표율 49.1%에 비하여 18.5% 포인트 낮은 것이다. 그리고 1998년 실시한 제2차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연령별·성별 투표율에 있어 60세 이상의 남성투표율이 80.2%로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의 여성투표율이 27.0%로 가장 낮았다. 15대 대선인 경우 50대 남성 투표율이 90.8%로 가장 높았고, 20대 전반의 여성투표율이 61.2%로 가장 낮았다. 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은 50대 남성(83.9%)이었고, 가장 투표율이 낮았던 집단은 20대 전반의 여성(25.2%)이었다. 이는 20대 전반의 남성 투표율 42.1%에 비하여 16.9% 포인트 낮은 비율이었다.<sup>16)</sup> 그러나 16대 총선 결과 20대 후반 및 30대의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6대 총선에서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은 35.8%로 남성유권자의 투표율 32.6%에 비하여 3.2% 높았고, 30-34세의 경우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은 47.4%로 남성유권자 투표율 42.9%에 비하여 4.5% 포인트 높게 나타났으며, 35세-39세의 경우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은 57.7%로 남성유권자 투표율 55.3%에 비하여 2.4%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20대 후반 및 30대에 높은 것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로 자신들의 활동과 관련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sup>17)</sup>

결론적으로 남녀유권자들은 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순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남성의 투표율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았으나, 투표율에 있어 남녀간의 성차는 유권자 수적 측면에서는 여성이 약 2%가량 많았으나, 투표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약 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유도하기 위하여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pp. 9-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투표율 분석-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98.6.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98.7.21)』, p.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97.12.18 시행)』, pp. 11-12.

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앞의 책, p. 11.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투표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 나.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분석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1년 지방선거가 재개되면서 부터 각종 공직선거에 대한 투표율을 분석하고 유권자 정치의식을 조사하는 등의 선관위 활동과, 일부 여성단체와 여성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자료가 축적되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심지어 선관위나 학자들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을 별도로 심도 있게 하나의 중요변수로 분류하여 연구한 연구는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동안 연구되었던 논문을 중심으로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면서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여성유권자의 주체성의 확립과 관련하여 투표동기, 투표에서의 불참이유, 가족과의 상의 여부와 여성정치인에 대한 지지여부 및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1) 투표동기

유권자들은 남녀 공히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순으로 비중이 높은 선거일수록 관심이 많은데, 최근 들어와서는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유권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녀 공히 '투표하는 이유'로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가 많았다. 이는 1970년대나 현재나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조사에 의하면 남녀유권자들은 1970년대나 현재나 '남녀유권자의 투표동기'를 국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투표동기와 실제 투표행위와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다.

## 2) 투표불참 이유

우리나라 역대 각종선거에서 남녀유권자의 연령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50대~60대였고, 반대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집단은 20대로,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 투표 불참의 이유로 젊은 층은 남녀 모두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50대 층은 ‘생업에 바빠서’가 많았다. 1992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전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남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는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8)</sup><표 II-4>.<sup>19)</sup>

18) 이승희(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6집 제3호. 한국정치학회, pp. 213-214.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선거(2000.4.13)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p. 246.

<표 II-4> 16대 총선에서 기권한 이유

단위: %

구분		빈도수	백분율	찍을 후보가 없어서	누구를 찍으나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어서	국회의원/정치인에 기대할게 없어서	후보자중에서 누가 좋은 후보인지 몰라서	직업/생업으로 바빠서
전 체		324	100.0	21.9	9.6	21.0	15.4	32.1
성	남성	175	100.0	21.1	8.6	23.4	10.9	36.0
	여성	149	100.0	22.8	10.7	18.1	20.8	27.5
연령	20대	137	100.0	19.0	9.5	21.9	21.9	27.7
	30대	96	100.0	25.0	10.4	19.8	11.5	33.3
	40대	51	100.0	23.5	13.7	21.6	9.8	31.4
	50대	20	100.0	15.0	0	30.0	0	55.0
	60대 이상	20	100.0	30.0	5.0	10.0	20.0	35.0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2000. 4. 13 실시)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p.283.

그리고, 20대 전반의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하여서는, 물론 정치 이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정치참여의 방법이긴 하나, ‘알아서 불신하는 것’과 ‘개인사정에 의해 선거에 불참’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도 젊은 여성들의 정치투표율이 낮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해결해야할 여성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특히 젊은 층 여성유권자들의 투표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 후보 결정시 고려사항

우리나라의 남녀유권자들은 대부분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등 각급 선거에 있어 후보자 선택기준으로 ‘후보자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당’, ‘공약’ 등을 꼽는 경향이 강했다. 실

제, 1992년 제14대 대통령선거직후 이영란 교수가 전국의 1,200명의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투표의 기준으로 여성유권자나 남성유권자 모두가 '인물'(남성 47.7%, 여성 46.4%)을 가장 중시여기고 있었고, 그 다음이 '공약/정견'(남성 32.1%, 여성 30.3%), '정당'(남성 15.6%, 여성 1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20)</sup>

1996년 4월 11일 15대 총선 당일 조선일보의 의뢰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전국에서 투표한 남녀유권자 1,815명을 대상으로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성유권자 915명중 36.9%가, 여성투표자 901명중 30.3%가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후보자의 정당', '후보자의 공약', '같은 지역출신' 순으로 나타났다.<sup>21)</sup>

1997년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 직후 문화방송이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의 남성 728명, 여성 712명 총 1,439명의 투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대통령후보의 투표기준으로 남성 63.0%, 여성 68.0%가 '후보자의 인물/경력/능력'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공약'으로 남성 9.7%, 여성은 7.9%의 비율을 보여주었고 '정권교체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남성 9.3%, 여성 7.5%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을 이유로 투표하였다는 사람의 경우 남성은 2.4%, 여성은 2.7%로 낮게 나타났다.<sup>22)</sup>

1999년 백영옥 교수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의뢰로 전국의 1,2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투표시 후보자 선정기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질문에 응한 589명의 남성 중 55%와 611명의 여성 중 53%가 국회의원 투표시 '후보자의 인물과 경력'을 중시여기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남녀 공히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견', '후보자의 정당' 순으로 나타났다.<sup>23)</sup> 이들 연구를 통해 그 동안 여성들이 보다 인물 중심적인 투표행태를 보인다는 주장이 있어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향후

20) 정무장관(제2)실 (1994), 『한국 여성유권자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pp. 18-24.

21)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7),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행태』, p. 149.

22)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8), 『'97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pp. 342-343.

23) 백영옥(1999),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연구용역보고서(미간행), pp. 48-49.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로 나가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2000년 4월 13일 제16대 총선 이후 선관위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후보자 선정시의 기준을 알아본 결과 ‘후보자의 지지정당/정견’이 24.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지역발전 기대감’ 18.9%, ‘선관위 인터넷에 있는 후보자 신상자료’ 18.2%, ‘전문적인 능력/경력’ 17.2%, ‘정치적인 개혁성향’ 1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6대 총선에서는 과거의 선거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이 후보자 낙천대상자를 선정하고 후보자 전과기록, 후보자나 아들의 병역문제, 세금, 재산’ 등을 공개하였는데, 유권자들은 선정할 후보를 결정하는데 ‘시민단체 낙천대상자 여부’ 32.4%, ‘세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여부’ 21.6%, ‘전과여부/전과종류’ 19.5%, ‘본인/아들 병역문제’ 12.6% 등의 순으로 후보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성유권자의 경우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중시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여성응답자중 21.3%로 남성응답자 비율 1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학력별·직업별 통계는 없었는데, 이것이 비록 성차(Gender gap)는 아니더라도 여성유권자들이 보다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중시 여겼다는 측면에 있어 앞으로 성차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sup>24)</sup> 앞으로 여성의 학력이 보다 신장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될 전망이기에 앞으로는 여성정책을 중시여기는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남녀유권자의 후보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기존의 연구물을 살펴보면, 남녀유권자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정보원으로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였고,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공보·팜플렛’이었다. 그리고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 배포유인물’, ‘선관위 홍보물’로 나타났다. 실제 1995년 ‘6. 27 제1차 동시지방선거’이후 여성정치문화연구소에서는 당시 수도권 지역의 기초의회에 여성후보가 출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앞의 책, pp. 236-244.

마한 지역의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투표결정에 있어 영향을 받은 정보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원은 지역별, 성별, 학력별 등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후보자별 배포 유인물'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선관위 홍보물(26.0%)', 'T.V(13.9%)', '주위사람이나 이웃(9.9%)' 순이었다. 그리고, 제15대 총선 직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정보원을 조사했는데, 응답자중 남성 25.9%, 여성 35.1%가 '선거공보/팜플렛'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 다음으로 남성 14.2%, 여성 8.6%가 '신문/방송보도/토론'을 들었다. 그리고 제16대 총선 직후 선관위가 12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15대 총선 직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내용과 유사했다. 실제 16대 총선 이후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선관위가 배달한 홍보물'이 26.4%, 그 다음으로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내용' 20.5%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투표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친구·이웃과의 대화 내용'을 중시하였다고 한 응답자중 여성의 비율이 24.7%로 남성의 15.9%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sup>25)</sup>

제15대 대통령선거직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성 68.2%, 여성 68.6%가 '신문·방송보도·토론'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대통령선거에서 남녀유권자들은 '벽보·소개·팜플렛·선거공보'에 영향을 받는 정도가 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제14대 대통령선거 직후 이영란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태를 보인다. 동 연구에 의하면 대통령후보 결정에 있어 남성 42.2%, 여성 37.2%가 'TV'를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다른 선거와 비교하여 '후보별 배포유인물'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1994년에 공직선거법 제정 이후 1995년 '6. 27 제1차 동시 전국선거'부터 지방의회 후보자들이 공직선거에서 자신이 직접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는 명함형 인쇄물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주는 듯 하였다. 그러나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앞의 책, p. 237, p. 274.

이제 정보화 시대를 맞아 TV의 영향력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를 통하여 고비용의 선거문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언론들은 올바른 사회의식과 시민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평등한 성역할 관념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문제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공직선거에서 후보선택에 있어 여성유권자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순위는 14대 대선, 15대 총선, 15대 대선, 16대 총선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 여성들은 남성유권자에 비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영란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성유권자들은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TV’의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이 37.2%로 남성유권자의 42.2%에 비해 5%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여성 중 34.9%가 ‘가족’을 들고 있었는데, 이는 남성의 17.8%에 비하여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92년 제15대 총선 시 같은 조사에서도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22.4%로 일단 13대 대선에 비하여 낮아졌고, 남성의 10.7%에 비하여 1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영향을 많이 받은 가족구성원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구주(아버지)가 가장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2.1%로 가장 많았고, 30대 10.5%, 40대 5.9%, 5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15.9%로 남성 4.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sup>26)</sup> 1999년 백영옥 교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처음부터 같은 후보에 투표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여성 50%, 남성 50%이었지만, 여성들은 투표하는데 있어 ‘남편 및 가족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4%로, 남성의 6%에 비하여 18% 포인트 높았다.<sup>27)</sup> 그러나 제15대 대선 당시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26)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7), 앞의 책, p. 364.

27) 백영옥(1999), 앞의 논문, p. 51.

조사결과에 의하면 후보결정에 있어 '주변사람/가족/친척'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여성은 6.6%로 남성의 2.4%에 비해 줄어든 양태를 보였으나, 여성들은 아직 남성에 비해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그리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제16대 총선 이후 수도권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유권자의 경우 가족과 상의했다는 여성은 30%로 남자 2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지, 20대 남녀에게서만 차이가 있었다. 제15대 대선에서 나타났듯이 남녀간의 차이가 줄어든 것과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와 같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는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표했다는 비율이 80%에 달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은 투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학력과 사회참여가 신장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들은 후보결정에 있어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여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한 제16대 총선에서는 예외적으로 '후보자의 지지 정당'을 가장 중시여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선 당시 남북정상회담이 정치권의 호재로 나타나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지역감정만 부추기게 되어 유권자들은 '후보의 인물이나 경력'보다 '정당'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성유권자들의 학력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앞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로서 여권투표(Feminist vote)의 성향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4) 여성후보에 대한 지지여부

남녀유권자들은 여성후보자를 지지하는데 있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었으나, 여성의 영역을 가정으로 간주하는 이중적 의식구조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막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3

28)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8), 앞의 책, p. 347.

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제주도를 제외한 20세 이상 1000명(남자 491명, 여자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중 남성의 34.8%와 여성의 44.8%가 '여성의 정치참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남성의 56%와 여성의 47%가 '정치참여에 있어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남성의 89.2%와 여성의 88.8%가 '여성이 남성보다 정치적 능력이 있다면 지지하겠다'고 응답하여 원칙적으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당위성에 있어서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때 응답자들은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은 본질상 야심적이고 성공을 추구하며 여성은 본질상 집을 가꾸고 아이를 기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항목에 대해 남녀 모두 60-70% 찬성하였다. '능력 면에 있어서도 남성이 책임감이 높은 직업에 더 많은 자질을 갖고 있다'는 항목에 응답자들은 60%이상의 찬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응답자 40%정도는 '여성들이 공직을 가지면서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찬성을 보였다. 또한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정치에 더 적합하다'는 항목에 응답한 사람도 남성 61.3%, 여성 57.0%나 되었는데 이러한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의식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여성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는 달리 실제 투표하는데 있어 여성후보자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sup>29)</sup> 이는 다른 유권자의식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1999년 당시 백영옥 교수는 제16대 국회에서 여성후보자가 출마하면, 투표할 것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남녀를 떠나 인물, 능력, 자격 요건을 고려하여 투표하겠다'가 남성 88%, 여성 84%이었고 그 다음이 '남녀 평등을 위해 반드시 여성후보에 투표하겠다'가 여성의 경우 9%로, 남성의 4%에 비하여 높았다. 반대로 '여성은 한계가 있어 지지하지 않겠다'에 응답한 사람의 경우 남성 6%, 여성 3%로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후보들이 지

29)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3), 『한국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남녀비교 연구』, pp. 78-85.

지를 얻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지역활동 44%, 남성후보와 차별화된 선거운동이 25%, 정치경력과 정당공천이 각각 14%를 차지했다.<sup>30)</sup>

동아일보가 16대 총선을 앞두고 네티즌을 대상으로 '이번 국회의원에 여성후보가 나오면 지지하겠는가?'라는 온라인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태를 보였다. 2000년 3월 2일 현재 '여성후보 지지에 대한 질문'에 답한 1,785명의 응답자중 '여성과 남성에 관계없이 찍겠다'가 64%, '되도록 남성후보를 찍겠다'가 12%, '절대로 안 찍겠다'가 10.8%, '되도록 여성후보를 찍겠다'가 10.2%, '무조건 찍겠다'가 2% 수준이었다.<sup>31)</sup> 이는 전경옥 교수가 1999년도에 연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즉, '여성도 능력이 있으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질문에 남녀응답자들은 비슷한 지지도를 보냈다. 그러나, '여성들이 공직을 맡으면 좋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남성의 경우 43%가, 여성의 경우 33%가 '그렇다'고 응답해 남녀유권자들의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었다.<sup>32)</sup>

제16대 총선 이후, 수도권에서 여성이 출마한 지역의 남녀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다음 총선에 여성이 출마할 경우 남성의 85.3%, 여성의 90%가 '능력이 있는 후보라면 지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남녀유권자들은 여전히 남성의 경우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적합하다',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 등에 있어 고정관념이 높았고, 여성의 경우도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다', '아내가 남편보다 수입이 많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다'는 성역할에 있어 이중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같이 남녀유권자들의 성역할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이, 여성의 정계 진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제 투표하는데 있어 여성후보자를 배

30) 백영옥(1999), 앞의 논문, pp. 137-141.

31) 동아일보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http://www.donga.com>).

32) 전경옥·노혜숙·김영란(1999), 「여성의 정치적 권리인식과 정치참여」(서울: 집문당), pp. 115-118.

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의식교육의 확산과 함께 내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들이 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구 할당제와 광역의회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현재의 30%에서 50%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여성계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이유

유권자들이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능력이 있어서’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지역구활동을 평소에 해와서’ 등을 들고 있었다. 실제, 1995년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가 여성후보들이 출마한 지역구중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기초의회 선거에 여성후보가 출마한 지역을 선택하여 20세 이상의 남녀유권자 515명을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은 67명(13.0%)으로 여성이 39명(58.2%), 남성 28명(41.8%)으로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이유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29.8%), ‘그 동안의 지역봉사 활동으로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25.3%), ‘타후보 보다 정치경력이 뛰어나서’(22.8%), ‘후보가 참신하고 덕망이 높아서’(13.1%), ‘혈연, 지연, 학연 등 인간관계’(4.3%)의 순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여성후보가 당선된 자에 한해 ‘여성후보가 당선된 이유’도 여성후보에게 투표한 경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타후보 보다 정치경력이 뛰어나서’(32.2%), ‘그 동안의 지역봉사 활동으로 평소에 잘 알고 있어서’(23.6%), ‘후보자의 공약이 좋아서’(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16대 총선 이후 여성후보가 출마하였던 수도권지역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여성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조사해본 결과 여성의원이 5.9%(16명) 탄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서도 응답자중 남성 44.8%, 여성 41.2%가 ‘여성정치인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긍정적 인식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남성 25.0%가, 여성 34.6%

가 ‘능력 있는 여성후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여성후보가 당선된 지역의 경우 ‘평소부터 지역구 활동을 해와서’(35.4%), ‘소속 정당을 지지해서’(22.6%), ‘인물이나 정치경력이 뛰어나서’(2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물이나 정치경력이 부족해서’(32.4%)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여성유권자들이 여성을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손봉숙의 “6.27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의 연구에 의하면 1269명의 남녀응답자중 여성후보를 찍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7%로 낮았지만, 그중 여성응답자의 경우 여성후보를 지지했다는 사람이 31%로 남성의 23.9%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는 가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sup>33)</sup>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상 여성들이 정치에 나서기가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에 나서기를 희망하는 여성은 물론 여성단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여성을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정당의 경우 그 동안 여성정치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소극적이었다. 현재 정당들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여성정치인의 발굴과 육성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역대선거에서의 여성의 투표행태와 성차분석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여성의 투표행태와 성차와의 관계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투표율에 있어서 성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실제, 역대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에 비하여 2-3%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총선의 경우 1990년 이전에 남녀간의 투표율 차이는 3-4%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선거관심도의 측면에서는 성차는 1980년대까지의 여성이 남성보다 선거에 관심이 적은 경향성을 유지하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아

33) 손봉숙 편(2000), “6.27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 『'90년대의 여성정치』(서울: 도서출판 다해), p. 262.

직 정치관심도에 대한 성차는 존재하되 그 성차가 감소해 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1차 집단에 의해서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친구나 동료와 같은 2차 집단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에 의존하는 비주체적 정치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며, 그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여성의 투표행태를 재확인시켜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비주체적 정치문화를 극복하는 것은 여성투표, 나아가 여성주의 투표로의 진전을 위한 정초가 될 것이다.

셋째,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와 관련하여 그간의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들은 후보결정에 있어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 여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한 제16대 총선에서는 예외적으로 '후보자의 지지 정당'을 가장 중시여긴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여성개발원(2000년)이 16대 총선이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들에 비해 여성을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과거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는 가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여성유권자들의 학력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앞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로서 여권투표(Feminist vote)로의 전환을 위한 단초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선거문화의 개선과 함께 점차 금권, 관권, 조직의 힘이 약해지고 정책이나 이미지의 힘이 강해지는 추세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여진다.

### Ⅲ

.....

## 16대 대선과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결과 분석

---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47
2.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51
3.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도	75
4.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112
5. 소결 및 요약	125

---

---

## 1.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 가. 조사목적

2002년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년 6월 13일 실시)와 제16대 대통령선거(2002년 12월 19일 실시) 등 주요선거가 있었던 해이다.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는 5년간 국정을 운영할 국가지도자를 뽑는 선거임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선거운동 전부터 각종 이슈들로 후보자간 지지율의 변화가 심했다. 여기에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의 표심에 관심이 모아졌고, 여성들이 어느 정도의 투표율을 보일 것인지, 무엇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이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그 중에서도 정책투표에 대해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또한 본 조사·연구는 여성관련 정책 및 기획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여성유권자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고 남녀유권자를 조사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나. 조사내용

- 1)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남녀유권자의 관심 및 공명도인식
- 2)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결정요인
- 3) 남녀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 4) 남녀유권자의 정치 효능감
- 5) 남녀유권자의 이념적 성향

6)남녀유권자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7)남녀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요인

## 다. 조사설계 및 분석기법

조사설계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은 투표실시시점인 2002년 12월 19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이다. 총 조사응답자의 표본은 1,500명이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대면조사방법이며, 표집방법으로는 다단계 층화표집에 근거하였다.

조사기간은 2002년 대통령선거 실시 다음날인 1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조사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 및 분석기법으로는 SPSS통계프로그램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사용된 분석기법으로는 빈도분석, 교차분석의 pearson's chi-square 값, 회귀분석을 통한 비표준화 된 회귀계수, 또는 표준화 된 회귀계수(상관계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독립변수로는 성별, 단체가입여부, 연령, 학력, 소득 등으로 설정하고, 매개변수로는 정치적효능감의 정도, 정치인지도, 선거의 공정성 평가, 선거관심도,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정도 등이고, 종속변수로는 투표참여여부와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여부이다.

<표Ⅲ-1> 조사설계

구분	조사설계 세부내용
조사대상	- 2002년 12월 19일 현재 만 20세 이상 남·여 유권자
조사지역	- 전국 (제주도 제외)
조사기간	- 2002년 12월 20일 ~ 27일(8일간)
유효표본	- 총 1,500명
조사방법	-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 (face to face survey)
표집방법	- 다단계 층화 표집 (multi stage stratified sampling) - 인구수에 비례하여 1,500명의 표본을 전국에 배분한 뒤, 그 비율에 맞게 선거구를 추출
신뢰수준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오차 $\pm 2.5\%$ point
분석에 활용한 통계프로그램	- SPSS통계패키지 프로그램

## 라. 조사응답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0.7%, 남성이 49.3%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28.5%, 30대 25.5%, 20대 23.8%, 40대 22.2%로 전체연령층이 조사에 응답을 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재이상 40.1%, 고졸 37.3%, 중졸이하 22.0%이다. 연령, 학력에서 남녀간 분포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lt;표Ⅲ-2&gt;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학력)

구 분		응답자 수(비율)
1. 성 별	남 성	739명(49.3%)
	여 성	761명(50.7%)
2. 연 령 별	20 대	357명(23.8%)
	30 대	382명(25.5%)
	40 대	333명(22.2%)
	50대 이상	428명(28.5%)
3.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명(22.0%)
	고졸 이하	560명(37.3%)
	대재 이상	602명(40.1%)
	무 응 답	8명(0.6%)
계		1,500명(100.0%)

직업별로는 가정주부가 19.0%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영업 18.0%, 화이트칼라 14.0%, 학생 11.9%, 전문직 7.0%로 다수이고, 나머지는 무직, 블루칼라, 농림어업 등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 성별로 분리하면, 여성응답자의 경우 761명의 응답자 중 가정주부가 282명으로 가장 많은 37.1%이며, 다음으로는 자영업 113명(14.8%), 학생 79명(10.4%), 무직 76명(10.0%) 등이다. 남성의 경우는 전체응답자 739명 중 자영업 157명(21.2%), 화이트칼라 154명(20.8%), 학생 100명(13.5%), 그리고 기타 67명, 무직 64명으로 자신의 직업을 표기하였다(부표참조). 월평균 소득별로는 150~300만원이 44.7%이 다수이며, 150만원미만 32.5%, 300만원이상 18.5%로 구성되어 있다. 소득에서 남녀응답의 분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는 자신의 소득이 아닌 가계소득을 응답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지역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조사지역별로는 인천/경기지역(25.0%)과 서울지역(22.3%),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48.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단체가입여부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이 34.7%로 나타났다.

<표Ⅲ-3> 응답자 특성(직업, 소득, 지역, 도시규모, 단체가입여부)

구 분		응답자 수(비율)
직 업 별	전 문 직	105명(7.0%)
	공 무 원	28명(1.9%)
	화이트칼라	210명(14.0%)
	자 영 업	270명(18.0%)
	판매/서비스직	32명(2.1%)
	블 루 칼 라	67명(4.5%)
	농 임 어 업	66명(4.4%)
	학 생	179명(11.9%)
	가 정 주 부	285명(19.0%)
	무 직	97명(9.3%)
소 득 별	기타 / 무응답	161명(7.9%)
	150만원 미만	487명(32.5%)
	150~300만원	670명(44.7%)
	300만원 이상	278명(18.5%)
지 역 별	무 응 답	65명(4.3%)
	서 울	335명(22.3%)
	인천 / 경기	375명(25.0%)
	강 원	49명(3.3%)
	대전 / 충청	151명(10.1%)
	광주 / 전라	171명(11.4%)
	대구 / 경북	169명(11.2%)
도시규모별	부산/경남/울산	250명(16.7%)
	대 도 시	730명(48.7%)
	중 소 도 시	607명(40.4%)
단체가입여부	군 지 역	163명(10.9%)
	가 입	520명(34.7%)
	미 가 입	980명(65.3%)
계		1,500명(100.0%)

## 2.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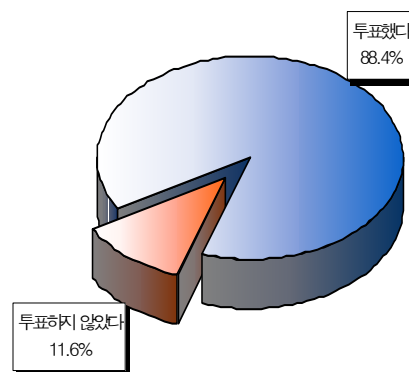
### 가. 투표참여분석

투표행태라 함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이 보이는 태도와 행위의 총합을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심사가 투표참여 여부이다. 즉 일차

적으로 “누가, 왜 투표를 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다른 하나는 투표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무엇 때문에,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특정후보에게 표를 던지는가”하는 것이다.<sup>34)</sup> 이 연구는 우선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성별의 영향력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투표참여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견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투표행태 연구에서는 그러한 가설을 뒷받침하지 않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왔다. 즉 14대 국회의원 총선거후의 설문조사 결과분석<sup>35)</sup>과 제14대 대통령 선거후의 설문조사 결과분석<sup>36)</sup>을 통해 남녀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림Ⅲ-1>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 (전체)



그러면 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참여의 성차를 살펴보자. 먼저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를 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34) 김욱, “투표참여와 기권: 누가, 왜 투표하는가,”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푸른길,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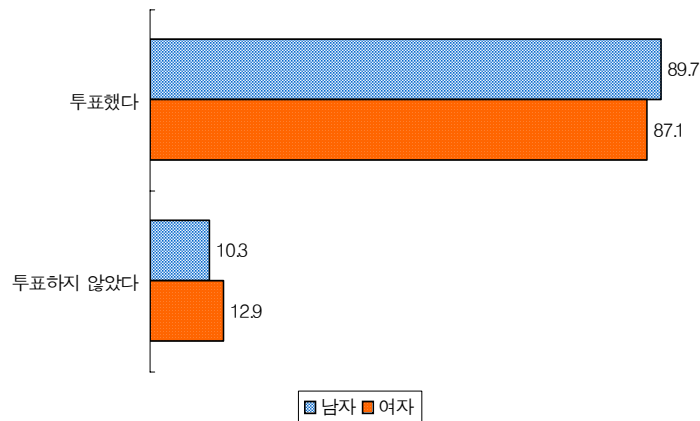
35) 이남영, “투표참여와 기권: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1993).

36) 이남영, “성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14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11권 1호(1995).

‘투표했다’는 의견은 88.4%인 반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11.6%로 나타나 실제 투표율 70.8%보다 높게 조사되었다(그림 III-1 참조). 이는 선거후 조사라는 점과 대인면접조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양심적 보상을 위한 자구책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투표했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직업별로 ‘농림어업’(98.5%), 지역별로 ‘광주/전라’(9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지역별로는 ‘대전/충청’(1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투표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보면, ‘투표했다’는 의견이 남자가 89.7%로 여자(87.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투표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남자가 10.3%, 여자가 12.9%로 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2 참조). 투표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한 결과 투표여부에 대한 성차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그림III-2>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여부 (성별)



그러면 왜 투표율에 있어서 성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우선 여타의 사회경제적 변수를 투표참여여부와 교차분석해 보았다(표 III-4 참조).

분석결과 연령변수와 지역변수가 투표참여와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투표율은 82.1%인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93.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즉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조사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는 전국을 8대권역으로 나누어 볼 때, 광주/전라 지역이 94.7%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이 91.1%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는 이번 선거도 영호남간 지역의식이 작용하였고, 과도한 지역대결 구도 및 경쟁의식이 투표율 자체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남녀의 성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영남에서는 이회창 후보를, 호남에서는 노무현 후보를 밀어주자는 동조투표에의 압력이 다른 지역보다 심했으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조투표에의 압력은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잘 적용한다는 가정<sup>37)</sup>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투표참여에서의 성차를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37) 이남영(1995), p.41.

<표Ⅲ-4>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투표참여 여부

구 분		사례수 (명)	투표여부		Pearson's $\chi^2$ (P)
			투표했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1,500)	88.4	11.6	
성별	남자	(739)	89.7	10.3	2.459 (.117)
	여자	(761)	87.1	12.9	
연령별	20대	(357)	82.1	17.9	25.590 (.000)
	30대	(382)	87.4	12.6	
	40대	(333)	89.8	10.2	
	50대 이상	(428)	93.5	6.5	
학력별	중졸 이하	(330)	91.2	8.8	4.511 (.211)
	고졸 이하	(560)	87.3	12.7	
	대재 이상	(602)	87.7	12.3	
	무응답	(8)	100.0	0.0	
직업별	전문직	(105)	89.5	10.5	12.906 (.300)
	공무원	(28)	92.9	7.1	
	화이트칼라	(210)	85.7	14.3	
	자영업	(270)	88.1	11.9	
	판매/서비스	(32)	87.5	12.5	
	블루칼라	(67)	88.1	11.9	
	농림어업	(66)	98.5	1.5	
	학생	(179)	87.2	12.8	
	가정주부	(285)	87.7	12.3	
	기타	(97)	92.8	7.2	
	무직	(140)	85.7	14.3	
	무응답	(21)	95.2	4.8	
소득별	150만원 미만	(487)	88.1	11.9	5.450 (.142)
	150~300만원	(670)	88.5	11.5	
	300만원 이상	(278)	86.7	13.3	
	무응답	(65)	96.9	3.1	
지역별	서울	(335)	88.7	11.3	14.981 (.020)
	인천/경기	(375)	86.7	13.3	
	강원	(49)	89.8	10.2	
	대전/충청	(151)	82.1	17.9	
	광주/전라	(171)	94.7	5.3	
	대구/경북	(169)	91.1	8.9	
	부산/울산/경남	(250)	88.0	12.0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87.5	12.5	2.007 (.367)
	중소도시	(607)	88.6	11.4	
	군지역	(163)	91.4	8.6	

그러나 여성들의 동원투표와 비주체적 투표행태가 점차 감소하면서 남녀간에 평준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남녀간의 투표참여율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sup>38)</sup> 1987년 조사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표 동원화가 여성쪽이 더 쉬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조사에서 여성의 투표율이 낮아져 남녀간에 평준화가 이루어진 것은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표 동원화가 어려워 졌기 때문이라는 분석과 함께, 투표동기가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들이 하니까” 또는 “주위의 권유에 이끌려”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고 주체적 투표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sup>39)</sup>

그러나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여타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력별 차이는 중졸이하에서 다소 투표율이 높으나 고졸이하와 대재 이상에서는 각각 87.3%, 87.7%로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아울러 직업별로는 농림어업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98.5%), 다음으로 공무원이 92.9%로 높게 나타났으나 여타의 직업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p>.05$ ). 아울러 소득별 차이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즉 직업, 교육, 소득수준은 정치참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배치되어 주목된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모델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 정치에 참여할 욕이 높으며, 정치에 더 큰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up>40)</sup>

38) 어수영·곽진영,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한국정치학회보』 35집4호(2001), pp. 173-174.

39)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남녀 비교 연구』 (1993).

40)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pp. 63-79; Campbell et al, *American Voter*(New York: John Wiley, 1960), pp. 473-483.

특히 교육변수는 성별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변인으로서 많은 연구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sup>41)</sup> 이들은 성별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높음을 발견하고 이들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성별 교육정도의 차이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졸이하의 경우에 남성이 35.8%, 여성이 64.2%로 약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며, 고졸이하에서도 남성이 48.0%, 여성이 52.0%로 여성쪽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재이상의 학력에서는 남성이 58.1%, 여성이 41.9%로 고학력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표III-5> 성별과 교육 교차분석표

단위:%

	남자	여자	Pearson's $\chi^2$ (P)
중졸이하	16.0	27.9	45.281(.000)
고졸이하	36.4	38.2	
대재이상	47.4	33.1	
무응답	0.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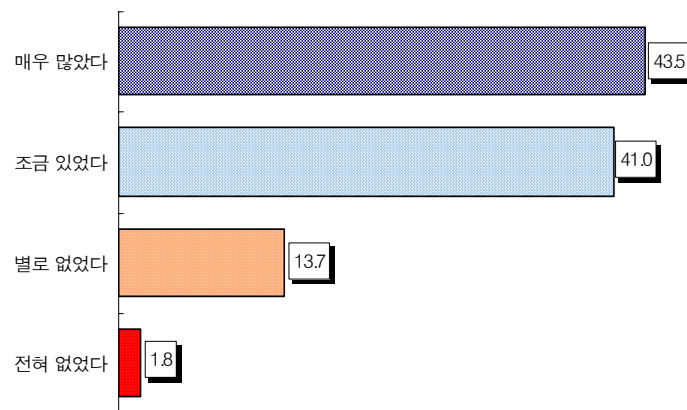
다음으로 심리적 변수로서 정치적 관심이 증가하고, 정치적 효능감이 증대하고, 정치적 인지수준이 높아질수록 참여수준이 높아진다는 경험적 연구가 많이 있다.<sup>42)</sup> 먼저 선거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는 선거관심변수이다. 일반적으로 선거관심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선거에 관한 정보획득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선거이슈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당이나 후보자의 특징을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거관심이 전제되어

41) 한배호 · 어수영,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1987), p.210; 이남영 (1995), p.41.

42)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78); Margaret Conway,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Washington D.C.: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91).

야 한다. 또한 똑같이 투표를 할 경우에도 선거에 관심있는 사람과 무관심한 사람과의 행태는 다르다는 것이다. 즉 전자는 능동적 투표일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동원투표이거나 동조투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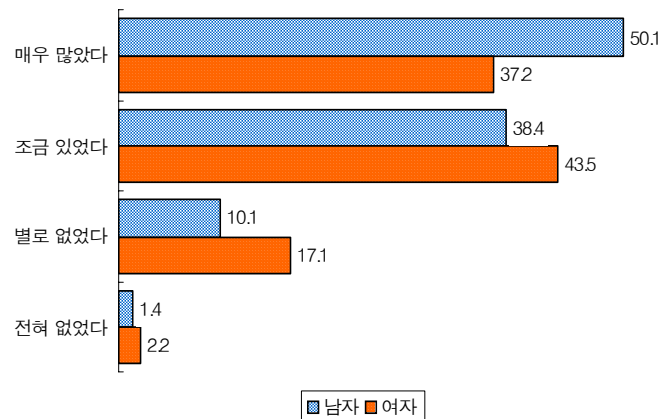
<그림Ⅲ-3>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전체)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살펴보면(그림 Ⅲ-3 참조),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은 84.5%(‘매우 관심이 많았다’ 43.5%, ‘조금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은 41.0%)인 반면, ‘관심이 없었다’는 의견은 15.5%(‘전혀 관심이 없다’ 1.8%, ‘별로 관심이 없다’ 13.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관심 있었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공무원(92.8%), 블루칼라(9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관심 없었다’는 의견은 학력별로 ‘중졸이하’(23.6%), 직업별로 ‘판매/서비스직’(40.6%), ‘경영/관리직’(55.6%),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0%)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심도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이 남자가 88.5%로 여자(8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4 참조). 선거관심도와 성별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선거관심도에 대해 성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그림 III-4>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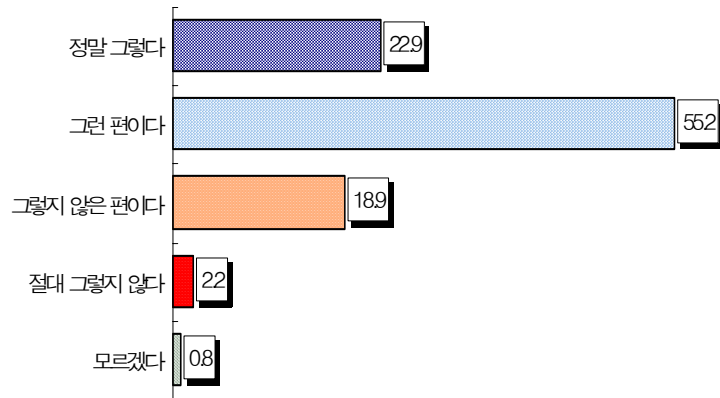
위의 그림은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관심층, 즉 ‘매우 많았다’는 의견은 남성이 50.1%, 여성이 37.2%로 큰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거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별로 없었다’와 ‘전혀 없었다’ 포함)은 남성이 11.5%, 여성이 19.3%로 여성 쪽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의 연구들과 일치하는 발견이다.

다음으로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자.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은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느낌의 정도로 알아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8.1%(‘정말 그렇다’ 22.9%, ‘그런 편이다’ 55.2%)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21.1%(‘그렇지 않은 편이다’ 18.9%, ‘절대 그렇지 않다’ 2.2%)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그림 III-5 참조).

응답자 특성을 분석하여 보면,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그렇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61.6%), 직업별로 ‘전문직’(63.8%),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62.0%)에서 ‘그런 편이다’라는 의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농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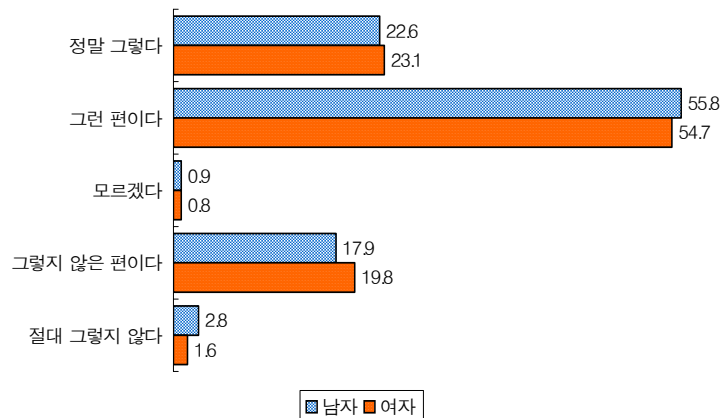
업'(7.6%)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25.4%)에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5>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효능감)에 대해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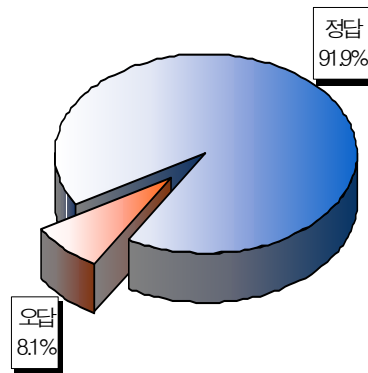
효능감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있다'는 의견은 여자가 24.9%로 남자(15.5%)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6 참조). 효능감에 대한 성별 chi-square를 보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Ⅲ-6> 정치 효능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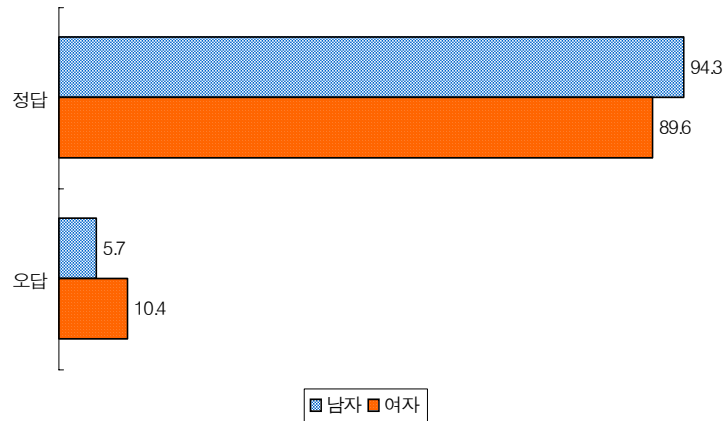
또한 유권자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와 ‘광역단체장’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인지를 물어 면접원에게 그에 대한 정답 여부를 기재토록 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가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8.1%만이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7 참조).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96.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직업별로는 ‘무직’(1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7>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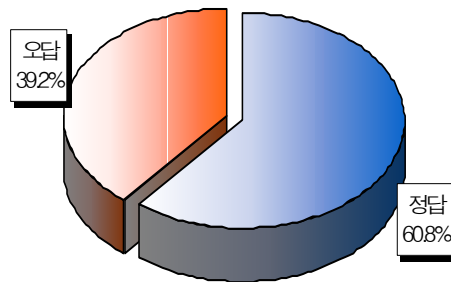
이어서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임기를 정확하게 답변한 비율이 남자가 94.3%로 여자(8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Ⅲ-8 참조).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해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인지에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lt;그림Ⅲ-8&gt;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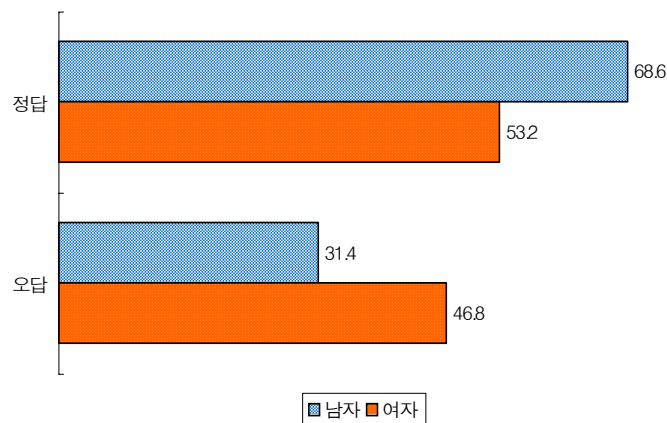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장 인지여부에 대해 알아보았다.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물어 면접원에게 그에 대한 정답여부를 기재토록 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39.2%는 틀린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9 참조).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자'(68.6%), 연령별로는 '40대'(74.5%), 직업별로는 '공무원'(71.4%), '화이트칼라'(69.5%), '자영업'(66.3%), 지역별로는 '서울'(76.7%), '대전/충청'(70.9%), '대구/경북'(70.4%), '강원'(67.03%),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6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자'(46.8%), 연령별로는 '20대'(48.2%), '50대 이상'(44.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50.0%), '농림어업'(47.0%), '가정주부'(47.0%),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9.6%), '인천/경기'(55.7%),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9>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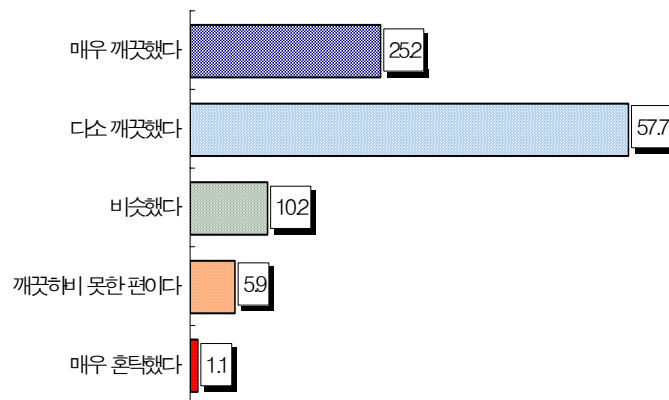
이를 다시 성별로 분석해 보면, 해당 광역단체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답변한 비율이 남자가 68.6%로 여자(53.2%)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Ⅲ-10 참조). 광역단체장 인지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Ⅲ-10>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성별)



다음으로 이번 선거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지난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비교해볼 때, 이번 선거가 깨끗했는지에 대해 ‘깨끗했다’는 의견이 82.9%(‘매우 깨끗’ 25.2%, ‘대체로 깨끗’ 57.7%)로, ‘흔탁했다’는 7.0%(‘매우 흔탁’ 1.1%, ‘대체로 흔탁’ 5.9%)의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그림 III-11 참조).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깨끗했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농림어업’(90.9%), 지역별로는 ‘광주/전라’(9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깨끗했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별로는 ‘중졸이하’(40.3%), 직업별로는 ‘농림어업’(53.0%), ‘블루칼라’(34.3%), ‘무직’(32.1%), 지역별로는 ‘광주/전라’(49.7%), ‘강원’(34.7%), 도시규모별로는 ‘군지역’(34.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흔탁했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공무원’(14.3%), ‘판매/서비스직’(12.5%), ‘화이트칼라’(10.4%),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14.0%), ‘강원’(1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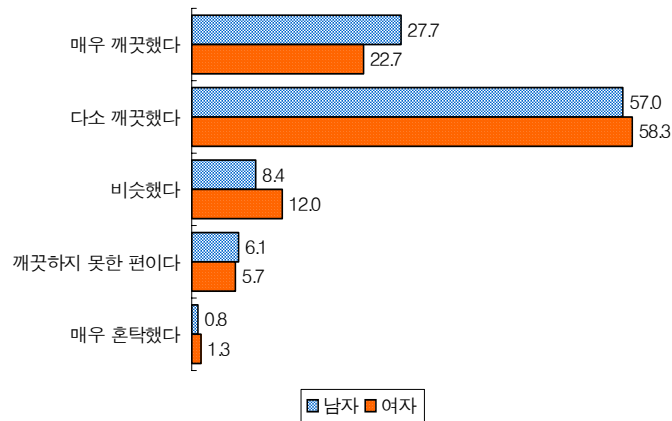
<그림 III-11>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전체)



공정성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깨끗했다’는 의견이 남자가 84.7%로 여자(81.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III-12 참조). 이러한 차이는 교차분석결과(Pearson’s Chi-Square 값 9.542),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

이 0.049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그림Ⅲ-12> 「제16대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성별)



지금까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투표행태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변수에 대한 설명은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다. 단 인지도는 ‘대통령 임기 인지 여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인지 여부’를 이용하여 둘 다 인지=‘상’, 둘 중 하나만 인지=‘중’, 인지도사항이 없는 경우=‘하’로 조정(recode)하였다. 또한 정책투표 여부의 경우, 지지후보 결정기준에서 ‘정책/공약’이라는 보기를 선택한 경우 ‘정책투표’로 조정하였다. 기본적인 인구통계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각 변수값은 표 Ⅲ-6 참조). 주요 변수들의 성별대비 교차표는 아래 표와 같다(표 Ⅲ-7).

&lt;표Ⅲ-6&gt; 경로분석을 위한 인구통계변수의 변수값지정

구 분		변수값	구 분		변수값
성 별	남 자	1	학력별	무 응 답	0
	여 자	2		중졸 이하	1
단체가 입여부	미 가 입	0		고졸 이하	2
	가 입	1		대재 이상	3
연령별	무 응 답	0	소득별	무 응 답	0
	20 대	1		150만원 미만	1
	30 대	2		150~300만원	2
	40 대	3		300만원 이상	3
	50대 이상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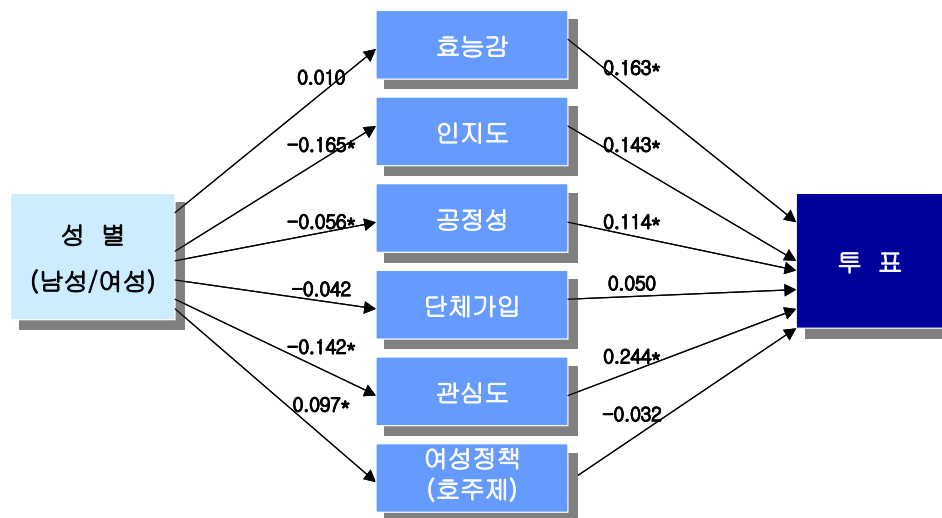
&lt;표Ⅲ-7&gt; 경로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성별 구성비

구 분			사례수 (명)	성 별	
변 수 명		변수값		남자 (%)	여자 (%)
1. 효능감	정말 그렇다	5	(343)	48.7	51.3
	그런 편이다	4	(828)	49.8	50.2
	그렇지 않은 편이다	2	(283)	46.6	53.4
	절대 그렇지 않다	1	(33)	63.6	36.4
	모르겠다	3	(13)	53.8	46.2
2. 인지도	인지 上	3	(883)	56.2	43.8
	인지 中	2	(525)	40.4	59.6
	인지 下	1	(92)	33.7	66.3
3. 공정성	매우 공정	5	(378)	54.2	45.8
	대체로 공정	4	(865)	48.7	51.3
	비슷	3	(153)	40.5	59.5
	대체로 혼탁	2	(88)	51.1	48.9
	매우 혼탁	1	(16)	37.5	62.5
4. 관심도	매우 많았다	4	(653)	56.7	43.3
	조금 있었다	3	(615)	46.2	53.8
	별로 없었다	2	(205)	36.6	63.4
	전혀 없었다	1	(27)	37.0	63.0
5. 투표여부	투표했다	1	(1326)	50.0	50.0
	투표하지 않았다	0	(174)	43.7	56.3
6. 정책투표 여부	비정책투표	0	(1015)	49.6	50.4
	정책투표	1	(311)	51.4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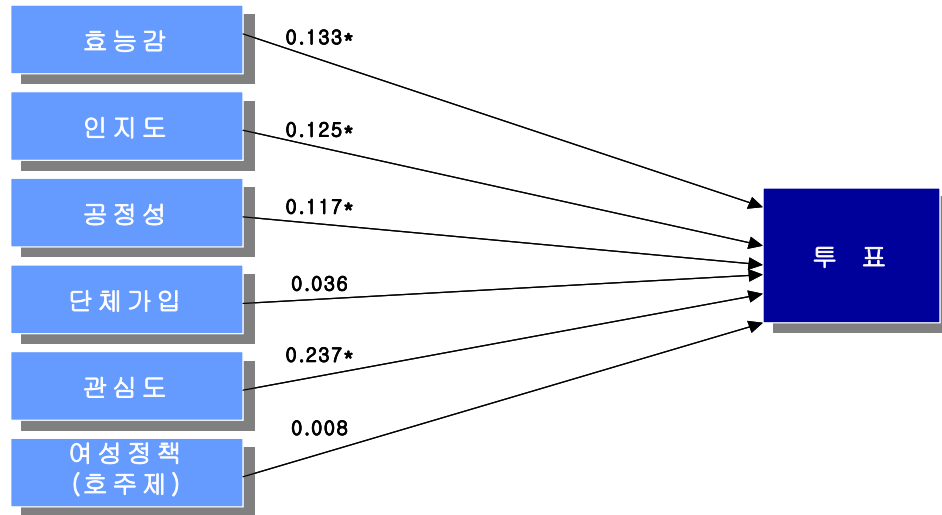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그림 Ⅲ-13, 14, 15 참조).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6가지 변수가 성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투표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및 여성정책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정책 변수만이 여성과 정상관성(여성일수록 호주·호적제 폐지에 찬성)을 가지며, 나머지 세 변수는 남성과 정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섯 변수 중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이것은 성차이를 불문하고 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는 투표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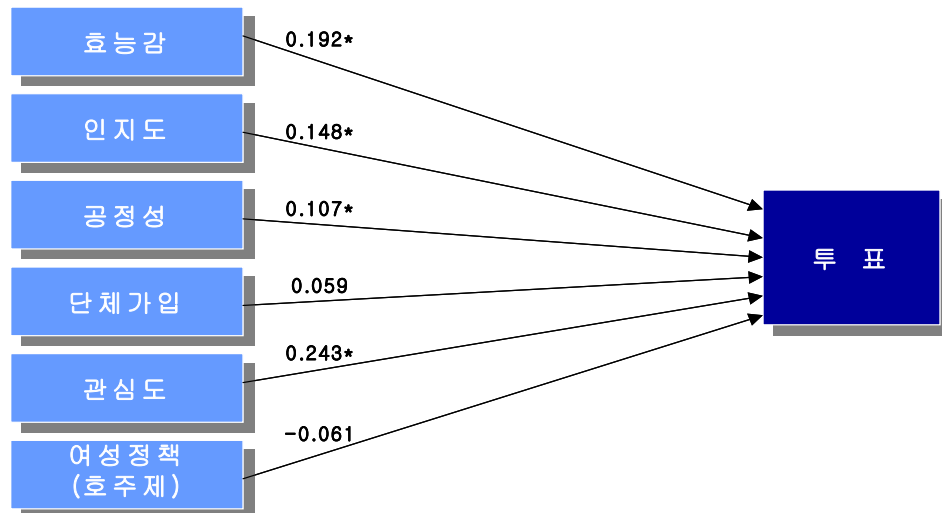
<그림Ⅲ-13> 투표행태 경로분석 (성별)



<그림Ⅲ-14> 투표행태 경로분석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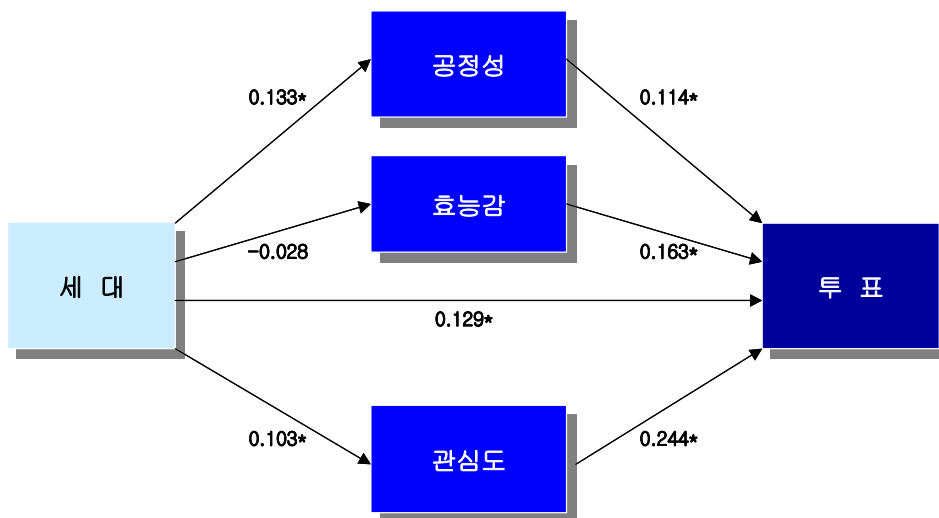


<그림Ⅲ-15> 투표행태 경로분석 (여자)



한편 세대와 투표행태는 정 상관성(나이가 많을수록 투표를 많이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정성, 관심도와 세대간의 정 상관성을 가지면서, 투표행태와도 통계적 유의미성을 보임으로써, 세대별 투표행태는 공정성과 관심도라는 두 변수와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Ⅲ-16>투표행태 경로분석 (세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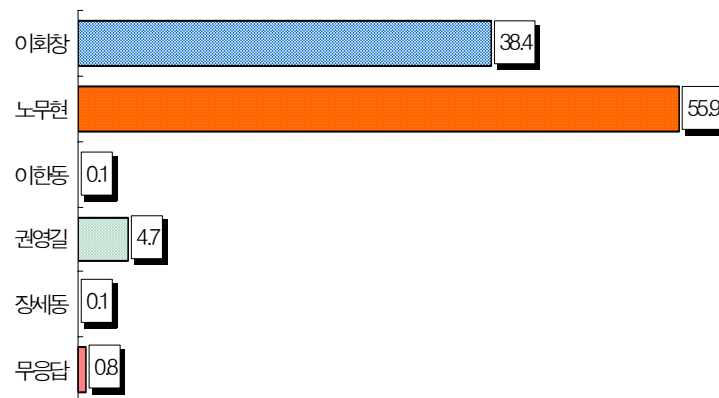


## 나. 지지후보 비교

다음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남녀의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자.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회창'을 찍었다는 응답은 38.4%인 반면, '노무현'을 찍었다는 의견은 55.9%로 나타나 실제 투표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선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장되어 나타나며, 낙선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소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노무현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48.9%인데 설문조사에서는 55.9%로 나타나고 이회창후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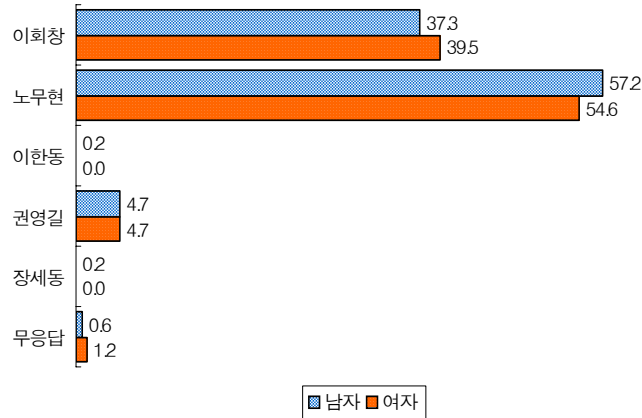
경우는 실제 46.6%인데 조사에서는 38.4%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선거후 조사라는 점과 당선자 편에 서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한동’을 찍었다는 응답은 0.1%, ‘권영길’을 찍었다는 응답은 4.7%, 장세동을 찍었다는 응답도 0.1%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III-17 참조).

<그림 III-17>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대상 (전체)



지지후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견이 남자가 57.2%, 여자가 54.6%로 여자 보다 남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견은 남자가 37.3%, 여자가 39.5%로 나타나 여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투표대상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한 결과 Pearson’s Chi-Square 값은 4.165이며, 이는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52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Ⅲ-18>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 대상 (성별)



그러면 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은 지지후보 선택에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sup>43)</sup> 첫째, 지역동조 투표의 압력을 들고 있다. 지역균열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은 각 정당에 대한 동조투표 압력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그러한 압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러한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선거를 치르는 정당과 후보자 측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각 정당은 선거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표밭으로 충청권을 지목하였고, 또 그기에 공을 들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기타지역은 대체로 균열이 드러나 있고, 수도권외의 경우 부동산 공약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결국 충청권이 판세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었고, 그러한 분석은 실제 선거에서 패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의 평가에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변수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변수를 중심으로 고찰해보기로 한다. 먼저 양변인 분석을 통하여 전체후보의 지지를 비교하고 이어서 다변인 분석을 통하여 노무현후보 지지에 영향을 미

43) 이남영(1995), pp.46-49.

친 변수들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양변인 분석을 통해서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 학력, 직업, 지역, 도시규모 변수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Ⅲ-8 참조). 그러나 성별변수와 소득변수는 지지후보 선택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러한 양변인 분석으로는 변수간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도록 유도해낸 영향력 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고려한 변수는 위에 양변인 분석에서 검토한 7개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Ⅲ-8>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지지후보 선택

단위:%

구 분		사례수 (명)	투표대상						$\chi^2(P)$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무응답	
전 체		(1,326)	38.4	55.9	0.1	4.7	0.1	0.8	4.165 (.526)
성별	남자	(663)	37.3	57.2	0.2	4.7	0.2	0.6	
	여자	(663)	39.5	54.6	0.0	4.7	0.0	1.2	68.617 (.000)
연령 별	20대	(293)	24.6	67.6	0.0	7.2	0.0	0.7	
	30대	(334)	32.6	61.1	0.0	6.0	0.0	0.3	
	40대	(299)	44.8	48.5	0.3	4.7	0.0	1.7	
	50대 이상	(400)	48.5	48.5	0.0	1.8	0.3	1.0	
학력 별	중졸 이하	(301)	45.5	51.2	0.3	1.3	0.3	1.3	43.023 (.000)
	고졸 이하	(489)	39.3	53.2	0.0	6.5	0.0	1.0	
	대재 이상	(528)	33.1	61.7	0.0	4.5	0.0	0.6	
	무응답	(8)	62.5	12.5	0.0	25.0	0.0	0.0	
직업 별	전문직	(94)	34.0	61.7	0.0	4.3	0.0	0.0	88.568 (.003)
	공무원	(26)	34.6	53.8	0.0	7.7	0.0	3.8	
	화이트칼라	(180)	41.1	53.9	0.0	4.4	0.0	0.6	
	자영업	(238)	42.4	52.9	0.0	3.8	0.0	0.8	
	판매/서비스	(28)	42.9	50.0	0.0	7.1	0.0	0.0	
	블루칼라	(59)	39.0	55.9	0.0	3.4	0.0	1.7	
	농임어업	(65)	29.2	66.2	0.0	3.1	0.0	1.5	
	학생	(156)	19.2	72.4	0.0	8.3	0.0	0.0	
	가정주부	(250)	40.8	50.8	0.0	6.4	0.0	2.0	
	기타	(90)	40.0	56.7	1.1	2.2	0.0	0.0	
	무직	(120)	50.0	48.3	0.0	0.0	0.8	0.8	
	무응답	(20)	55.0	35.0	0.0	10.0	0.0	0.0	

계속

구 분		사례수 (명)	투표대상						$\chi^2(P)$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무응답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29)	38.7	55.2	0.2	4.9	0.2	0.7	14.570 (.483)
	150~300만원	(593)	39.6	54.3	0.0	5.2	0.0	0.8	
	300만원 이상	(241)	38.6	56.4	0.0	3.7	0.0	1.2	
	무응답	(63)	23.8	73.0	0.0	1.6	0.0	1.6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29)	38.7	55.2	0.2	4.9	0.2	0.7	14.570 (.483)
	150~300만원	(593)	39.6	54.3	0.0	5.2	0.0	0.8	
	300만원 이상	(241)	38.6	56.4	0.0	3.7	0.0	1.2	
	무응답	(63)	23.8	73.0	0.0	1.6	0.0	1.6	
지역 별	서울	(297)	39.1	57.9	0.0	2.7	0.0	0.3	251.108 (.000)
	인천/경기	(325)	33.5	60.6	0.0	4.6	0.0	1.2	
	강원	(44)	36.4	50.0	0.0	13.6	0.0	0.0	
	대전/충청	(124)	32.3	63.7	0.8	3.2	0.0	0.0	
	광주/전라	(162)	.6	95.1	0.0	1.9	0.0	2.5	
	대구/경북	(154)	66.9	28.6	0.0	3.2	0.0	1.3	
	부산/울산/경남	(220)	56.4	33.2	0.0	9.5	0.5	0.5	
도시 규모 별	대도시	(639)	43.5	51.0	0.2	4.9	0.0	0.5	20.323 (.026)
	중소도시	(538)	34.4	59.3	0.0	4.8	0.2	1.3	
	군지역	(149)	30.9	64.4	0.0	3.4	0.0	1.3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 <표 III-9>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무현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지역 변수와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유권자의 지역변수가 노무현후보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광주/전라 지역 유권자의 적극적인 지지와 경상지역 유권자의 반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점에서 이번 선거 역시 지역동조투표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연령변수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세대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였다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세대요인의 영향력은 지역주의 요인과 비교한다면 약한 것이지만 여타 요인보다는 강하다는 것이다.<sup>44)</sup> 그 외에 소득, 성

44) 이남영(1995), pp. 47-48; 정진민, “한국사회의 세대문제와 선거,”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1993).

별, 학력, 도시규모 등의 변수는 노무현 후보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역과 세대간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Ⅲ-9> 지지후보 결정 변수(회귀계수)<sup>45)</sup>

구분	노무현 지지
지역	-.335**
소득	-.024
학력	.042
도시규모	.019
성별	-.028
연령	-.079*

\*: p<.01    \*\*:p<.001

둘째, 남녀간의 성차에 호소하는 의제가 선거과정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이남영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남녀를 가르는 의제가 주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노무현/정몽준 선거공조(19.9%), 행정수도 이전(18.7%), 북한 핵시설 재개(11.5%) 등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여성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응집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셋째,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견을 쫓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혼전에는 부친의 영향, 결혼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는

45) 각 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

노무현 후보지지: 노무현후보 투표=1, 기타후보 투표=2

지역변수: 진라=1, 충청=2, 기타지역=3, 경상=4

교육변수: 중졸이하=1, 고졸이하=2, 대재이상=3

도시화: 대도시=1, 중소도시=2, 군지역=3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1, 150-300만원=2, 300만원 이상=3

연령변수: 20대=1, 30대=2, 40대=3, 50대 이상=4

성별변수: 남자=1, 여자=2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정치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주체적 투표행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sup>46)</sup>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3.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정치적 관심이 낮고 정치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며 정치적 견해가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 좀더 구체적으로 지지후보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가족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성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책적 관심보다는 인물중심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많이 줄어들고 있음이 연구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비키 랜달은 정치적 태도나 정치참여 형태에 관한 성차연구에서 여성의 정치적 태도를 5가지 유형<sup>47)</sup>으로 일반화하여 제시하면서 1980년대에 지나면서 성차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연구한 논문들에 의하면 투표행태에 있어서 성차는 상당히 줄어들었다<sup>48)</sup>

선거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그 성차는 적으며 1997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 성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고 세계적으로도

46)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3).

47) ① 여성의 정치적 행위는 남성에게 지배된다

② 여성은 보수적이다

③ 여성은 정치를 개인화한다.

④ 여성은 도덕적이다.

⑤ 여성은 비정치적이다.

(Vicky Randall, 김민정 외역, 『여성과 정치』 (서울: 풀빛, 2000) pp.48-59)

48) 김현희, “대안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그 가능성 연구 -1990년대 여성의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1999년 가을호 ; 오유석, “4·13총선과 여성 유권자의 정치행태” 『동향과 전망』 2000년 여름호 참조

정치관심도 및 선거관심도에 있어서 성차의 의미는 사라지고 있다.

한편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서구와 비교하면 인물지향적 성격이 비교적 강하다. 남녀 유권자를 막론하고 한국유권자들은 정책이나 정당 혹은 공약보다는 후보자의 인물 및 경력에 더 많이 의존하는 투표행태를 보여준다. 이것은 선거가 정당중심으로 진행되고 정당이 대중정당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유권자들의 정당 일체감이 높은 국가들에 비해 한국은 선거가 인물중심적 성향이 강하고 정당도 인물정당의 성격이 강하며 정당에 대한 일체감보다는 지역적 혹은 다른 요인에 더 많이 의존하는 정치문화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가. 정치적 관심도에서의 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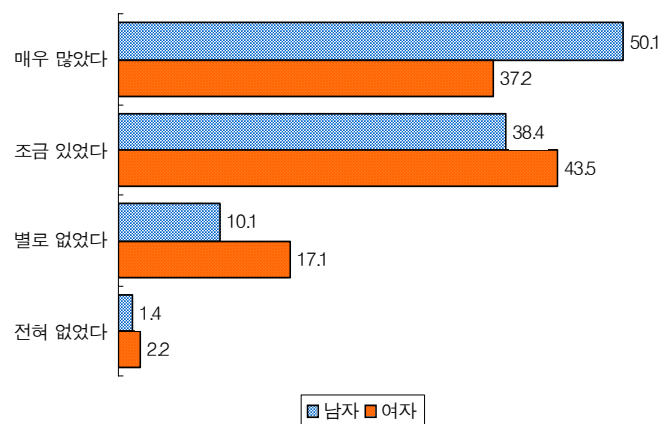
여성의 정치 행태에 관한 설명들 가운데 가장 확고하면서도 널리 퍼져 있는 통설은 여성이 정치에 대해서 모르며 관심도 없고 정치적 참여도도 낮다는 것이다. 랜달의 경우에도 서구 각국의 여성정치참여를 비교하면서 여성들의 정치참여수준이 저조하며 관심도가 낮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경우 김현희의 1999년 연구결과, 1997년 대선에서는 정치적 관심도에 있어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1997년 대선의 성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1980년대의 관심도에서의 성차가 점차 줄어들면서 1997년에는 마침내 유의미하지 않는 정도로 그 성차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정치에 관심이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정치적 인지도에 있어서도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3.5%가 매우 관심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는데 비해 여성은 37.2%가 관심이 매우 많았다고 응답해서 전체에 비해 비율이 낮으며 남성

49) 김현희, “대안 정치세력으로서의 여성” p.324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50.1%가 아주 관심이 많았다는 응답과 비교해보면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별로 없었다는 여성응답자도 17.1%나 되어 적어도 관심도 면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여성들은 남성보다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III-19> 「제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성별)



위의 선거관심도에 대한 4가지 응답을 성이라는 변수로 chi-square test 한 결과 유의수준이 .000(<.05)로 나타나 성별이 선거관심도의 상이한 정도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한국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이 낮다고 분석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선거관심도를 성별과 학력별로 교차분석해 보았더니 대학재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층에 있어서는 성별 요인이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지만 그 이하 즉 고졸 혹은 중졸이하의 응답자에서 별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50)</sup> 즉 학력이 높은 여성일수록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50) 중졸이하에서는 chi-square p값이 .262였고, 고졸이하에서는 p=.071, 대재이상에서는 p=.000으로 나타났다.

&lt;표Ⅲ-10&gt; 성별 \* 선거관심도 \* 학력별

학력별*성별			선거관심도				전체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조금 있었다	매우 많았다	
무응답	성별	남자	-	100.0%	-	-	100.0%
		여자	-	16.7%	50.0%	33.3%	100.0%
	계		-	37.5%	37.5%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5%	15.3%	31.4%	50.8%	100.0%
		여자	4.2%	22.6%	31.1%	42.0%	100.0%
	계		3.6%	20.0%	31.2%	45.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	10.8%	42.4%	46.1%	100.0%
		여자	1.7%	14.8%	47.4%	36.1%	100.0%
	계		1.3%	12.9%	45.0%	40.9%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4%	7.4%	38.0%	53.1%	100.0%
		여자	1.2%	15.1%	49.2%	34.5%	100.0%
	계		1.3%	10.6%	42.7%	45.3%	100.0%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정치적인 관심도가 낮아지지만 성차만을 놓고 보았을 때 고학력층에서 여성과 남성의 정치적 관심도의 차이가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위의 단순한 일반화, 즉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정치에 관심이 적다는 일반화는 새롭게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고학력여성들은 정치가 남성의 영역임을 저학력 여성보다 더 잘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참여하기를 꺼리는 심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sup>51)</sup> 이것은 한국의 여성고학력층에 팽배해있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일단면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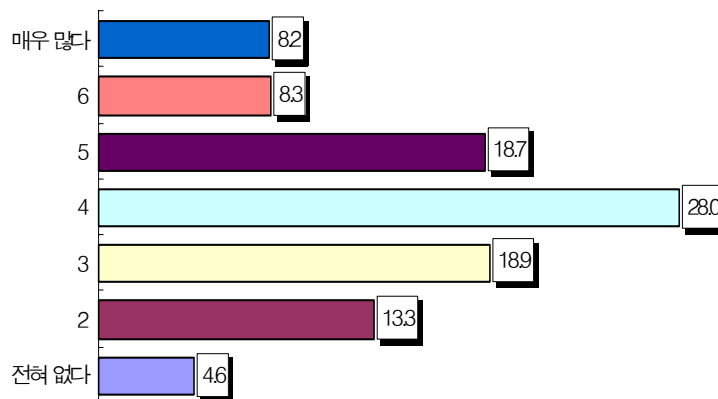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남성의 지배적 영역이었던 정치에 대한 여성유권자들의 생소함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51) 사피로는 이를 게임의 이론으로 설명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역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참여를 꺼리는 심정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설명에 따른 고학력여성들의 정치적 관심도는 고도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Virginia Sapiro, "Sex and games: On Oppression and Rationality"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9, no,4)

연령, 직장 경험과 같은 매개 변수들과 교차적으로 분석할 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정치적 관심도에 대한 성향비교이다. 평소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 ‘관심 없다’는 의견은 36.8%(‘전혀 없다’ 4.6%, ‘2’ 13.3%, ‘3’ 18.9%)인 반면, ‘관심 있다’는 의견은 35.2%(‘매우 많다’ 8.2%, ‘6’ 8.3%, ‘5’ 18.7%)로 나타나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 관심도는 ‘관심 있다’는 의견과 ‘관심 없다’는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통(4)’은 28.0%이다. 응답자의 특성은 ‘전혀 없다’는 의견은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11.2%), 직업별로 ‘농임어업’(15.2%), 도시규모별로 ‘군지역’(10.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매우 많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농임어업’(15.2%), 지역별로는 ‘강원’ (20.4%), ‘광주/전라’(1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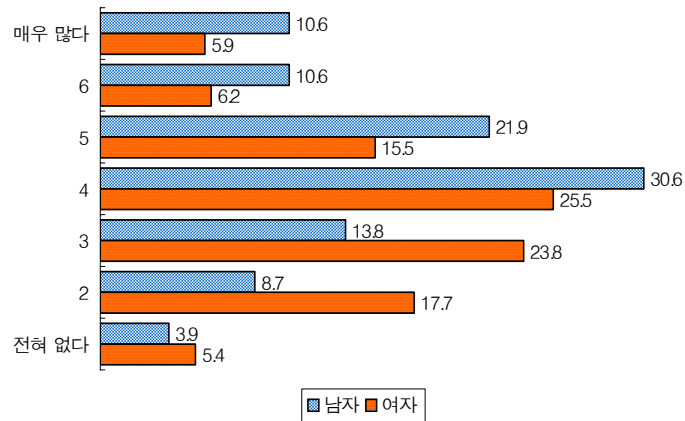
<그림Ⅲ-20> 정치적 사건/선거 관심도 (전체)



정치적 사건 및 선거 관심도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매우 많다’는 의견은 남자가 10.6%로 여자(5.9%)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혀 없다’는 의견은 여자가 5.4%로 남자(3.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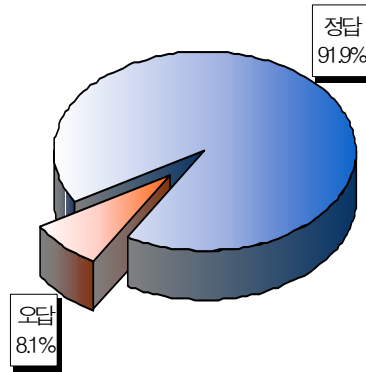
및 선거 관심도에 대한 7가지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사건 및 선거 관심도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남성보다 여성이 더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 무관심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건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 가운데에는 전통적인 정치적 무관심층도 물론 포함되지만 상당 부분은 한국정치 상황이 싫어서, 혹은 이렇게 전개되는 한국정치가 싫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무관심층하고는 다르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권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진정으로 관심이 없는 무관심층과 정치에 대한 혐오층, 정치를 바꿀 수 없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극도로 낮은 정치적 소외층 등 정치적 무관심계층에 관한 해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여성의 정치적 관심도는 남성에 비해서 떨어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남성중심의 정치가 싫어서' 혹은 '나의 참여가 정치를 바꿀 수 없어서' 또한 무관심의 내용을 좀더 심화하여 왜 무관심한지를 살펴서 '남성적 용어로 되어있어서'등으로 해석하여 여성은 단순히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는 해석하지 않는다. 한국 여성의 정치적 무관심도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진전된 설문이 필요하다.

<그림Ⅲ-21> 정치적 사건/선거 관심도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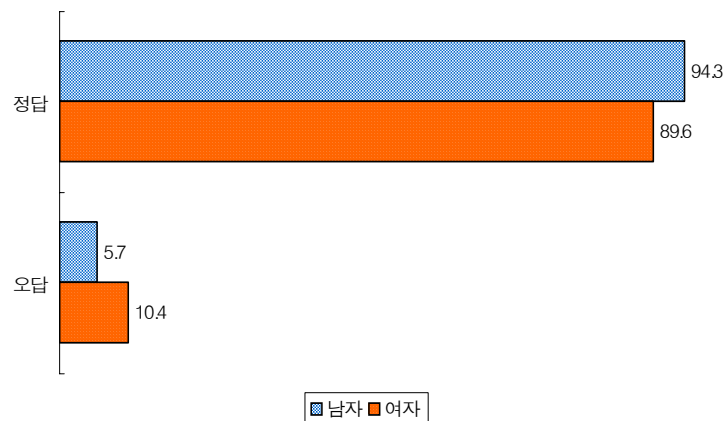
두 번째 정치적 인지도가 정치적 관심도와 연결된다. 정치적인 관심이 높게 되면 정치적 인지도가 높게 되고 정치적 인지도가 높으면 정치적 관심도가 높게 된다. 한편으로 정치적 인지도에 관한 질문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검증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흔히 면접 조사의 경우 응답자들은 실제의 관심보다는 관심이 높다는 쪽에 더 많은 응답을 보일 수 있어서 인지도에 대한 질문으로 이를 검증할 수 있다. 이번의 여론 조사에서 두가지의 질문으로 인지도를 조사하였는데 하나는 대통령 임기를 묻는 것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이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장(長)을 묻는 질문이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정답자는 91.9%였고 오답자는 8.1%였다.

<그림Ⅲ-22>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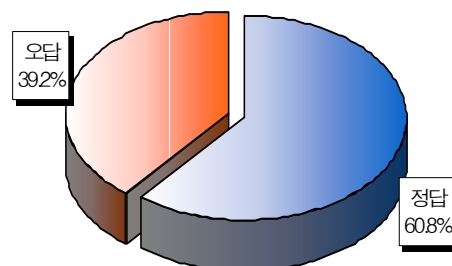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대통령임기를 정확하게 답변한 비율이 남자가 94.3%로 여자(8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여성이라는 성변수가 대통령임기인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림Ⅲ-23>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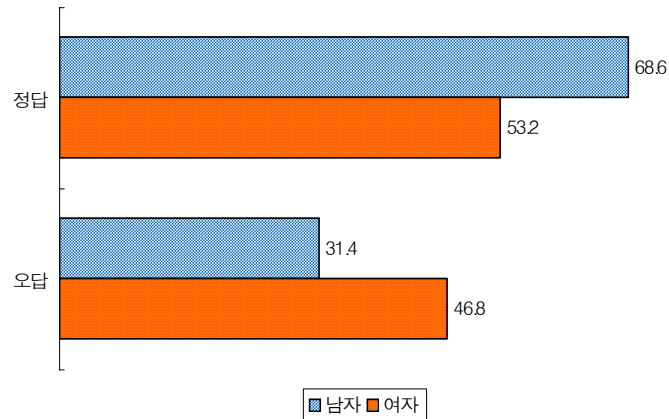
두 번째의 질문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누구인지에 관한 질문이었다.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물어 면접원에게 그에 대한 정답여부를 기재토록 한 결과 응답자의 60.8%가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39.2%는 틀린 대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자'(68.6%), 연령별로는 '40대'(74.5%), 직업별로 '공무원' (71.4%), '화이트칼라'(69.5%), '자영업'(66.3%), 도시규모별로는 '대도시'(6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오답'을 말한 응답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여자'(46.8%), 연령별로는 '20대'(48.2%), '50대 이상'(44.2%),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50.0%), '농림어업'(47.0%), '가정주부'(47.0%), 도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46.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24>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전체)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해당 광역단체장의 이름을 정확하게 답변한 비율이 남자가 68.6%로 여자(53.2%)보다 높게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광역단체장에 관하여 더 모른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lt;그림Ⅲ-25&gt; 광역단체장 인지 여부 (성별)



그러나 성별에 연령과 학력, 직업 등 다양한 매개변수를 연결하면 설명이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직업별로 가정주부의 53%가 알고 있었는데 비해 남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의 경우 71.4%가 정답을 말하였다. 이렇게 볼 때 남녀간의 차이는 이런 직업상의 차이에 비해서 그 차가 적고 직업이라는 매개변수를 사용하면 남녀간의 차이는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좀더 활발해지고 공무원 등과 같은 직업에 여성의 참여가 높아진다면 여성의 정치적 인지도는 훨씬 상승될 것이며 정치적 인지도에 있어서 남녀 성차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구의 경우 1960년대에 오면서 여성의 학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사회적 진출이 활발히 되면서 정치적 인지도의 남녀갭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 전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편 위의 정치적 관심도와 학력의 관계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고학력 층에서 정치적 관심에 대한 젠더갭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여성의 사회진출활발은 어쩌면 현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적 인지도와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직업활동에 따른 가정과 직장에서의 이중부담으로 여성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인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더욱 현실적이며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치적 냉소

주의의 팽배로 정치적 효능감이 극도로 낮아져 정치적 인지도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생각할 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참여하는가에 따른 차이가 결국 정치적 인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 사회의 남성적인 정치문화, 여성에게 가중되는 과도한 부담 등의 요인의 한국적 특수성을 통제하고 본다면 여성의 사회활동과 정치적 인지도 사이의 상관관계만을 볼 때 사회활동의 증가는 정치적 인지도의 상승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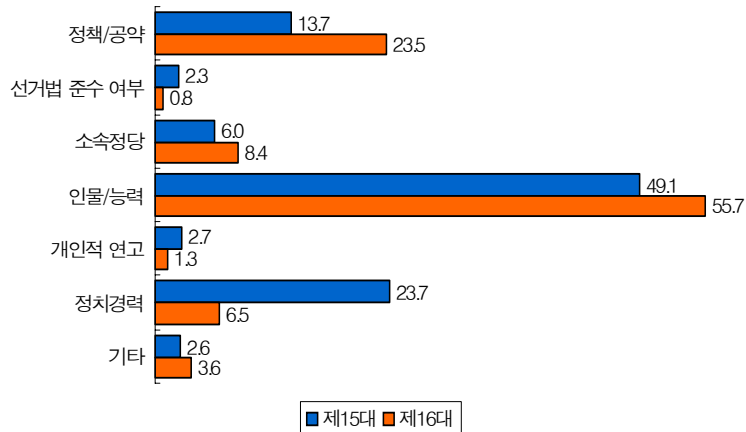
#### 나. 지지후보 결정요인 비교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파악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는 지지후보결정요인인데 지난 선거에서 여성유권자의 지지후보 결정요인을 보면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이 가장 중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적용되는데 첫 번째의 후보자 선택기준은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이고, 두 번째는 정당 및 공약을 꼽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1992년 제 14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김영삼후보와 김대중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졌는데 당시의 투표기준으로도 여성유권자나 남성유권자나 모두 ‘인물’을 가장 중시 여겨서 투표하였고 다음이 ‘공약, 정견’, 다음이 ‘정당’을 지지후보 결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sup>52)</sup>. 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물/능력을 지지후보 결정기준으로 제시한 응답자는 전체의 49.1%였으며 정책/공약을 지적한 응답자는 전체의 13.7%에 지나지 않았다<sup>53)</sup>. 이에 비해서 16대인 이번 대선에서는 인물/능력은 전체의 55.7%, 정책/공약을 기준으로 지적한 응답자는 23.5%로서 여전히 정책보다는 인물지향적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한국 선거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인물지향적인 성향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2) 정무장관(제2실), “한국 여성유권자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 - 제14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 14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1994, pp.18-24

53) 한국 사회과학 데이터센터

&lt;그림Ⅲ-26&gt; 15대·16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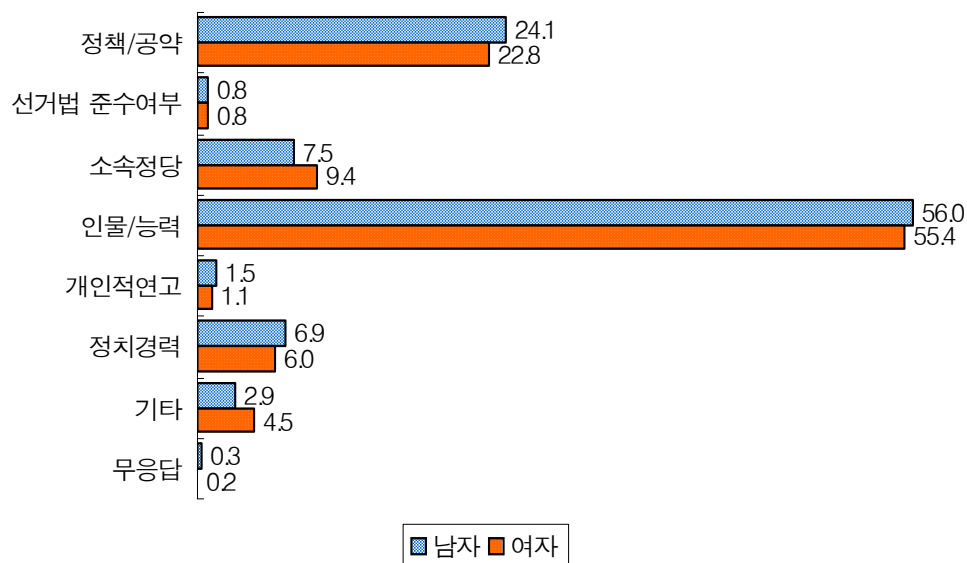


16대 대선과 15대 대선을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찍어줄 후보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인물/능력’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5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공약’(23.5%), ‘소속정당’(8.4%), ‘정치경력’(6.5%), ‘개인적 연고’(1.3%), ‘선거법 준수여부’(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물/능력, 정책/공약 등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번 15대 대선이 IMF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선거였고 정책 혹은 공약의 대결보다는 후보들의 인물 및 능력을 둘러싼 대결이었음을 감안하여 이러한 특수성까지 고려하고 이전의 14대 대선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한국 선거는 정책보다는 인물지향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과정이 후보자들의 대결구도 역시 정책적 대결이나 공약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인물의 도덕성, 이미지, 경력을 둘러싼 공방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지향적 선거의 관점에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TV토론에 참여하게 되면서 민노당은 분명한 정책적 성향을 제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TV토론에 참가한 다

른 두 후보 역시 경제 및 대북정책에 있어서 비교적 뚜렷하게 다른 정책을 제시하게 됨에 따라 정책지향적인 선거운동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지지후보 결정기준에 있어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이번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인물/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한 여성유권자는 56%였으며 남성유권자는 남성응답자 전체의 55.4%였고 정책 및 공약을 선택한 응답자는 여성가운데 24.1%, 남성가운데 22.8%였으며 ‘소속정당’이라는 의견은 남자가 7.5%로 여자(9.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이라는 변수가 지지후보 결정기준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sup>54)</sup>.

<그림III-27> 「제16대 대통령선거」 지지후보 결정기준 (성별)



한국에서는 지지후보 결정기준에서 덜 정책지향적이며 이것은 남녀간에 성차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54) 지지후보 결정기준에 대한 성별 chi-square p값은 .621( $p > .05$ )로 나타났다.

인물지향적이며 덜 정책지향적이기 때문에 정치권은 여전히 인물공방 및 인물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정책선거,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나아가기는 요원하다. 특히 여성정책의 확대 및 정치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친여성적인 정책을 펼, 혹은 친여성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에게 여성들이 투표해야 각 후보는 여성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정책은 선거에서 중요한 쟁점가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여성이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물중심적인 투표행태로 나아갈 때 여성의 유권자로서의 위치는 선거전에서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과거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의 당선에서 여성들의 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미테랑 대통령은 재임기간 여성부의 창설 등 여성정책의 가시적인 발전에 큰 관심을 표명하였다<sup>55)</sup>.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 성향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정치권에서 여성의 이익을 위한 정책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한국에서의 여성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곧 한국 정치에서 여성정책의 우선순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현재 상황으로 한국 정치의 여성정책 우선순위는 별로 높지 않으며 그것은 한국 여성유권자들의 인물지향적 투표성향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다. 정책에 대한 성향 비교

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반정책에 대한 젠더갭(gender gap)을 보기 위한 문항들이다. 이제까지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조사에서 주로 질문되었던 것은 누구를 지지하는지,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하는 것 등 직접적으로 투표와 관련이 있는 문항들이었다. 정치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하고 여성국회의원의 수를 늘려야하며 또한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55) 김민정, “성평등정책의 진전과 여성정책전담부서” 2001년 한국정치학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논문 참조

여성이 일정 비율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은 이제까지 주로 관료대표제이론이나 민주주의이론 혹은 여성의 이익대표설 등이었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하고 국회의원, 고위공무원등에 여성이 일정비율 반영되어야하는 이유는 여성 일정비율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전반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여성은 남성과 다른 경험을 가졌고 다르게 정책에 접근하며 여성의 성향은 남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다양한 연구성과들에서 보여지는 주장이다. 특히 미국 및 서구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없는 의제에 있어서도 여성은 남성과 다른 접근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다 조화로운 정책결정을 위해서 여성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2001년 프랑스에서 남녀동수법이 통과하여 각급 선거에서 각 정당들은 남녀 동수를 후보를 공천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이들 여성후보들이 공천받아야하는 권리는 그들이 전체 인구의 과반수인 여성을 대표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른 경험으로 다르게 정치를 바라보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정치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제까지 시도된 적이 없었던 정치적 의제에 대한 젠더갭을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 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일반정책에 대한 젠더 갭을 살펴보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젠더갭을 살펴보았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젠더갭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였지만 일반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어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서구와 비교하여 그다지 뚜렷하게 젠더갭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여성유권자들은 서구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도에서 뒤떨어지고 또한 지지후보 결정 등에 있어서도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인지도도 뒤떨어지는 등 정치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예상은 빗나갔다.

성변수는 각각의 문항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게 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이 나타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 1) 전체적인 평가

<표Ⅲ-11> 일반정책에서의 남녀의견분석(젠더갭)

	찬성		반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46.9%	56.2%	46.9%	41.8%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38.6%	45.8%	47.3%	48.3%
SOFA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75.3%	69.0%	15.9%	18.6%
복지수준이 높아져야한다	54.7%	62.4%	40.3%	34.5%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	43.4%	51.8%	36.9%	41.4%
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	26.0%	33.0%	61.3%	59.8%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72.4%	75%	20.1%	20.1%

우선 특별히 여성과 관련이 있지 않은 일반정책을 살펴보면 이번에 설문문항 가운데 모두 일곱 문항이 이에 해당하는데 마지막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만 성변수가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고 나머지 6항목의 경우에는 성변수가 각각의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sup>56)</sup>. 대북정책, 경제정책, 대미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및 보안법폐지라고 하는 중요한 법질서의 전환에 관하여 성에 따라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 및 서구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정책에서 젠더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정치에 접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

56) 마지막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는 chi-square값이 .274( >.05)이므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른 문항에는 각각 chi-square 값이 모두 <.05로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서 남성과는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 설문조사를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이데올로기 성격을 보수와 진보의 두 극단점을 놓고 볼 때<sup>57)</sup> 진보적인 견해는 평등지향적, 인권지향적, 군비축소지향적<sup>58)</sup>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계속 되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동의는 진보적인 견해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인데 진보주의자들은 산업이 아니라 사람이 국가의 으뜸자원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sup>59)</sup>. 그래서 수요측면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조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에 동의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항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의 배제에 동의하는 것은 보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SOFA 협정의 개정에 대한 견해는 전통적 진보-보수의 선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복지수준의 확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모두 진보적 정책이다. 환경보전 역시 진보적 정책에 속하고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은 보수적 정책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눌 때 대체로 한국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여성이라하더라도 연령별로 다른 행태를 보이고 또 연령별로서 성이라는 변수가 정책태도에서 가지는 의미가 다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대북지원문제에 있어서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의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성변수의 의미를 분석하였더니 50대이상에서만 성변수는 유의미했고 (chi-square  $p = .001$ ) 나머지 연령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sup>60)</sup>. 기업의 자

57) 바라다트 저, 신복룡 역, 『현대정치사상』 (서울:평민사, 1995) p.38-80참조

58) 진보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도덕적이며 그들은 그들 간의 차이점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전쟁은 비정상인 것으로 간주하며 평화와 협력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보주의자들은 외교정책에서 군사적인 측면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상대편인 보수주의자들보다 훨씬 적게 강조한다.(바라다트저, 신복룡 외 역, 『현대정치사상』 pp.76-77)

59) 『현대정치사상』 p.78

60) 성별 \*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이 필요

을적 개혁정책에 있어서도 50대 이상에서는 성변수가 유의미하였지만 그 이하에서는 별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sup>61)</sup>.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젠더 갭이 분명한 연령은 50대이상에서 보여지고 그 이하의 연령에서는 성별변수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의 정책지향적 투표가

하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4.4%	13.3%	.6%	17.8%	63.9%	100.0%
		여자	2.8%	6.8%		32.8%	57.6%	100.0%
	Total		3.6%	10.1%	.3%	25.2%	60.8%	100.0%
30대	성별	남자	2.5%	9.6%	1.0%	28.9%	57.9%	100.0%
		여자	2.7%	14.6%	3.2%	31.4%	48.1%	100.0%
	Total		2.6%	12.0%	2.1%	30.1%	53.1%	100.0%
40대	성별	남자	6.6%	12.6%	2.4%	29.3%	49.1%	100.0%
		여자	3.6%	13.3%	5.4%	26.5%	51.2%	100.0%
	Total		5.1%	12.9%	3.9%	27.9%	50.2%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1.8%	13.3%	5.6%	22.6%	46.7%	100.0%
		여자	7.3%	11.6%	22.3%	27.9%	30.9%	100.0%
	Total		9.3%	12.4%	14.7%	25.5%	38.1%	100.0%

61) 성별 \*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16.1%	40.0%	1.7%	29.4%	12.8%	100.0%
		여자	8.5%	49.2%		33.9%	8.5%	100.0%
	Total		12.3%	44.5%	.8%	31.7%	10.6%	100.0%
30대	성별	남자	17.3%	32.5%	3.6%	34.5%	12.2%	100.0%
		여자	9.7%	37.8%	7.6%	34.6%	10.3%	100.0%
	Total		13.6%	35.1%	5.5%	34.6%	11.3%	100.0%
40대	성별	남자	10.8%	31.7%	4.2%	37.1%	16.2%	100.0%
		여자	9.0%	38.0%	10.2%	30.1%	12.7%	100.0%
	Total		9.9%	34.8%	7.2%	33.6%	14.4%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4.9%	29.7%	13.8%	29.2%	12.3%	100.0%
		여자	8.2%	31.3%	32.6%	17.2%	10.7%	100.0%
	Total		11.2%	30.6%	24.1%	22.7%	11.4%	100.0%

남성과는 구별된 정책지향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20, 30, 40대 여성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의 젠더갭이다.

<표Ⅲ-12> 여성관련정책에 대한 남녀의견차이(젠더갭)

	찬성		반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국회의원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43.3%	51.8%	19.7%	33.1%
여성의 조직참여는 확대되어야한다	43.4%	51.8%	10.7%	21.6%
여성의 최적직업은 주부이다	25.3%	31.1%	71.4%	66.6%
호주제는 폐지되어야한다.	70.3%	64.4%	16.6%	25.8%

여기에서 네 문항 모두에서 성변수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변수가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남성이 더 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세번째 문항제외) 적어도 이 설문에서는 한국 남성응답자들의 달라진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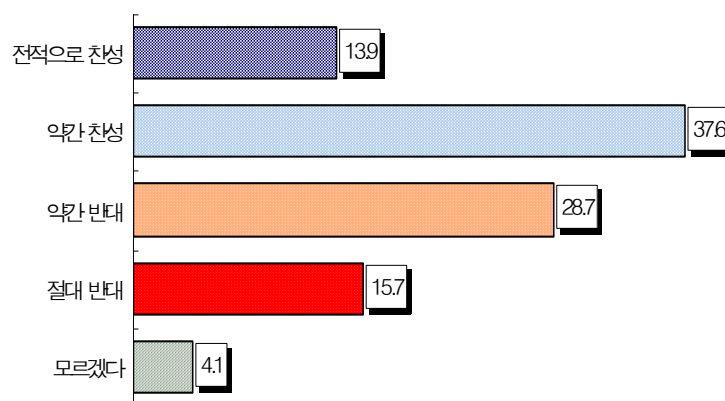
한편 성별변수의 의미를 바로 읽기 위하여 연령별로 여성정책에 관한 남녀별 의견을 다시 분류해보면 재미있는 결과를 얻게 된다. '여성의 최적직업은 주부이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여성할당제, 조직장예의 확대참여, 호주제 폐지정책에 관하여서는 20대와 50대이상에서 성별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이렇게 보면 여성투표가 정책지향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30, 40대 여성들에게 집중적인 홍보가 교육이 필요하며 연령별로 특화된 접근이 여성의 정책지향적 투표에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 2) 구체적 분석

가)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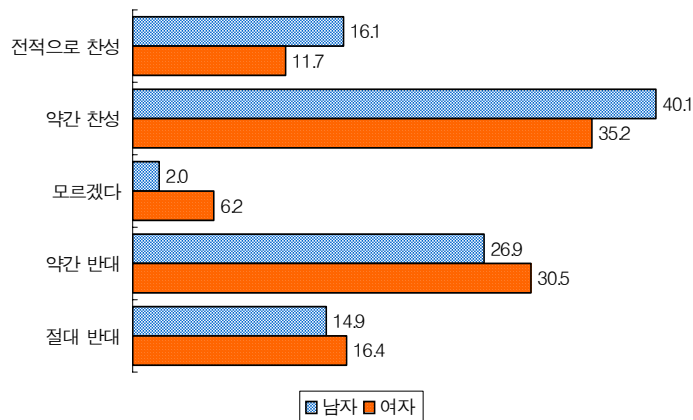
“북한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51.5% (‘전적으로 찬성’ 13.9%, ‘약간 찬성’ 37.6%), ‘반대한다’ 44.4% (‘절대 반대’ 15.7%, ‘약간 반대’ 28.7%)인 반면, ‘모르겠다’는 응답은 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46.2%)에서 ‘약간 찬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별로 ‘학생’(48.0%)에서 ‘약간 찬성’하는 응답이, 도시규모별로는 군지역 43.6%의 ‘약간 찬성’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무직’ 53.6% (‘약간 반대’ 30.7%, ‘절대 반대’ 22.9%), 지역별로 ‘대구/경북’ 58.6% (‘약간 반대’ 36.1%, ‘절대 반대’ 22.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선에서의 지지후보와 함께 조사하였기 때문에 대선에서의 지지후보와 그 지지후보의 대북정책을 동일시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찬성의견자들은 노무현후보지지층이며 반대응답자들은 이회창후보지지층으로 보인다.

<그림Ⅲ-28> 대북지원에 대해 (전체)



한편 대북지원에 관한 남녀별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56.2%로 여자(4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북지원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북지원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남녀의 성별에 따라 대북지원에 있어서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대북지원의 유지는 진보적 성향을 가지기 때문에 약간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포함하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국유권자가운데에는 보수주의자보다 진보주의자가 더 많은데 남녀를 비교하면 찬성자 즉 대북지원에 있어서 진보적인 사람 가운데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성들 가운데에는 진보적인 대북정책지지자와 보수적인 대북정책지지자가 동수를 이루며 남녀라는 성별은 대북지원정책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수가 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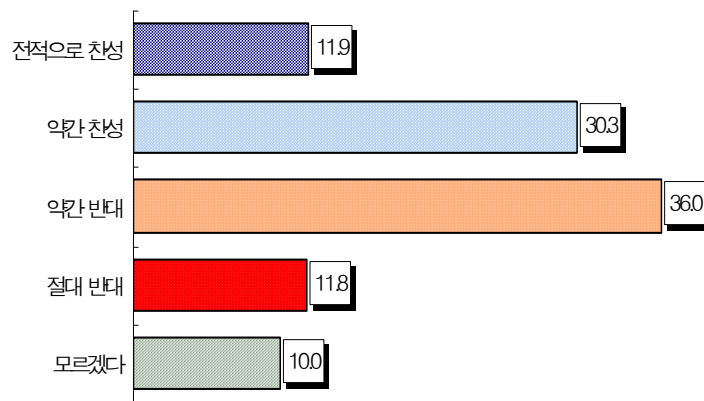
<그림Ⅲ-29> 대북지원에 대해 (성별)



나)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42.2%(‘전적으로 찬성’ 11.9%, ‘약간 찬성’ 30.3%), ‘반대한다’ 47.8%(‘절대 반대’ 11.8%, ‘약간 반대’ 36.0%)인 반면, ‘모르겠다’는 10.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판매/서비스’ 53.1% (‘전적으로 찬성’ 12.5%, ‘약간 찬성’ 40.6%)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별로 ‘광주/전라’ 49.1%(‘전적으로 찬성’ 12.3%, ‘약간 찬성’ 36.8%)에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56.8% (‘약간 반대’ 44.5%, ‘절대 반대’ 12.3%), 직업별로 ‘학생’ 60.8% (‘약간 반대’ 48.0%, ‘절대 반대’ 12.8%),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54.8% (‘약간 반대’ 43.2%, ‘절대 반대’ 11.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반대가 약간 많은데 한국 상황에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자율적 개혁보다는 재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더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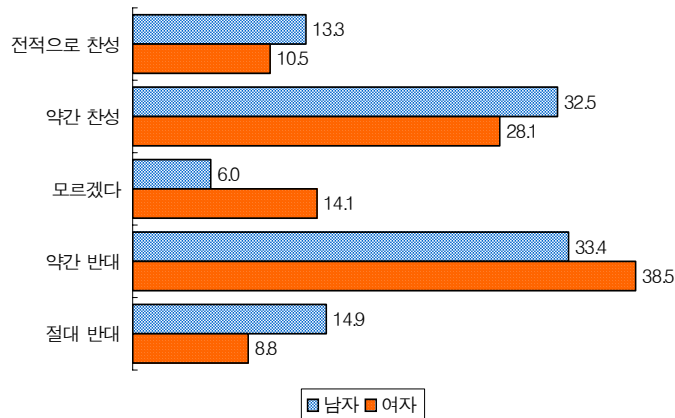
<그림Ⅲ-30> 기업활동 자율화에 대하여 (전체)



기업개혁 자율화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45.8%로 여자(38.6%)보다 높게 나타남. 기업개혁 자율화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개혁 자율화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녀라는 하는 변수가 기업개혁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에 대해서 남녀 공히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서 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다. 한편으로 간섭에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Ⅲ-31> 기업활동 자율화에 대하여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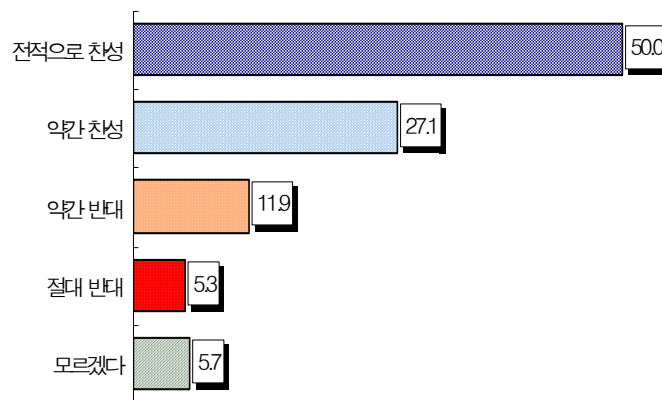


다)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찬성한다’ 77.1% (‘전적으로 찬성’ 50.0%, ‘약간 찬성’ 27.1%), ‘반대한다’ 17.2% (‘절대 반대’ 5.3%, ‘약간 반대’ 11.9%)인 반면, ‘모르겠다’는 5.7%로 나타났다. 한국민은 일반적으로 미국과의 우호가 깨어지더라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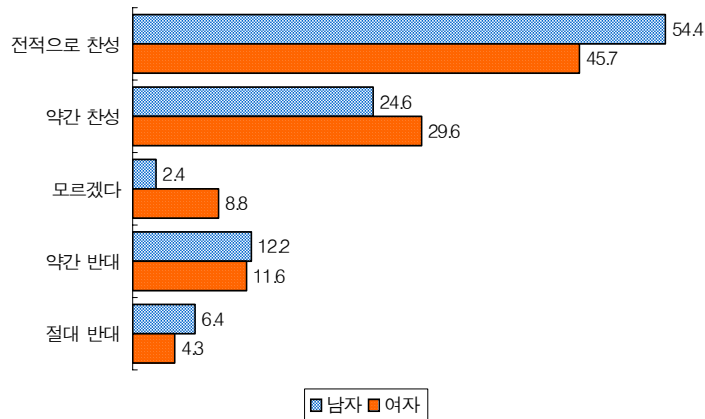
다. 16대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여중생 사망사건이 잇슈화되었고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이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시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은 앞으로의 다른 여론 조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학생’ 90.0% (‘전적으로 찬성’ 62.6%, ‘약간 찬성’ 27.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전문직’ 24.7% (‘약간 반대’ 15.2%, ‘절대 반대’ 9.5%), 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32> SOFA개정에 대하여 (전체)



SOFA개정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79.0%로 여자(75.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SOFA개정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SOFA개정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인 경우에 보다 SOFA 개정에 긍정적이며 여성인 경우에 덜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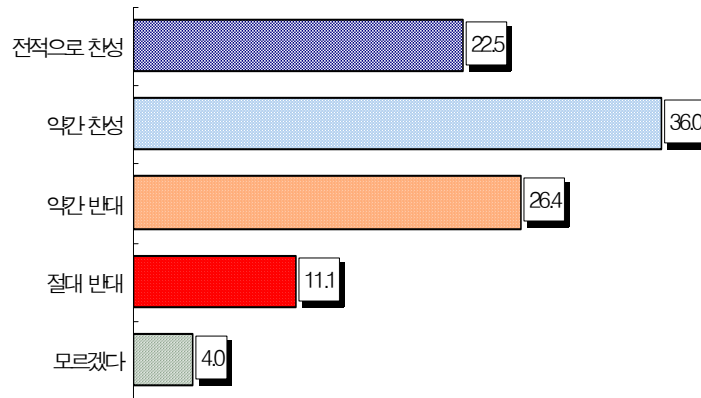
<그림Ⅲ-33> SOFA개정에 대하여 (성별)



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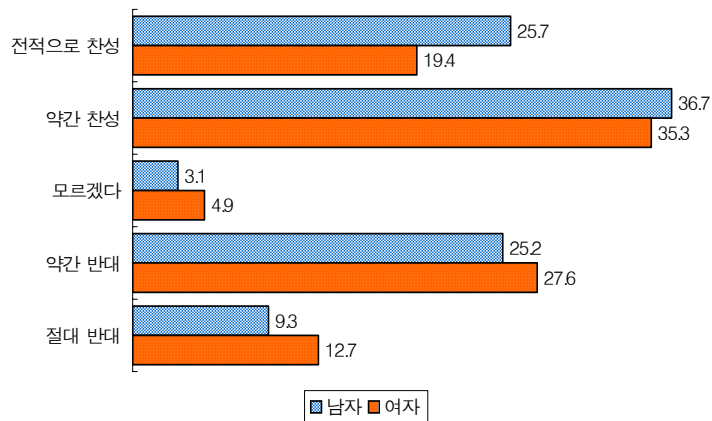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58.5% (‘전적으로 찬성’ 22.5%, ‘약간 찬성’ 36.0%), ‘반대한다’ 37.5% (‘절대 반대’ 26.4%, ‘약간 반대’ 11.1%)인 반면, ‘모르겠다’는 4.0%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분석해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학생’ 69.2% (‘전적으로 찬성’ 18.4%, ‘약간 찬성 50.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가정주부’ 44.6% (‘약간 반대’ 28.1%, ‘절대 반대’ 16.5%),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 47.2% (‘약간 반대’ 34.0%, ‘절대 반대’ 13.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34> 복지증진에 대하여 (전체)



복지증진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62.4%로 여자(54.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복지증진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6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증진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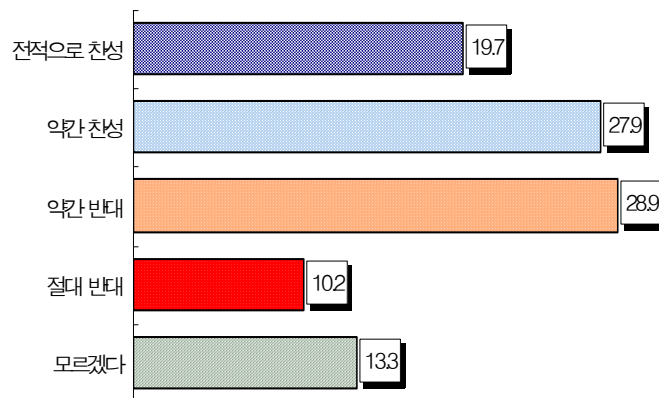
<그림Ⅲ-35> 복지증진에 대하여 (성별)



마)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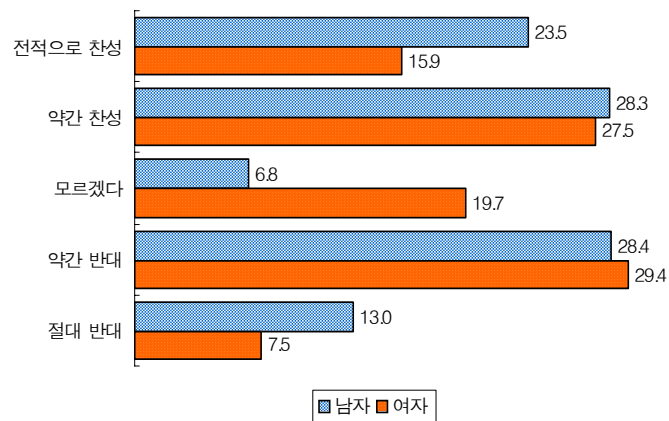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58.5% (‘전적으로 찬성’ 22.5%, ‘약간 찬성’ 36.0%), ‘반대한다’ 37.5% (‘절대 반대’ 26.4%, ‘약간 반대’ 11.1%)인 반면, ‘모르겠다’는 4.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학생’ 65.3% (‘전적으로 찬성’ 26.8%, ‘약간 찬성’ 38.5%), 지역별 ‘광주/전라’ 57.3% (‘전적으로 찬성’ 25.1%, ‘약간 찬성’ 32.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지역별로 ‘대구/경북’ 49.1% (‘약간 반대’ 36.1%, ‘절대 반대’ 13.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36>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 (전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51.8%로 여자(4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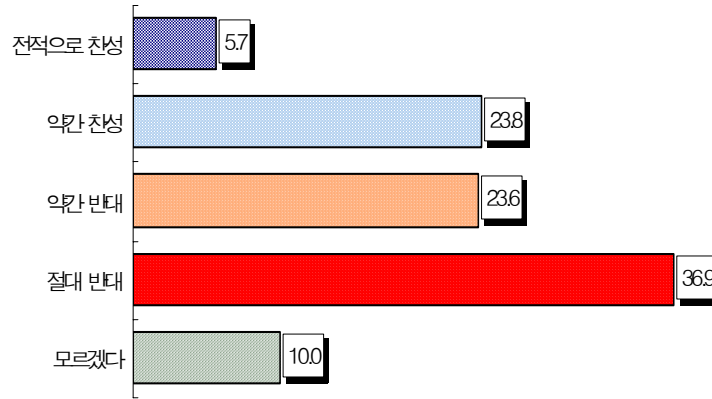
&lt;그림Ⅲ-37&gt;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하여(성별)



## 바)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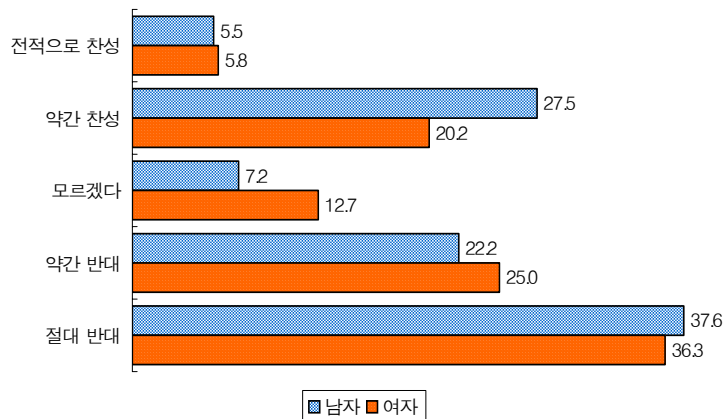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찬성한다’ 29.5% (‘전적으로 찬성’ 5.7%, ‘약간 찬성’ 23.8%), ‘반대한다’ 69.0% (‘절대 반대’ 36.9%, ‘약간 반대’ 23.6%)인 반면, ‘모르겠다’는 10.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은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 36.0% (‘전적으로 찬성’ 6.9%, ‘약간 찬성’ 29.1%), 직업별로 ‘판매/서비스’ 43.7% (‘전적으로 찬성’ 15.6%, ‘약간 찬성’ 28.1%), 소득별로 ‘300만원 이상’ 35.6% (‘전적으로 찬성’ 7.2%, ‘약간 찬성’ 28.4%), 지역별로 ‘인천/경기’ 34.7% (‘전적으로 찬성’ 6.4%, ‘약간 찬성’ 28.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68.4% (‘약간 반대’ 27.2%, ‘절대 반대’ 41.2%), 직업별로 ‘학생’ 69.9% (‘약간 반대’ 27.4%, ‘절대 반대’ 42.5%), 지역별로 ‘대구/경북’ 69.2% (‘약간 반대’ 20.1%, ‘절대 반대’ 49.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38>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하여 (전체)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33.0%로 여자(26.0%)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의견은 여자가 12.7%로 남자(7.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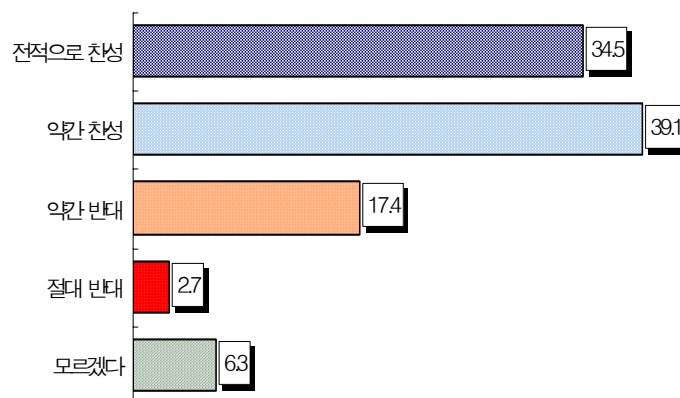
<그림Ⅲ-39>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하여(성별)



사)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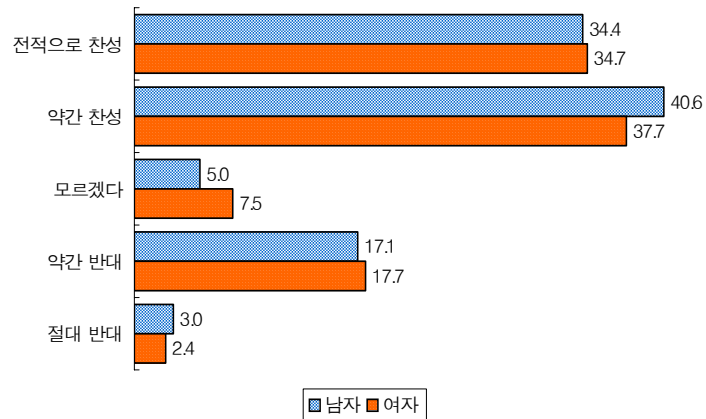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찬성한다’ 73.6% (‘전적으로 찬성’ 34.5%, ‘약간 찬성’ 39.1%), ‘반대한다’ 20.1% (‘절대 반대’ 2.7%, ‘약간 반대’ 17.4%)인 반면, ‘모르겠다’는 6.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은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블루칼라’ 80.6% (‘전적으로 찬성’ 34.3%, ‘약간 찬성’ 46.3%), 지역별로 ‘강원’ 85.8% (‘전적으로 찬성’ 53.1%, ‘약간 찬성’ 32.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전 계층별 유의미성을 찾지 못했으나 지역별 ‘대구/경북’ 24.1% (‘약간 반대’ 20.1%, ‘절대 반대’ 4.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40> 환경보전 우선에 대하여(전체)



환경보전 우선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75.0%로 여자(7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약간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40.6%로 여자(37.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환경보전 우선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275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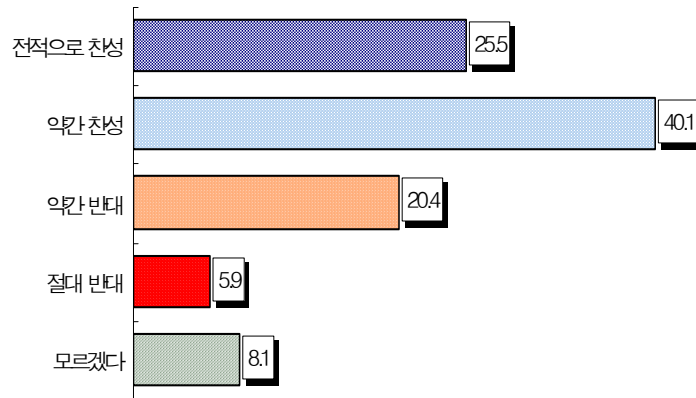
<그림Ⅲ-41> 환경보전 우선에 대하여(성별)



아)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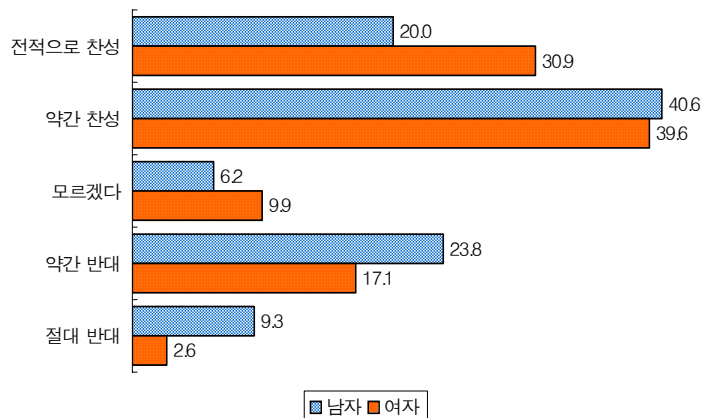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찬성한다’ 65.6% (‘전적으로 찬성’ 25.5%, ‘약간 찬성’ 40.1%), ‘반대한다’ 26.3% (‘절대 반대’ 5.9%, ‘약간 반대’ 20.4%)인 반면, ‘모르겠다’는 8.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하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학생’ 74.5% (‘전적으로 찬성’ 27.9%, ‘약간 찬성’ 45.8%), 지역별 ‘광주/전라’ 74.1% (‘전적으로 찬성’ 20.5%, ‘약간 찬성’ 53.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블루칼라’ 37.3% (‘약간 반대’ 25.4%, ‘절대 반대’ 11.9%), 지역별로 ‘서울’ 34.4% (‘약간 반대’ 26.9%, ‘절대 반대’ 7.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42>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하여(전체)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51.8%로 여자(4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자가 30.9%로 남자(20.0%)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9.3%로 여자(2.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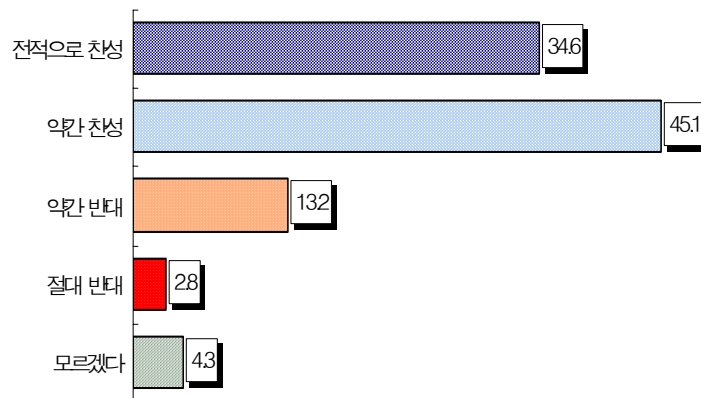
<그림Ⅲ-43> 국회의원 여성할당제에 대하여(성별)



자)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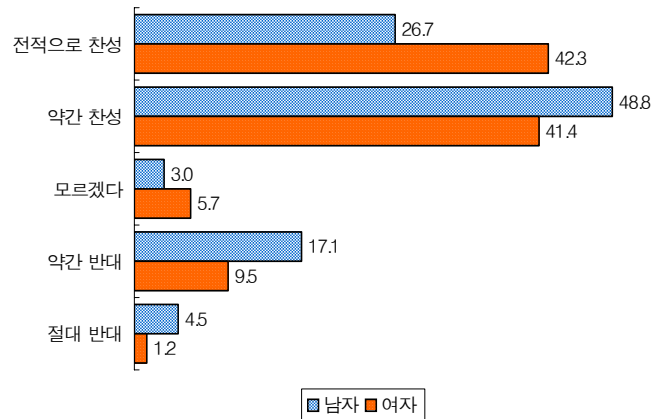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찬성한다’ 79.7% (‘전적으로 찬성’ 34.6%, ‘약간 찬성’ 45.1%), ‘반대한다’ 16.0% (‘절대 반대’ 2.8%, ‘약간 반대’ 13.2%)인 반면, ‘모르겠다’는 4.3%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89.1%(‘전적으로 찬성’ 40.9%, ‘약간 찬성’ 48.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직업별로 ‘농림어업’ 28.8%(‘약간 반대’ 18.2%, ‘절대 반대’ 10.6%)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44>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하여(전체)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51.8%로 여자(43.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여자가 42.3%로 남자(26.7%)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4.5%로 여자(1.2%)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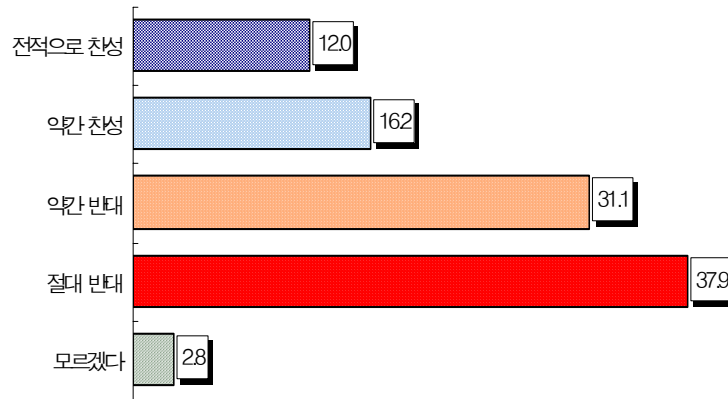
<그림Ⅲ-45> 여성의 조직 참여 확대에 대하여(성별)



차)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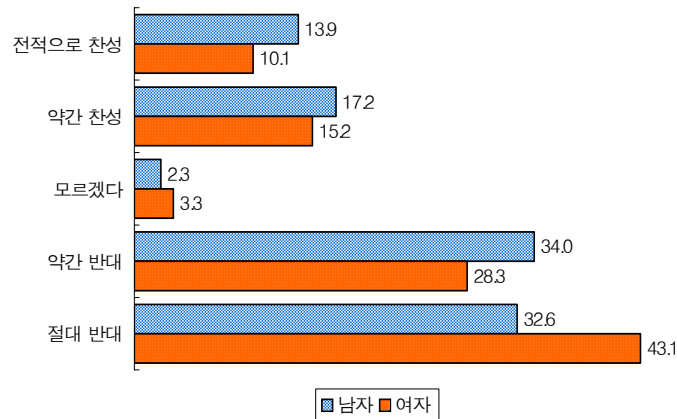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찬성한다’ 25.2% (‘전적으로 찬성’ 12.0%, ‘약간 찬성’ 16.2%), ‘반대한다’ 69.0% (‘절대 반대’ 37.9%, ‘약간 반대’ 31.1%)인 반면, ‘모르겠다’는 2.8%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찬성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50대 이상’ 33.6% (‘전적으로 찬성’ 13.5%, ‘약간 찬성’ 20.1%), 직업별로 ‘농림어업’ 53.0% (‘전적으로 찬성’ 39.4%, ‘약간 찬성’ 13.6%), 지역별로 ‘강원’ 44.9% (‘전적으로 찬성’ 30.6%, ‘약간 찬성’ 14.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한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 81.8% (‘약간 반대’ 28.0% ‘절대 반대’ 53.8%), 직업별로 ‘학생’ 82.7% (‘약간 반대’ 30.2%, ‘절대 반대’ 52.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Ⅲ-46> 여성의 최적직업으로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하여(전체)



여성의 최적직업으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자가 71.4%로 남자(66.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은 여자가 43.1%로 남자(32.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남자가 13.9%로 여자(10.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여성의 최적직업으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최적직업으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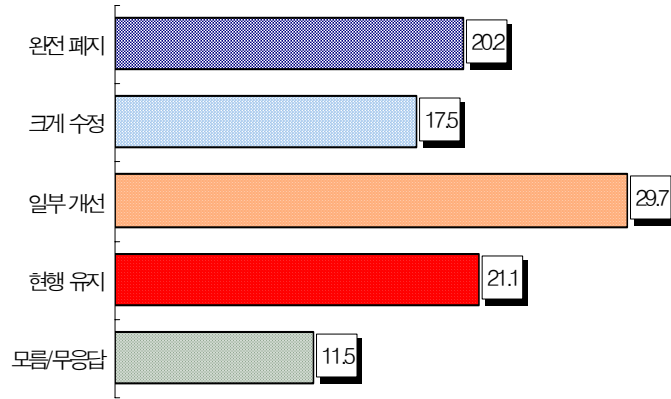
&lt;그림Ⅲ-47&gt; 여성의 최적직업으로서 가정주부라는 것에 대하여(성별)



#### 카)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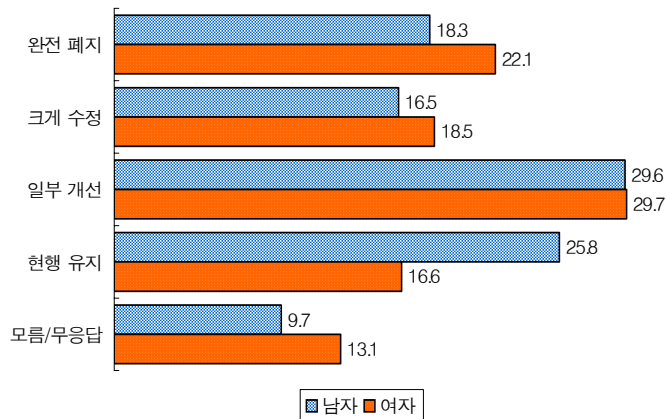
호주·호적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2%,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17.5%로 나타난 반면, '유지하되 일부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은 29.7%,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1.1%로 나타났다. 단 '모르겠다'는 의견은 11.5% 정도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을 보면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별로는 '20대'(26.4%), 직업별로 '전문직'(29.5%), '학생'(26.3%), 지역별로 '서울'(2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크게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직업별로는 '판매/서비스직'(28.1%), '학생'(27.4%), '전문직'(2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도시규모가 클수록, 직업별로는 '공무원'(42.9%), '화이트칼라'(36.2%), 지역별로는 '강원'(38.8%), '대전/충청'(3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성별로는 '남자'(25.8%), 연령별로는 '50대 이상'(34.3%), 직업별로는 '농림어업'(42.4%), '블루칼라'(4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Ⅲ-48>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하여(전체)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완전 폐지’라는 의견은 여자가 22.1%로 남자(18.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현행 유지’라는 의견은 남자가 25.8%로 여자(16.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0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해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Ⅲ-49> 호주·호적제 존폐 여부에 대하여(성별)



#### 4.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 여성유권자들은 남성유권자들과 비교하여 볼 때 지지자 선택에 있어서 인물/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두 번째로 정책 및 공약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물론 그 비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정책투표성향에 성이라는 변수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면 한국 여성의 정책지향적 투표를 위해서 누가, 어떤 조건을 가진 여성 혹은 남성이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여성의 정책지향적 투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 혹은 공약은 지지후보 선택의 기준으로 말한 응답자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누가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는 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선 정책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 4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정치적 관심도, 두 번째는 정치적 인지도, 세 번째 심리적 요인(정치적 효능감) 네 번째는 사회적 경험(여기서는 단체가입으로 단순화하였다)의 네가지 변수이다.

##### 가.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의 경로를 분석하기 이전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계층에서 정책지향적 투표성향을 보이는지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남녀별로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면 정책지향성이 가장 약한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이 연령대에서는 주로 인물 다음으로 정책을 기준으로 택하지만 소속정당 및 선거법 준수여부를 다른 연령보다는 더 중시하고 있다.

<표Ⅲ-13>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성·연령별 요인

구분		사례수 (명)	투표 결정기준							
			정책/ 공약	선거 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등)	개인적 연고 (출신지 역등)	정치 경력	기타	무응답
전체		(1,326)	23.5	0.8	8.4	55.7	1.3	6.5	3.7	0.1
성 별	남자	(663)	24.1	0.8	7.5	56.0	1.5	6.9	2.9	0.3
	여자	(663)	22.8	0.8	9.4	55.4	1.1	6.0	4.5	0.2
연 령 별	20대	(293)	29.4	0.7	7.5	54.6	1.4	2.7	3.8	0.0
	30대	(334)	24.9	1.2	7.2	57.2	1.8	5.4	2.4	0.0
	40대	(299)	23.7	0.0	10.0	53.5	1.3	9.4	1.7	0.3
	50대 이상	(400)	17.8	1.0	9.0	56.8	0.8	8.0	6.3	0.5

다음으로 학력별에 의한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중졸이하에서 비교적 낮게 정책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표Ⅲ-14>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학력별 요인

구분		사례 수 (명)	투표 결정기준							
			정책/ 공약	선거 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등 )	개인적 연고 (출신지 역등)	정치 경력	기타	무응 답
학력 별	중졸 이하	(301)	18.9	1.0	10.6	52.8	2.0	8.3	5.6	0.7
	고졸 이하	(489)	22.5	0.8	8.6	58.5	1.6	4.9	3.1	0.0
	대재 이상	(528)	26.7	0.4	7.0	55.1	0.6	7.0	3.0	0.2
	무응답	(8)	37.5	12.5	12.5	25.0	0.0	0.0	12.5	0.0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업별 분포인데 직업과 정책지향성간의 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lt;표Ⅲ-15&gt; 투표결정기준에 대한 직업별 요인

구분		사례 수 (명)	투표 결정 기준							
			정책/ 공약	선거 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 자질 등 )	개인적 연고 (출신 지역 등 )	정치 경력	기타	무응 답
직업 별	전문직	(94)	23.4	0.0	6.4	54.3	1.1	8.5	6.4	0.0
	공무원	(26)	26.9	3.8	7.7	50.0	0.0	11.5	0.0	0.0
	화이트칼라	(180)	19.4	0.0	5.6	61.1	1.7	9.4	2.8	0.0
	자영업	(238)	22.3	0.4	6.3	60.1	0.8	7.6	2.1	0.4
	판매/서비스	(28)	25.0	0.0	7.1	64.3	0.0	0.0	3.6	0.0
	블루칼라	(59)	27.1	3.4	10.2	49.2	1.7	8.5	0.0	0.0
	농림어업	(65)	20.0	1.5	15.4	53.8	3.1	1.5	4.6	0.0
	학생	(156)	34.6	0.6	6.4	50.6	1.9	1.9	3.8	0.0
	가정주부	(250)	23.6	0.8	10.0	56.0	0.8	4.8	3.6	0.4
	기타	(90)	18.9	1.1	12.2	55.6	1.1	6.7	4.4	0.0
	무직	(120)	18.3	0.8	10.0	50.8	1.7	9.2	8.3	0.8
	무응답	(20)	30.0	0.0	15.0	45.0	0.0	10.0	0.0	0.0

위의 표에서 보면 정책지향성을 비교적 높게 보이는 직업군은 학생, 블루칼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른 문항에서도 학생은 비교적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고, 인지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하여 볼 때 한국에서 20대 젊은이들의 투표율이 낮고 정치적 관심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만 이것을 일반화하여 젊은 세대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이번 선거를 전후하여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서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졌고 정책지향성도 두드러지게 높다고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지향성이 비교적 높은 직업군은 블루칼라인데 서구에서 정당의 제도화 및 정책중심의 선거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층이 노동자 계층임을 생각할 때 다른 직업에 비해 블루칼라에서 정책지향성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과거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시절과는 달리 정치적 이익의 표출 및 이익의 집약과정이 민주화되었고 이것이 블루칼라들에게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읽을 수 있다.

## 나. 정책지향적 투표와 4가지 변수와의 관계

### 1) 가설

여기에서는 정책지향적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해보자.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분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모두가 합리적으로 투표한다고 상정하는데 유권자들은 이 범위내에서 크게 두가지의 투표성향을 띄는 것으로 생각된다<sup>62)</sup>. 두가지의 투표성향은 간단한 선택기준을 가지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와 복잡하고 세련화된 논리도구를 가지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유권자가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우리가 상정한 정책지향적 투표와 연결이 된다. 이 두가지 투표성향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교육수준, 정보량의 다과, 정보처리능력이다. 즉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정보량이 적을수록, 정보처리능력이 낮을수록 해당 유권자는 후보선택 기준을 단순화한다. 예를 들어 이 경우는 정보요약도구(Information short cut)를 사용하는데 정보요약도구란 정보량도 많지가 않고 정보처리능력도 없는 경우 정보를 요약하여 판단의 도구로 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빈부를 판단할 때 다양한 정보와 그것을 처리하여 그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차의 종류라는 단순화된 요약도구를 통하여 그의 경제상태를 판단하는 경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유형의 유권자들은 후보가 제공하는 단순화된 정보를 가지고 정보요약도구를 거쳐 후보를 선택한다. 반면 교육수준이 높고, 정보의 양이 많으며 정보처리능력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세련화된 논리적 도구를 사용하고 꼼꼼한 판단과정을 거쳐서 선택하는 성향이

62) Paul Sniderman, Richard A. Brody and Philip Tetlock, *Reasoning and Choice: Explorations in Political Psychology*(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참조

높다. 이런 점에서 전자의 경우는 인물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책지향의 선택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때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보의 양, 정보처리능력, 교육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학력별로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정책지향투표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이하에서는 정책을 보고 투표한 후보가 전체 중졸이하 유권자 응답자 가운데 18.9%에 그쳤으나 고졸이하에서는 22.5%, 대재이상에서는 26.7%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서 교육정도가 정책지향성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위의 표 III-14 참조).

정보량 및 정보처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설문조사에서는 정치적 인지도 및 관심도, 그리고 사회활동 경험을 살펴보았다. 정보량이 많고 처리능력이 있으면 정치적인 사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며 정보처리능력의 상승은 정치적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보량과 처리능력은 정치적 효능감으로도 표시된다. 즉 들어온 정보와 이를 처리한 결과치인 정보는 정치는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 결정은 유권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누구를 찍느냐하는 것이 정치를 바꾼다고 하는 효능감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험이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사회적 경험은 우선 다양한 정보를 얻게되는 채널이 되며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정보처리능력이 상승된다. 이미 다른 연구들에서도 나타났지만 사회적 경험을 가진 여성과 사회적 경험을 가지지 않은 여성들은 정치적 태도에 있

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sup>63)</sup>. 사회적 경험 가운데 단체활동 경험은 정치적 태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64)</sup>.

이런 전제하에서 우리는 위에서 4가지 변수를 설정하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정도, 정치를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정치와 관련된 활동인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그것이다. 정치는 눈에 보이거나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과 같이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목격되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따라서 정책지향적인 투표성향을 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치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여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투표하지 않거나 혹은 투표하더라도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신과 관련이 있거나 선호가 발생하는 정책을 지지하기 보다는 손쉬운 선택기준, 즉 인물을 선택하기 쉽다. 반면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경우는 정책을 꼼꼼히 검토하여 투표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들의 가설은 정치적 인지도이다.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책지향적이 될 것으로 가설을 세웠다. 즉 정치에 대한 지식이 많으면 그만큼 인물이나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기준을 가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정치적 인지도도 정책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였다.

세 번째는 정치에 대한 효능감이다. 즉 정치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던진 한 표가 정치를 바꾼다는 생각이 효능감인데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정책지향적인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요인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관련된 사회활동 예를 들어 단체활동 경험이 정책지

63) 백영옥,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1999), p.30

64)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각국의 투표행태 설문조사에서 사회단체참여는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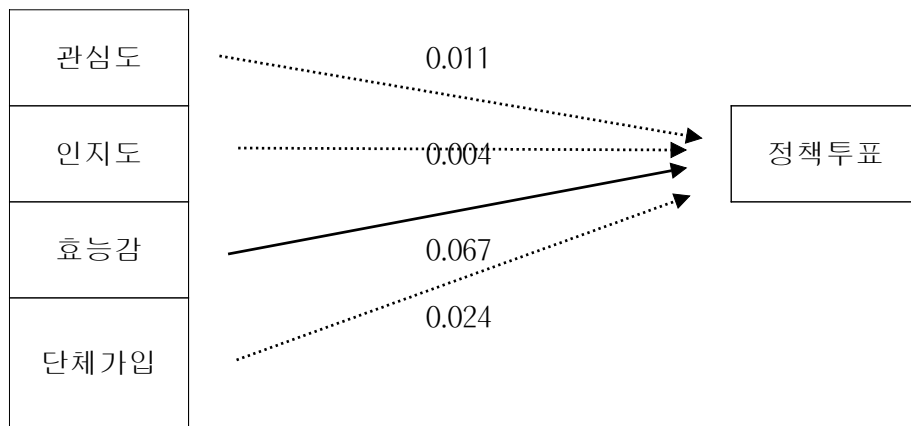
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즉 단체활동 경험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에 접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책지향성을 가지지 않을까하는 것이 연구자들의 의견이었다.

가설1 : 정치적 관심도가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 정치적 인지도가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3 : 정치적 효능감이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4 : 단체활동경험이 있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네 가지 가설을 중심으로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 2) 데이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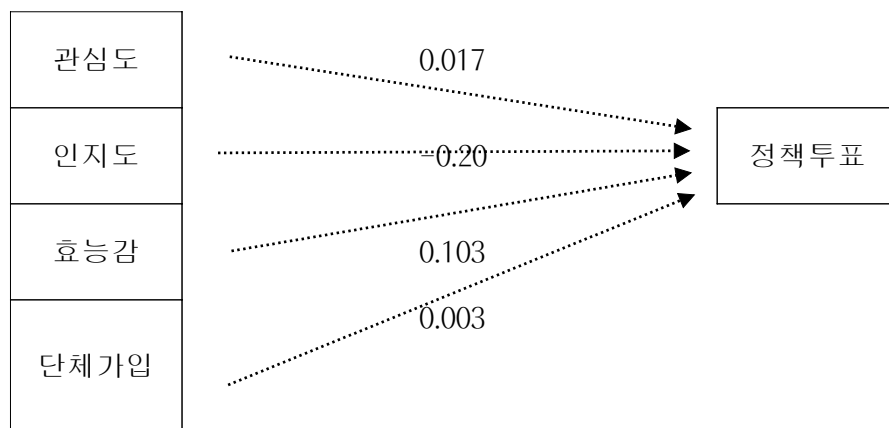
### 가) 전체



<그림Ⅲ-50>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남녀전체)

즉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보다 많은 정책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도, 인지도, 단체가입의 정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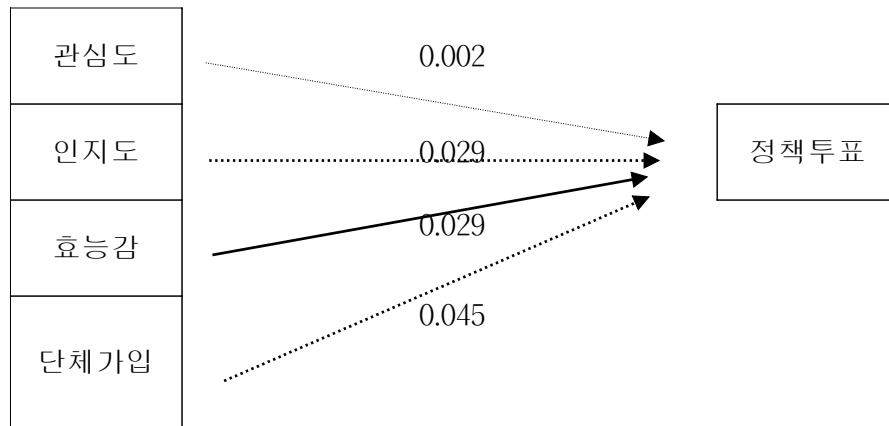


<그림Ⅲ-51>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남성)

역시 남성의 경우에도 전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효능감만이 정책지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다)여성

여성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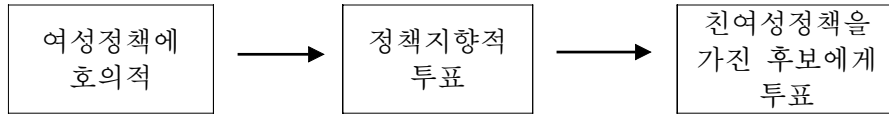


<그림Ⅲ-52> 정책지향성과 4가지 변수(여성)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전체에서 보여지던 효능감과 정책투표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고 있다. 정책지향적 투표를 한 여성의 경우에는 효능감과 인지도, 관심도, 단체가입 경험등에 있어서 어느 변수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절에서 보았듯이 사회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뿐 어떤 정치적 경로도 정책투표에 영향을 주지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라)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정책지향성에 관심을 가지는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책지향성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책지향적인 여성유권자가 여성들에게 유리한 여성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그래서 결국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여성에게 유리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는 가정으로부터 본 연구가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림으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성향과 정책투표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여성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의 경우에는 정책투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 3) 분석결과(가설의 검증)

#### 가) 정치적 관심도

앞 절에서 여성의 정치적 관심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 결과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으로 관심이 없지만 그것은 전통적인 무관심층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것을 정책투표성향과 연결하여 살펴보자. 정책지향적인 투표를 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정도를 비교한 계수값은 남녀전체적으로 볼 때 의미가 없다고 통계적으로 나왔다. 즉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다고 반드시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치는 정당 중심 혹은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중심으로 연결된 정당중심의 정치라기 보다는 인물중심의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은 많지만 이런 한국정치의 특성에 따라 인물중심으로 투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녀를 비교하여 보면 남성의 경우 관심도가 정책투표에 미치는 영향의 계수값은 0.017이고 여성의 경우 관심도가 정책투표에 미치는 영향은 0.002로 나타나서 남성의 경우가 약간 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값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남녀모두에게서 현재 영향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 나) 정치적 인지도

앞 절에서 보았듯이 여성의 정치적 인지도는 남성의 그것보다 뒤떨어지

는데 대통령의 임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나고 광역단체장에 관해서는 남성이 15%정도 많이 정답을 맞추었다. 정치적 인지도는 정치적 관심도와 같이 가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도가 낮은 여성들은 정치적 인지도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인지도에는 사회활동 경험, 직업여부 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부의 53%가 정답자인데 비해 공무원의 71.4%가 정답자인 것을 보아도 남녀간의 차이가 단순히 성별 요인만의 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지도와 성별관계에 있어서 chi-square p 값은 유의미한 값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났다.

정책지향성과 정치적 인지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른 3개의 변수에 비해서 가장 낮은 계수값이 나왔고 (물론 효능감을 제외하고는 통계적으로 의미는 없다) 남성에게 있어서는 역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여성에게서는 남성과는 달리 정상관관계가 있지만 그 값은 의미가 없었다. 남성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지 않는 성향을 보이지만 의미있는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약하지만 인지도가 높을수록 정책지향투표하는 성향이나 의미있는 관계는 역시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가설과는 달리 인지도가 정책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다. 즉 정치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반드시 정책투표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다) 정치적 효능감

다음은 효능감인데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응답이 78.1%('정말 그렇다' 22.9%, '그런 편이다' 55.2%)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21.1%('그렇지 않은 편이다' 18.9%, '절대 그렇지 않다' 2.2%)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특성가운데 바꿀 수 있다는 의미의 '그렇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61.6%), 직업별로 '전문직'(63.8%), '그런 편이다'라는 의견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바꿀 수 없다는 의미의 '그렇지 않다'

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농림어업'(7.6%)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지역별로 '대구/경북'(25.4%)에서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은 높은 편이며 효능감이 아주 높은 유권자도 전체의 22.9%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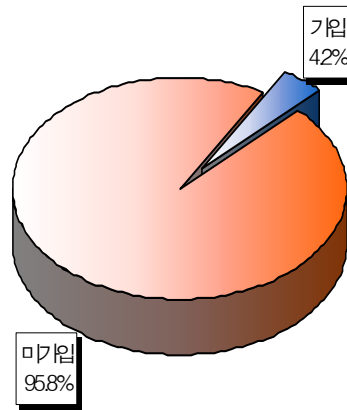
한편 효능감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있다'는 의견은 여자가 24.9%로 남자(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능감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s한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442로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효능감이 남녀에 따라서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아주 효능감이 높은 층에 여성이 약간 더 많고 절대 그렇지 않다에서도 여성이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나 효능감이 아주 높은 사람중에는 여성이 약간 많고 효능감이 아주 낮은 사람중에는 남성이 약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효능감이 정책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남성에서는 의미있는 정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여성에서는 의미있는 관계라고 하기에는 상관계수값이 낮았다. 그러나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성에게 있어서 관심도나 인지도보다는 약간 효능감이 정책투표에 관계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의 투표가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정책지향적 투표를 하는 경향이 다소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볼 때 여성의 경우에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아직 정치적 효능감을 정책지향투표로는 표출하지 못하는 것 같다.

#### 라) 단체활동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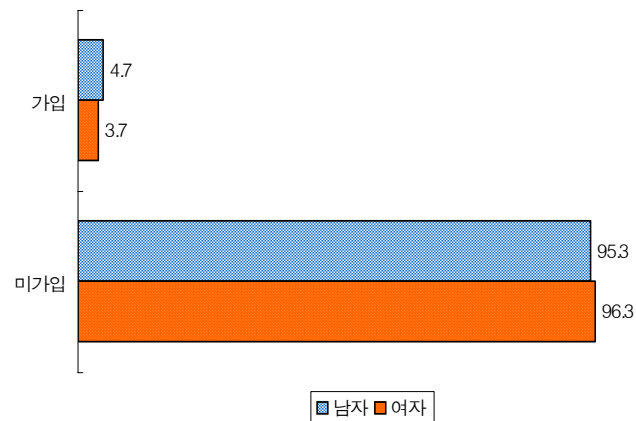
네 번째 변수는 단체활동여부인데 우리는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당, 혹은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2%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95.8%는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그림Ⅲ-53>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 여부 (전체)



여성 가입자는 여성응답자 가운데 3.7%였고 남성가입자는 남성응답자 가운데 4.7%로 남성이 비율적으로 약간 많았다. 그러나 chi-square의 p 값을 보면 성별이 유의미하지는 않다.

<그림Ⅲ-54>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 여부 (성별)



단체가입과 정책투표성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니 그 계수값은 남성의 경우 0.003, 여성의 경우 0.0045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높지만 양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그래서 단체가입경험이 있다고 꼭 정책투표성향을 가지는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전체의 4%만이 단체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입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 분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체가입의 비율이 조금 증가한 이후에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을 지어야 할 것이다.

## 5. 소결 및 요약

우리는 이 장에서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우선 본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 직후 만 20세 이상의 남녀 유권자 1500명을 표본으로 하여 16대 대통령선거 관심 및 공명도,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결정,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지향적 투표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로 다단계 층화 표집방법에 의한 150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0.7%, 남성이 49.3%이고,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28.5%, 30대 25.5%, 20대 23.8%, 40대 22.2%로 전체연령층이 골고루 조사에 응답을 하였다. 학력별로는 대재이상 40.1%, 고졸 37.3%, 중졸이하 22.0%이다.

16대 대선에서 투표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8.4%로 선관위에서 조사한 투표율인 70.3%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다. 이것은 선거후 조사라는 점과 대인면접조사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 투표하지 않은 응답자들의 양심적 보상심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남녀간에 있어서 투표한 남성응답자는 89.7%이고 여성응답자는 87.1%로 남성응답자가 약간 높고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남성응답자는 10.3%로 12.9%가 투표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여성응답자보다 많았다. 조금 세분화하여 연령별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20대에서는 82.1%가 투표하였지만 50대 이상에서는 93.5%가 투표하여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94.7%로 대구/경북의 91.1%보다 높았다.

한편 여성들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동원투표 혹은 비주체적 투표행태는 점차 감소하면서 남녀간에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변수를 성별과 더불어 파악하면 일반적으로 성별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성별 교육정도의 차이가 두드러져서 중졸이하의 남성은 35.8%의 투표참여율을 보인데 비해 여성 중졸이하는 64.2%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재이상의 고학력에서는 남성이 58.1%, 여성이 41.9%로 오히려 남성이 10%이상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치적 관심도인데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은 84.5%('매우 관심이 많았다' 43.5%, '조금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은 41.0%)인 반면, '관심이 없었다'는 의견은 15.5%('전혀 관심이 없다' 1.8%, '별로 관심이 없다' 13.7%)로 조사되었다. 선거관심도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관심이 있었다'는 의견이 남자가 88.5%로 여자(8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선거관심도와 성별간의 관계를 교차분석해본 결과 선거관심도에 대해 성별의 차이가 있으며 그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다음으로 효능감에 대해 알아보자.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은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한 느낌의 정도로 알아보았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8.1%('정말 그렇다' 22.9%, '그런 편이다' 55.2%)로,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 21.1%('그렇지 않은 편이다' 18.9%, '절대 그렇지 않다' 2.2%)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효능감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 보면, '있다'는 의견은 여자가 24.9%로 남

자(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효능감에 대한 성별 chi-square를 보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정치적 효능감에 대한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통령 임기'와 '광역단체장' 인지여부를 조사하였다. 먼저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인지를 물어 면접원에게 그에 대한 정답 여부를 기재토록 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인 91.9%가 대통령의 임기를 제대로 알고 있었으며, 8.1%만이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해 성별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임기를 정확하게 답변한 비율이 남자가 94.3%로 여자(89.6%)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임기 인지 여부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해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인지에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6가지 변수(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여성정책, 단체가입)가 성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투표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및 여성정책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정책 변수만이 여성과 정상관성(여성일수록 호주·호적제 폐지에 찬성)을 가지며, 나머지 세 변수는 남성과 정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섯 변수 중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수는 남녀 공히 영향을 미치며 그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남녀의 성차가 있는지 알아보자.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이회창'을 찍었다는 응답은 38.4%인 반면, '노무현'을 찍었다는 의견은 55.9%로 나타나 실제 투표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선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장되어 나타나며, 낙선후보에 대한 지지는 과소되어 나타난다. 예컨대 노무현 후보의 실제 득표율은 48.9%인데 설문조사에서는 55.9%로 나타나고 이회창후보의

경우는 실제 46.6%인데 조사에서는 38.4%로 축소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조사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선거후 조사라는 점과 당선자 편에 서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이한동'을 찍었다는 응답은 0.1%, '권영길'을 찍었다는 응답은 4.7%, 장세동을 찍었다는 응답도 0.1%로 나타나고 있다.

지지후보를 성별로 분석해보면,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견이 남자가 57.2%, 여자가 54.6%로 여자 보다 남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견은 남자가 37.3%, 여자가 39.5%로 나타나 여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투표대상에 대한 응답을 Chi-Square Test한 결과,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수준이 0.526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에 지지후보가 다른 것은 첫째, 지역동조 투표의 압력을 들고 있다. 지역균열에 기초하고 있는 한국은 각 정당에 대한 동조투표 압력이 아직도 강하게 작용하고 그러한 압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강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16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보면, 아직도 그러한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변수는 연령변수이다. 이러한 발견은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세대요인이 강하게 작용한 선거였다는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은 기존 연구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세대요인의 영향력은 지역주의 요인과 비교한다면 약한 것이지만 여타 요인보다는 강하다는 것이다. 그 외에 소득, 성별, 학력, 도시규모 등의 변수는 노무현 후보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번 선거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본다면 지역과 세대간 대결이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남녀간의 성차에 호소하는 의제가 선거과정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현상은 14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이남영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남녀를 가르는 의제가 주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노무현/정몽준 선거공조(19.9%), 행정수도 이전(18.7%), 북한 핵시설 재개(11.5%) 등이 지지후보 결

정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여성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응집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셋째,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견을 쫓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혼전에는 부친의 영향, 결혼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정치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주체적 투표행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유권자의 정책지향도인데 우선 지지후보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16대 대선과 15대 대선을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찍어 줄 후보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인물/능력’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5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공약’(23.5%), ‘소속정당’(8.4%), ‘정치경력’(6.5%), ‘개인적 연고’(1.3%), ‘선거법 준수여부’(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물/능력, 정책/공약 등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후보 결정기준에 있어서 남녀간의 유의미한 성차는 없는 것으로 이번의 조사결과가 나타났다. 인물/능력을 기준으로 선택한 여성유권자는 56%였으며 남성유권자는 남성응답자 전체의 55.4%였고 정책 및 공약을 선택한 응답자는 여성가운데 24.1%, 남성가운데 22.8%였으며 ‘소속정당’이라는 의견은 남자가 7.5%로 여자(9.4%)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성이라는 변수가 지지후보 결정기준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은 정책에 있어서 젠더갭인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선 일반 정책에 대한 젠더갭을 살펴보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젠더갭을 살펴보았다.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젠더갭이 나타나리라고 예상하였지만 일반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까지 부분적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는 조사된 적이 없어서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서구와 비교하여 그다지 뚜렷하게 젠더갭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여성 유권자들은 서구에 비해서 정치적 관심도에서 뒤떨어지고 또한 지지후보 결정 등에 있어서도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정치적 인지도도 뒤떨어지는 등 정치화의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는데 익숙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 예상은 빗나갔다. 성변수는 각각의 문항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태도를 보이게 하는 유의미한 변수임이 나타났고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더 보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특별히 여성과 관련이 있지 않은 일반정책을 살펴보면 이번에 설문문항 가운데 모두 일곱 문항이 이에 해당하는데 마지막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문항의 경우에만 성변수가 정책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되었고 나머지 6항목의 경우에는 성변수가 각각의 정책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북정책, 경제정책, 대미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및 보안법폐지라고 하는 중요한 법질서의 전환에 관하여 성에 따라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 및 서구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정책에서 젠더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은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정치에 접근하고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남성과는 상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목	찬성		반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대북지원은 지속되어야 한다.	46.9%	56.2%	46.9%	41.8%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38.6%	45.8%	47.3%	48.3%
SOFA협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75.3%	69.0%	15.9%	18.6%
복지수준이 높아져야한다	54.7%	62.4%	40.3%	34.5%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한다	43.4%	51.8%	36.9%	41.4%
기여입학제에 찬성한다	26.0%	33.0%	61.3%	59.8%
환경보전이 필요하다	72.4%	75%	20.1%	20.1%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 설문조사를 분석하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이데올로기 성격을 보수와 진보의 두 극단점을 놓고 볼 때 진보적인 견해는 평등지향적, 인권지향적, 군비축소지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개발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계속되어야한다는 주장인데 이에 대한 동의는 진보적인 견해로 판단할 수 있다. 두 번째 문항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인데 진보주의자들은 산업이 아니라 사람이 국가의 으뜸자원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수요측면의 경제정책을 선호하며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조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에 동의한다. 따라서 두 번째 문항의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간섭의 배제에 동의하는 것은 보수적인 경향을 의미한다. SOFA 협정의 개정에 대한 견해는 전통적 진보-보수의 선상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복지수준의 확대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모두 진보적 정책이다. 환경보전 역시 진보적 정책에 속하고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은 보수적 정책으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눌 때 대체로 한국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의 젠더갭이다. 여기에서 네 문항 모두에서 성변수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변수가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남성이 더 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세번째 문항제외) 적어도 이 설문에서는 한국 남성응답자들의 달라진 태도를 읽을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항목	찬성		반대	
	여성	남성	여성	남성
국회의원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43.3%	51.8%	19.7%	33.1%
여성의 조직참여는 확대되어야한다	43.4%	51.8%	10.7%	21.6%
여성의 최적직업은 주부이다	25.3%	31.1%	71.4%	66.6%
호주제는 폐지되어야한다.	70.3%	64.4%	16.6%	25.8%

다음은 정책지향적 투표에 있어서의 젠더갭이다. 우선 남녀별로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연령별로 나누어서 보면 정책지향성이 가장 약한 연령은 50대 이상으로 이 연령대에서는 주로 인물 다음으로 정책을 기준으로 택하지만 소속정당 및 선거법 준수여부를 다른 연령보다는 더 중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학력별에 의한 차이인데 전체적으로 유사하지만 중졸이하에서 비교적 낮게 정책지향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업별 분포인데 정책지향성을 비교적 높게 보이는 직업군은 학생, 블루칼라, 공무원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정책지향성의 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관하다고 생각되는 4가지 변수를 설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정치에 대한 관심의 정도, 정치에 대해서 아는 정도, 정치를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그리고 실제로 정치와 관련된 활동인 단체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그 4가지 변수이다. 정치적 관심이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정책지향적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우리가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투표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었는데 이것이 또한 정책지향적인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요인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관련된 사회활동 예를 들어 단체활동 경험이 정책지향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 가설1 : 정치적 관심도가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2 : 정치적 인지도가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3 : 정치적 효능감이 높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4 : 단체활동경험이 있으면 정책투표성향이 높아질 것이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남녀 전체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 보다 많은 정책지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심도, 인지도, 단체가

입의 정도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효능감이 정책지향성 정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전체에서 보여지던 효능감과 정책투표의 상관관계가 사라지고 있다. 정책지향적 투표를 한 여성의 경우에는 효능감과 인지도, 관심도, 단체가입 경험등에 있어서 어느 변수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수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태도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여성정책은 호주제폐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질문하였는데 호주제폐지에 대해서 긍정적인수록 정책투표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는 결론이다.

이로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책투표성향은 낮으며 이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듯한 요인들과도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체활동 경험도 상당히 낮고 오랫동안 정치의 권위주의화의 영향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소외감 등이 높아 정치적 관심이 낮으며 인지도도 낮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정책투표성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체활동경험의 증대, 효능감의 증대 등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호주제 폐지정책과 같은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정책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IV



요약 및 제언

---

1. 요약	137
2. 제언	142



## 1.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세 가지에 두었다. 첫째,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과거에도 나타났는지 하는 것과, 둘째는 16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보였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여성의 정치세력화 차원에서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였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로서 성차가 과거에도 보였는가의 의문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역대 대선, 총선, 지방선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투표율에 있어서 성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실제, 역대 각급 선거에서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에 비하여 2-3% 적어 투표율에 있어 약간의 성차를 보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선거관심도의 측면에서는 성차는 1980년대까지의 여성이 남성보다 선거에 관심이 적은 경향을 유지하되 그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젊은 층의 경우 성차를 보이고 있었다. 실제, 1998년 실시한 제2차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경우 연령별·성별 투표율에 있어 60세 이상의 남성투표율이 80.2%로 가장 높았고, 20대 여성투표율이 27.0%로 가장 낮았다. 이는 동일연령대의 남성에 비해 15%이상 낮은 투표율이다. 그런데, 투표 불참의 이유로 젊은 층은 남녀 모두 '정치적 관심이 없고, 정치에 자신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50대 층은 '생업에 바빠서'가 많았다.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하여, 물론 정치이론적인 측면에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하나의 정치참여의 방법이긴 하나, '알기 때문에 불신하는 것'과 '개인사정에 의해 선거에 불참'하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물론 선진국의 경우도 젊은 여성들의 정치투표율이 낮기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해결해야 할 여성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특히 젊은 층 여성들의 투표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개가 필요하다.

다음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준거집단에 있어서는 성차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1차 집단에 의해서 후보자 결정에 있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친구나 동료와 같은 2차 집단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92년 제15대 총선시 조사에서도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22.4%로 남성의 10.7%에 비하여 11.7% 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가족 중 영향을 많이 받은 가족구성원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구주(아버지)가 가장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2.1%로 가장 많았고, 30대 10.5%, 40대 5.9%, 5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15.9%로 남성 4.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여성개발원이 제16대 총선 이후 수도권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유권자의 경우 가족과 상의했다는 여성은 30%로 남성 2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는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표했다는 비율이 80%에 달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은 투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학력과 사회참여가 신장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여성의 주체적인 정치의식을 가지도록 체계적인 관련 교육이 필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와 관련하여 그간의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 남녀유권자들은 후보결정에 있어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인물이나 경력'을 가장 중시 여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에 실시한 제16대 총선 에서는 예외적으로 '후보자의 지지 정당'을 가장 중시여긴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여성개발원(2000년)이 16대 총선 이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들에 비해 여

성을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과거 여성이 여성을 안 찍는다는 가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여성유권자들의 학력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와 함께 앞으로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는데 있어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로서 여권투표(Feminist vote)의 성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16대 대선의 경우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보였는가?하는 점에 대하여는, 본 연구를 위해서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16대 대통령선거 직후 만 20세 이상의 남녀 유권자 15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선거 관심도 및 공명도, 투표참여와 지지후보 결정,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정책지향적 투표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에서의 성차에 대한 실태분석과 그에 대한 설명을 위해 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여성정책, 단체가입을 매개로 하여 알아보았다.

우선, 16대 대선에서 투표했다는 의견은 전체 응답자의 88.4%로 선관위에서 조사한 투표율인 70.8%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왔다. 투표행태에 있어 동원투표 혹은 비주체적 투표행태는 점차 감소하면서 남녀간에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변수를 성별과 더불어 파악하면 일반적으로 성별과 교육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에 있어서는 남성이 88.5%로 여성(80.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 성차를 보이고 있었다.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성에 대하여는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특히 여성이 24.9%로 남자(15.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 남녀간의 성차를 보이고 있었는데, 남성의 인지도가 여성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투표참여 여부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는 투표행태에 영향을 주는 6가지 변수(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여성정책, 단체가입)가 성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투표로 이어지는지를 분석함에 있어, 성별에 의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및 여성정책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여성정책 변수만이 여성과 정상관성(여성일수록 호주·호적제 폐지에 찬성)을 가지며, 나머지 세 변수는 남성과 정상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여섯 변수 중 투표행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효능감, 인지도, 공정성, 관심도 등 4가지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있어 여섯 변수 중 투표행태로 이어지는 변수는 없으나 남성의 경우, 인지도, 관심도, 공정성 등 세 변수가 투표행태로 연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남녀의 성차는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했다'가 남성의 경우 57.2%, 여자가 54.6%로 여자 보다 남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의견은 남자가 37.3%, 여자가 39.5%로 나타나 여자 쪽이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소득, 성별, 학력, 도시 규모 등의 변수는 노무현 후보 지지에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였고, 지역과 세대간의 차이가 컸다.

남녀간의 성차에 호소하는 의제가 선거과정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역시 남녀를 가르는 의제가 주요한 선거이슈로 등장하지 못하고 노무현/정몽준 선거공조(19.9%), 행정수도 이전(18.7%), 북한 핵시설 재개(11.5%) 등이 지지후보 결정에 영향을 준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았다. 결과적으로 여성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유권자의 응집력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분석된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남성의 의견을 쫓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이 과거의 정설이다. 결혼전에는 부친의 영향, 결혼후에는 남편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미덕으로 간주되는 정치문화적 전통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비주체적 투표행태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다음은 유권자의 정책지향도인데 우선 지지후보 결정요인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16대 대선과 15대 대선을 비교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찍어줄 후보를 정할 때 무엇을 고려하였는지에 대해, ‘인물/능력’을 고려했다는 의견이 55.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정책/공약’(23.5%), ‘소속정당’(8.4%), ‘정치경력’(6.5%), ‘개인적 연고’(1.3%), ‘선거법 준수여부’(0.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권자들이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인물/능력, 정책/공약 등을 주요 결정기준으로 판단하여 이번 선거가 정책선거로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정책에 있어 젠더 갭의 경우 한국 유권자들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들이 보다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관련 정책에 있어서의 젠더갭의 경우로 성변수가 여성정책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정책투표성향은 낮으며 이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듯한 요인들과도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단체활동경험도 상당히 낮고 오랫동안 정치의 권위주의화의 영향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 소외감 등이 높아 정치적 관심이 낮으며 인지도도 낮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정책투표성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단체활동경험의 증대, 효능감의 증대 등을 위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한편 호주제 폐지정책과 같은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정책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경향은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과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개인, 정부, 단체, 언론, 연구기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제언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경향은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과 여성정책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여성들의 정책지향적 투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여성유권자들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과제로서의 정책지향적 정당으로의 변화와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개인, 정부, 단체, 언론, 연구기관, 정당의 역할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가. 정책지향적 정당으로의 변화와 당내 민주화 체제 확립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최근에 실시했던 제3차 동시지방선거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당이 인물중심의 정당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하려는 정치풍토가 미약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무엇보다 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정책지향적 정당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내 민주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나라의 정당들은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참여나 훈련 경험없이 그리고 남녀평등에 대한 이해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 최고책임자나 몇몇의 정당내 핵심인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명 하달식 주종관계나 파벌주의 양태를 지녀왔다.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정당들은 당내 민주화와 함께 여성들이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매력적인 정책 정당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약속한 공약에 대하여 반듯이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연구,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여성유권자 개인의 역할

### 1) 여성유권자 스스로의 자각

여성유권자들은 과거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남성유권자에 비해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992년 제15대 총선거 같은 조사에서도 후보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여성 비율은 22.4%로 남성의 10.7%에 비하여 11.7% 포인트 높게 나타났고, 본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2년)의 연구에 의하면 가족 중 영향을 많이 받은 가족구성원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구주(아버지)가 가장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20대가 22.1%로 가장 많았고, 30대 10.5%, 40대 5.9%, 50대 2.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은 15.9%로 남성 4.1%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한국여성개발원이 제16대 총선 이후 수도권의 1,000명의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유권자의 경우 가족과 상의했다는 여성은 30%로 남자 24.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여성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과 상의는 했지만 당초 계획대로 투표했다는 비율이 80%에 달해 과거에 비해 여성들은 투표 결정권을 행사하는데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16대 대선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성의 학력과 사회참여가 신장하면서 남녀평등의식이 확산 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 스스로가 남녀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더 이상 정치문제가 남성만의 영역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2) 여성유권자의 투표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적극 참여

### 가) 여성유권자의 100% 투표참여를 통한 세력화 형성

금번 대선결과 유권자의 평균투표율은 70.8%로 과거의 대선에 비하여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금번 대선 결과 남녀간 성별투표율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간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에 비하여 2-3% 적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유권자들의 주권행사 포기는 금물이다. 이는 결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치적인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데 주권행사의 기권은 결국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앞으로 취업문제, 교육문제, 복지문제 등 자신들과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 해결되어져야 할 사항이 많기에 더욱 기권해서는 안되며 적극 투표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 3)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를 통한 세력화

### 가) 공명선거/의정감시 활동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공명선거 감시활동의 경우 위법한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일로,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인 투표권이 금전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 깨끗한 선거는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를 보면 선관위나 민간 선거감시단체에 고발하여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이후에는 의정감시 활동을 하면서 정치가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 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의 참여

현행 선거법에 의하면 유권자는 누구든지 후보를 위해 특별한 등록없이 선거운동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선거비용이 적게 들고, 선거문화가 비교적 깨끗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컸던 데서 비롯된 것으로 댓가를 바라지 않고, 바람직한 사

회로 나아가게 하는 주체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 다. 정부의 역할

### 1) 예산 지원 확대를 통한 여성의 정치참여 여건 강화

금번 16대 대선의 평균투표율은 70.8%로 낮았는데, 성별 투표율은 집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간의 대선 결과를 살펴볼 때, 여성유권자의 경우 남성에게 비해 아직 투표율이 2-3% 저조할 뿐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 관심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 조사결과 16대 대선에 대한 관심도는 남성이 88.5%로 여성의 80.7%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적극적인 관심층이 '매우 많았다'의 경우 남성이 50.1%, 여성이 37.2%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 나타난 유권자 통계를 살펴보면, 특히, 20대 전반의 여성의 투표참여율이 지극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을 위하여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사회교육기관과 여성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여성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시민단체들 중 민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로는 YMCA, YWCA, 걸 스카웃, 청소년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이 있다. 특히, 여성단체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교육은 일회성이 많으며,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시민단체들의 민주정치교육의 전문화가 요구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고 민주정치 의식을 확산해가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들은 보다 여성유권자 의식교육의 전문화를 기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성부는 적극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들어 여성부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증가되지 못한 상황인데, 여성부의 관련예산을 증액하여 여성유권자 의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쓰도록 적극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국가차원의 여성시민교육원의 설치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권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정당개혁과 정치자금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설립한 연방정치교육원과 같은 시민교육원의 설치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민주주의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국가는 민주정치교육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15대 국회회기중 국가차원에서 국민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진흥법(안)을 상정하였으나, 16대 국회의 출범으로 현재 폐기된 상태에 있다. 16대 국회중 동 법(안)을 다시 상정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하여 국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는 여성정치지도자를 육성하고 국가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해나갈 수 있도록 여성시민교육원을 설치하여 유권자 및 의정감시, 후보자, 선거참모, 차세대 여성지도자 등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선진화된 시민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에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여성개발원에 그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서의 성별 통계 분리 산출 의무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결과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그간의 각종 선거결과를 볼 때, 선거결과에 대해 때로는 성별로 분류된 통계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상당부분의 선거결과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으로 지방 선관위에서 선거결과 집계에서 성별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서 남녀간 성차 및 성별 분류를 통한 여성정책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거결과에 있어 성별분리 통계의 산출 의무화가 요구된다.

## 라.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여성단체의 역할

### 1)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정치인 양성 및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부산의 여성정책연구소, 여성단체연합, 여성사회교육원과 걸스카웃 등이 있다. 그러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화되어있지 않고, 일회성의 성격이 강하다. 앞으로는 여성단체들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전문화와 지속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내실화를 위하여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하고,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강사은행을 설치하여 연계망을 구축토록 한다. 그리고 교육이 수생들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여성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정치교육의 내실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방법에 있어 피교육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방법으로 전환한다.

교육방식의 전환은 교육생을 모집하고 효과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해야 할 부분이다. 이제 더 이상 일방적 강의식 교육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실제 교육방법에 있어 학습방법에 따라 그 효과는 달라지는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앞으로의 교육은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에 의한 교육방법을 탈피하여 참가자의 의견발표와 상호간의 의사소통, 직접 실습과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참가자가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배

울수 있는 참여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체적 태도와 가치관을 바꾸어 놓는 교육이야말로 살아있는 교육이자 사회교육의 핵심이 아닌가 한다. 예를 들어 ‘정치에 참여하라’가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환경문제, 교육문제, 교통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실행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참여식 교육방법으로 강의할 진행자나 강사를 육성하는 교육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성단체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기한다.

우리 나라 여성들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고 시민의식을 확산해가기 위해서는 여성정치교육을 담당하는 여성단체에서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시간을 갖춘 현장성 있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맞는 교재와 지침서를 제작·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로 관련 전문분야의 강사은행을 설치하고, 연계망을 구축토록 한다.

사회교육의 발전은 유능하고 전문성을 가진 강사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역에 따라 전공별 강사은행을 구성하고, 강사들이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관련 정보와 지식을 교환, 교류할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한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의 진행자 내지 강사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개최하여 여성정치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함께 후속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이수생들이 실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유권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 및 재교육, 국회 등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하여 교육을 제공한 단체 및 사회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력은행제도의 도입이 요청된다. 즉, 연령별, 활동 희망 영역별로 구분하여 지속적인 정치의식, 여성의식 재교육의 기회와 정기적인 재교육 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정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미국의 걸 스카웃([www.girlspipeline.org](http://www.girlspipeline.org))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정당과 후보들의 선거참모나 자원봉사자들에게 전산망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지위향상과 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사회교육기관에서도 정당이나 사회단체에서 필요한 관련 인력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연계망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2) 여성의 정치적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1991년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의회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일부 여성단체가 여성의 지방의회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으로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을 구성한 이래, 지속적으로 연대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여성정책평가 토론회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성단체간 횡적, 종적 연대를 해나가면서 특히 정치권에 여성의 대표성이 고려된 선거제도의 채택 등을 촉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 3) 여성운동과 시민운동과의 연대

여성단체 중 타시민단체나 지역단체와 연대활동을 벌이는 단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대의 대상을 여성단체에 제한하지 않고 자기단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지역내 타 사회단체로 횡적 연대를 확대한다면 단체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실제, 참여연대, 경실련, 한

국유권자운동연합 등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경우 극히 제한 적인데,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간 연대하여 여성의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효능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4) 여성단체들의 유권자운동의 확대를 통한 정치세력화

우리나라의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낮은 정치적 지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할당제 도입을 위한 연대활동의 전개, 둘째,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교육, 셋째, 여성후보의 발굴·육성 및 선거지원 활동, 넷째, 의정감시 활동, 다섯째, 공명선거 조성 등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일들은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커다란 기반이 되어 왔다. 앞으로도 여성단체들은 독자적으로 때로는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유권자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나 가야 할 것이다.

#### 5)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한 여성의 정치세력화

16대 대선을 보면서 사이버 공간의 위력을 볼 수 있었는데, 여성단체들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유권자들간 첨단 캠페인 기법을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e-카드 보내기 운동(한사람이 열사람에게 여성후보지지 및 여성유권자 세력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을 요청하는 식의 e-카드를 보낸 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피라미드 조직식으로 열사람에게 e-카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쓴다), e-사인운동 전개(컴퓨터를 활용한 후보지지내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하요 서버에 사인을 받는 방법), 사이버 멘토링 시스템 구축(정치에 관심이 있는 후배와 선배간의 사이버 멘티와 사이버 멘토로 연결해 주는 방법), 주제별로 사이버 토론장을 개설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마.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역할 : 여성유권자에 대한 정기적인 투표 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

그동안 우리나라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198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라 하여도 여성을 중요변수로 잡고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다. 여성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조사연구는 1990년 이후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 조사연구는 예산이 많이 들어 그간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부 학자나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여 왔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이러한 조사연구의 부재는 결국 여성유권자들의 투표행태의 문제점과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치의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 및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후 실시하는 조사에 대해 한국여성개발원과 협력하여 함께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바. 여성유권자의 주체적인 투표참여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매스컴의 역할

금번 16대 대선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인기는 없으나, 과거보다 매스컴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TV와 신문사 등 언론사가 주관이 되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전개하고 있는데, 언론사들은 대선 후보초청 토론회를 자주 마련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집안에서 각 후보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언론이 얼마나 공정하게 다루면서,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세몰이식 고비용구조의 선거운동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룬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16대 대선후 남성유권자와 여성유권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남녀유권자 모두 후보를 선택하는데 있어 TV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여성들의 경우 투표행태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여성들은 특별히 선거유세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안방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의 정견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어 금번 선거이후 여성들은 보다 주체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 후보를 선택하는 경향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중매체를 통한 선거운동방법의 확대는 고비용의 선거운동비용을 절감하여 결국 바람직한 정치문화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언론들은 올바른 사회의식과 시민의식 확립에 앞장서야 할 사명감을 가지고, 평등한 성역할 관념의 확산을 통해 여성의 정치참여 문체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 사. 여성의 정치력 강화 및 정치훈련기회 확대를 위한 정당의 역할

금번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국회 및 지방선거에 여성후보공천을 비례대표 50%이상, 지역구 30% 정도를 하겠다고 대여성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제까지 정당들은 여성당원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에 남성후보를 지원하고, 당의 주요 행사장 분위기를 돋보이게 하는 동원부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당은 여성당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남성당원에게 제공하는 지도자교육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정치지도력을 육성하고 지구당을 운영하며 의회에 진출하도록 대폭적인 기회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훈련기회의 제공은 능력을 향상시키며 필요시에 적재적소

로 배치될 수 있고, 정치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준비된 인력을 키우는 필수적인 단계이다. 아울러 여성유권자 의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함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치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정치인을 육성하고 '여성지도자 육성기구'를 설치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도자양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V

.....

결론

\_\_\_\_\_



이상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여성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제16대 대선후 남녀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유권자의 정치세력화 방향」으로 정당차원의 기본과제와 유권자 개인, 정부, 여성단체, 매스컴, 정당들이 해야 할 역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결국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가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으로는 ‘여성계의 정치세력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가 강한 나라로서 유권자의 여성정치에 대한 관심 부족, 여성정치인의 부족, 여성을 대표하는 선거제도의 부재, 정당의 여성정치 참여 지원 부족 등이 바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일차적으로 여성유권자 스스로의 자각과 함께 여성운동의 적극적 전개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단체, 정당, 학계 및 연구기관, 정부, 언론들이 함께 연대활동의 전개를 통해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 이래 특히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정치참여가 신장되어 2002년 현재 하원의원의 경우 12.0%를 차지하여 1970년대에 비해 5배이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운동가들의 관심 속에 보다 많은 여성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들어가야 남녀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1971년 여성정치연맹을 설립하고 여성유권자연맹, 전국여성조직, 여성선거운동기금, 미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의 단체 및 연구소와 함께 연대하여 여성후보자의 발굴에서 부터 후보자 교육 및 훈련, 차세대여성지도자 연수, 유권자 의식교육 및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를 육성하여 여성후보자를 당선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데서 그 주요요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있을 각종 선거에 대비하여 여성들은 스스로의 자각과 함께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여성단체의 경우 여성유권자 교육과 연대를 통한 여성정치세력화 형성, 학계 및 연구기관은 유권자 및 여성

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식변화를 위한 프로그램과 자료의 제공과 함께 앞으로는 TV 등 언론이 여성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연구하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당은 정치쇄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당의 자체 개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여성단체들이 교육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매스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 성고정관념을 고착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인식을 하고, 이제는 올바른 남녀평등 이념관을 확립하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여성정치인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프로그램을 혁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여성유권자의 세력화를 위하여는 보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의 각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면서, 직장 생활을 통해 스스로가 정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접적으로 여성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 향상 교육은 특히 자아정체감의 확립과 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 두 번의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정치의식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본적으로 생활 속에서 정치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의무적으로 시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정치인과 여성정책을 적극 제시하는 후보나 정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성유권자들이 남성유권자에 비해 여성후보를 보다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상당수의 여성유권자들은 여성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간 경험을 놓고 볼 때 여성의원들이 보다 착실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권익신장이나 여성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여성위원을 적극 지원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여성유권자의 투표율이 남성투표율보다 높아지면서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만약 하락추세가 지

속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는 힘을 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투표에 참여해서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행태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도 자신들이 내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여성유권자들도 보다 적극적인 시민단체 활동이나 공명선거 감시운동과 의정감시 활동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3), 「각종선거 및 국민투표 등 결과통계 분석 (1975-198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pp. 180-19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조사 (‘97. 12. 18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역대 대통령선거상황(초대-14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투표율 분석-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98.6.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98.7.2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총람」, pp.258-27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8),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97. 12. 18 시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규집」.
- 고갑희(1999), “성계급과 성의 정치학에 대하여”, 「여성이론」 통권 제1호, 여성문화이론연구소.
- 김광웅(1985), “민주의식과 투표행태”, 한국정치학회·재북미한국인 정치학자, 「제6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0), 「정당의 여성당직자 확대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1), 「해방후 한국여성의 정치참여현황과 향후 과제」,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김혜영·김은경(2002), 「정당의 여성공천할당제 활성화 방안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김주숙(1997), “지역여성운동과 지역 사회복지관의 연계성연구”, 「한신논문집」.
- 김행자(1985), “여성의 정치참여행태”, 「여성학」, 서울: 이대출판부.

- 배성동·길영환·김종립(1975), “한국인의 정치참여행태와 그 특성”, 한국 정치학회 재북미 한국인 정치학자, 「제1회 합동학술대회논문집」.
- 백영옥(1992), “여성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여성과 정치」, 서울: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 백영옥(1999),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1999년 연구용역보고서(미간행).
- 손봉숙·조기숙(1995), 「지방의회와 여성엘리트」, 서울: 집문당.
- 신도철·민병원(1990), “민주정치의식과 정치성숙도”, 「한국의 선거정치학」, 서울: 나남.
- 신명순(1985),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서울: 법문사.
- 염미경(1996), “지방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자의 선거과정”, 「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 오유석(1999), “여성과 정치”, 「새로 쓰는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 이남영(1985), “산업화와 정치문화: 민주의식변화를 중심으로-1974년과 1984년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 이병길, “한국여성의 투표성향”, 「선거관리」, 1973년 No.2.
- 이승희(1993),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회(1971), 「한국도시 여성유권자 정치행태에 관한 조사보고서」
- 전경옥·노혜숙·김영란(1999), 「여성의 정치적 권리인식과 정치참여」, 서울: 집문당,
- 정무장관(제2)실(1994), 「한국 여성유권자의 선거행태에 관한 연구-제14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 정진민(1993), “한국사회의 세대문제와 선거”, 「한국의 선거」.
- 조기숙·오유석(1989), “선거구제도의 개혁과 국회: 대응성과 책임성의 조화”, 한국정치학회, 「정부수립 50주년 특별학술회의 논문집」.

조형(1996), “법적 양성평등과 성의 정치: 여성관련법 제·개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12권 1호.

주준희(1992), 「한국여성의 정치의식」,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제4회 국제학술세미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7),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투표행태」.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8), 「'97 제15대 대통령선거 투표행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서울지부(1993. 7), 「여성유권자의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여성유권자연맹(1993), 『한국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와 형태의 남녀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1995), 「6·27 지방선거와 남녀유권자의 투표행태연구」.



# 부록

부표	165
설문지	231

부표1. 16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성별, 연령, 학력별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선거관심도			
			매 우 많 았 다	조 금 있 었 다	별 로 없 었 다	전 혀 없 었 다
전 체		(1,500)	43.5	41.0	13.7	1.8
성 별	남자	(739)	50.1	38.4	10.1	1.4
	여자	(761)	37.2	43.5	17.1	2.2
연 령 별	20대	(357)	32.8	50.4	14.6	2.2
	30대	(382)	40.3	44.5	14.1	1.1
	40대	(333)	47.4	38.7	11.7	2.2
	50대 이상	(428)	52.3	31.8	14.0	1.9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45.2	31.2	20.0	3.6
	고졸 이하	(560)	40.9	45.0	12.9	1.2
	대재 이상	(602)	45.3	42.7	10.6	1.4
	무응답	(8)	25.0	37.5	37.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45.7	42.9	10.5	1.0
	공무원	(28)	57.1	35.7	7.1	0.0
	화이트칼라	(210)	41.4	47.1	10.5	1.0
	자영업	(270)	44.1	42.2	10.7	3.0
	판매/서비스	(32)	34.4	25.0	31.3	9.3
	블루칼라	(67)	56.7	34.3	9.0	0.0
	농림어업	(66)	56.1	24.2	18.2	1.5
	학생	(179)	38.0	49.2	11.7	1.1
	가정주부	(285)	37.5	46.7	14.7	1.1
	기타	(97)	47.4	33.0	18.6	1.0
	무직	(140)	46.4	30.7	18.6	4.3
	무응답	(21)	52.4	19.0	28.6	0.0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44.4	38.2	16.0	1.4
	150~300만원	(670)	39.9	44.8	13.3	2.0
	300만원 이상	(278)	49.6	37.1	11.2	2.1
	무응답	(65)	49.2	40.0	10.8	0.0
지 역 별	서울	(335)	48.4	37.0	12.5	2.1
	인천/경기	(375)	45.3	41.3	10.9	2.5
	강원	(49)	55.1	28.6	16.3	0.0
	대전/충청	(151)	49.7	35.8	13.2	1.3
	광주/전라	(171)	50.9	36.3	11.1	1.7
	대구/경북	(169)	27.2	47.9	23.1	1.8
	부산/울산/경남	(250)	34.4	50.0	14.4	1.2
도시 규모 별	대도시	(730)	43.6	42.2	12.3	1.9
	중소도시	(607)	45.8	39.9	13.2	1.1
	군지역	(163)	35.0	39.9	21.5	3.6

부표2. 이번 선거에 대한 선거공정성 평가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명)	공정성(지난 선거와 비교)				
			매우 깨끗했다	다소 깨끗했다	비슷했다	깨끗하지 못한 편	매우 흔탁했다
전 체		(1,500)	25.2	57.7	10.2	5.9	1.1
성 별	남 자	(739)	27.7	57.0	8.4	6.1	0.8
	여 자	(761)	22.7	58.3	12.0	5.7	1.3
연 령 별	20대	(357)	14.0	69.2	9.2	7.3	0.3
	30대	(382)	17.8	63.9	11.5	5.5	1.3
	40대	(333)	28.8	52.3	9.6	6.9	2.4
	50대 이상	(428)	38.3	46.7	10.3	4.2	0.5
	중졸 이하	(330)	40.3	44.8	12.4	2.4	0.0
학 력 별	고졸 이하	(560)	21.3	57.1	12.3	7.1	2.1
	대재 이상	(602)	20.8	65.6	6.8	6.3	0.5
	무응답	(8)	12.5	25.0	25.0	25.0	12.5
	무응답	(8)	12.5	25.0	25.0	25.0	12.5
직 업 별	전문직	(105)	25.7	61.0	6.7	6.7	0.0
	공무원	(28)	28.6	57.1	0.0	14.3	0.0
	화이트칼라	(210)	20.0	59.5	10.0	9.0	1.4
	자영업	(270)	24.1	61.5	9.3	4.4	0.7
	판매/서비스	(32)	28.1	46.9	12.5	12.5	0.0
	블루칼라	(67)	34.3	46.3	11.9	6.0	1.5
	농임어업	(66)	53.0	37.9	9.1	0.0	0.0
	학생	(179)	12.3	70.9	7.8	8.9	0.0
	가정주부	(285)	22.1	59.3	12.6	3.5	2.5
	기타	(97)	30.9	48.5	15.5	4.1	1.0
	무직	(140)	32.1	52.9	9.3	4.3	1.4
	무응답	(21)	42.9	28.6	19.0	9.5	0.0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30.8	51.3	12.5	3.9	1.4
	150~300만원	(670)	20.4	61.6	10.6	6.6	0.7
	300만원 이상	(278)	23.4	61.5	6.5	7.6	1.1
	무응답	(65)	40.0	47.7	4.6	6.2	1.5
지 역 별	서울	(335)	25.4	61.2	7.2	5.1	1.2
	인천/경기	(375)	22.9	60.8	9.3	6.4	0.5
	강원	(49)	34.7	44.9	8.2	8.2	4.1
	대전/충청	(151)	25.8	57.0	11.3	4.0	2.0
	광주/전라	(171)	49.7	44.4	2.9	2.3	0.6
	대구/경북	(169)	21.3	59.8	17.8	1.2	0.0
	부산/울산/경남	(250)	12.0	58.8	15.2	12.4	1.6
도 시 구 모 별	대 도시	(730)	22.7	59.7	9.6	6.8	1.1
	중소도시	(607)	25.7	57.5	10.5	4.9	1.3
	군지역	(163)	34.4	49.1	11.7	4.9	0.0

부표3. 정부의 선거중립성 인식여부

구 분		사례수 (명)	정부의 중립				
			매우 잘 지켰다	대체로 잘 지켰다	별로 지키지 못했다	전혀 지키지 못했다	무응답
전 체		(1,500)	13.5	66.4	17.7	1.9	0.5
성 별	남 자	(739)	15.6	65.4	16.2	2.2	0.7
	여 자	(761)	11.4	67.4	19.1	1.7	0.4
연 령 별	20대	(357)	8.4	72.3	17.4	1.7	0.3
	30대	(382)	9.4	67.5	20.9	1.6	0.5
	40대	(333)	15.3	64.6	16.8	3.0	0.3
	50대 이상	(428)	19.9	61.9	15.7	1.6	0.9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20.6	60.3	16.4	1.8	0.9
	고졸 이하	(560)	10.5	69.1	17.7	2.1	0.5
	대재 이상	(602)	12.5	67.4	17.9	1.8	0.3
	무응답	(8)	0.0	50.0	50.0	0.0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15.2	60.0	21.9	2.9	0.0
	공무원	(28)	17.9	67.9	14.3	0.0	0.0
	화이트칼라	(210)	9.0	75.2	13.3	2.4	0.0
	자영업	(270)	12.6	62.6	21.1	2.6	1.1
	판매/서비스	(32)	15.6	68.8	15.6	0.0	0.0
	블루칼라	(67)	13.4	62.7	19.4	3.0	1.5
	농림어업	(66)	28.8	59.1	12.1	0.0	0.0
	학생	(179)	7.8	74.3	17.3	0.0	0.6
	가정주부	(285)	12.6	66.7	18.2	2.1	0.4
	기타	(97)	18.6	64.9	13.4	3.1	0.0
	무직	(140)	16.4	60.7	20.0	2.1	0.7
	무응답	(21)	19.0	61.9	14.3	0.0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6.6	64.9	15.6	2.3	0.6
	150~300만원	(670)	11.6	68.4	18.7	1.0	0.3
	300만원 이상	(278)	9.4	66.2	20.9	3.6	0.0
	무응답	(65)	26.2	58.5	9.2	1.5	4.6
지 역 별	서울	(335)	8.4	68.1	20.3	2.1	1.2
	인천/경기	(375)	13.1	66.4	18.4	1.1	1.1
	강원	(49)	16.3	63.3	12.2	8.2	0.0
	대전/충청	(151)	17.2	60.3	19.2	3.3	0.0
	광주/전라	(171)	33.3	63.2	3.5	0.0	0.0
	대구/경북	(169)	10.1	68.6	19.5	1.8	0.0
	부산/울산/경남	(250)	6.8	69.2	21.6	2.4	0.0
도시 규모별	대 도시	(730)	9.2	68.8	19.7	1.6	0.7
	중소도시	(607)	17.6	62.3	17.6	2.0	0.5
	군지역	(163)	17.2	71.2	8.6	3.1	0.0

부표4. 16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투표여부	
			투표했 다	투표하지 않았다
전 체		(1,500)	88.4	11.6
성 별	남자	(739)	89.7	10.3
	여자	(761)	87.1	12.9
연령별	20대	(357)	82.1	17.9
	30대	(382)	87.4	12.6
	40대	(333)	89.8	10.2
	50대 이상	(428)	93.5	6.5
학력별	중졸 이하	(330)	91.2	8.8
	고졸 이하	(560)	87.3	12.7
	대재 이상	(602)	87.7	12.3
	무응답	(8)	100.0	0.0
직업별	전문직	(105)	89.5	10.5
	공무원	(28)	92.9	7.1
	화이트칼라	(210)	85.7	14.3
	자영업	(270)	88.1	11.9
	판매/서비스	(32)	87.5	12.5
	블루칼라	(67)	88.1	11.9
	농림어업	(66)	98.5	1.5
	학생	(179)	87.2	12.8
	가정주부	(285)	87.7	12.3
	기타	(97)	92.8	7.2
	무직	(140)	85.7	14.3
	무응답	(21)	95.2	4.8
소득별	150만원 미만	(487)	88.1	11.9
	150~300만원	(670)	88.5	11.5
	300만원 이상	(278)	86.7	13.3
	무응답	(65)	96.9	3.1
지역별	서울	(335)	88.7	11.3
	인천/경기	(375)	86.7	13.3
	강원	(49)	89.8	10.2
	대전/충청	(151)	82.1	17.9
	광주/전라	(171)	94.7	5.3
	대구/경북	(169)	91.1	8.9
	부산/울산/경남	(250)	88.0	12.0
	무응답	(0)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87.5	12.5
	중소도시	(607)	88.6	11.4
	군지역	(163)	91.4	8.6

부표5. 16대 통령성 선거 후보선택(서열, 연령, 학력, 직업별 등)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투표대상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무응답
전 체		(1,326)	38.4	55.9	0.1	4.7	0.1	0.8
성 별	남자	(663)	37.3	57.2	0.2	4.7	0.2	0.6
	여자	(663)	39.5	54.6	0.0	4.7	0.0	1.2
연 령 별	20대	(293)	24.6	67.6	0.0	7.2	0.0	0.7
	30대	(334)	32.6	61.1	0.0	6.0	0.0	0.3
	40대	(299)	44.8	48.5	0.3	4.7	0.0	1.7
	50대 이상	(400)	48.5	48.5	0.0	1.8	0.3	1.0
학 력 별	중졸 이하	(301)	45.5	51.2	0.3	1.3	0.3	1.3
	고졸 이하	(489)	39.3	53.2	0.0	6.5	0.0	1.0
	대재 이상	(528)	33.1	61.7	0.0	4.5	0.0	0.6
	무응답	(8)	62.5	12.5	0.0	25.0	0.0	0.0
직 업 별	전문직	(94)	34.0	61.7	0.0	4.3	0.0	0.0
	공무원	(26)	34.6	53.8	0.0	7.7	0.0	3.8
	화이트칼라	(180)	41.1	53.9	0.0	4.4	0.0	0.6
	자영업	(238)	42.4	52.9	0.0	3.8	0.0	0.8
	판매/서비스	(28)	42.9	50.0	0.0	7.1	0.0	0.0
	블루칼라	(59)	39.0	55.9	0.0	3.4	0.0	1.7
	농임어업	(65)	29.2	66.2	0.0	3.1	0.0	1.5
	학생	(156)	19.2	72.4	0.0	8.3	0.0	0.0
	가정주부	(250)	40.8	50.8	0.0	6.4	0.0	2.0
	기타	(90)	40.0	56.7	1.1	2.2	0.0	0.0
	무직	(120)	50.0	48.3	0.0	0.0	0.8	0.8
	무응답	(20)	55.0	35.0	0.0	10.0	0.0	0.0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29)	38.7	55.2	0.2	4.9	0.2	0.7
	150~300만원	(593)	39.6	54.3	0.0	5.2	0.0	0.8
	300만원 이상	(241)	38.6	56.4	0.0	3.7	0.0	1.2
	무응답	(63)	23.8	73.0	0.0	1.6	0.0	1.6
지 역 별	서울	(297)	39.1	57.9	0.0	2.7	0.0	0.3
	인천/경기	(325)	33.5	60.6	0.0	4.6	0.0	1.2
	강원	(44)	36.4	50.0	0.0	13.6	0.0	0.0
	대전/충청	(124)	32.3	63.7	0.8	3.2	0.0	0.0
	광주/전라	(162)	.6	95.1	0.0	1.9	0.0	2.5
	대구/경북	(154)	66.9	28.6	0.0	3.2	0.0	1.3
	부산/울산/경남	(220)	56.4	33.2	0.0	9.5	0.5	0.5
도시 규모별	대도시	(639)	43.5	51.0	0.2	4.9	0.0	0.5
	중소도시	(538)	34.4	59.3	0.0	4.8	0.2	1.3
	군지역	(149)	30.9	64.4	0.0	3.4	0.0	1.3

부표 6. 지지 후보자 결정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한 사항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투표 결정기준							
			정책/ 공약	선거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등)	개인적 연고 (출신지 역등)	정치 경력	기타	무응답
전 체		(1,326)	23.5	0.8	8.4	55.7	1.3	6.5	3.7	0.1
성 별	남 자	(663)	24.1	0.8	7.5	56.0	1.5	6.9	2.9	0.3
	여 자	(663)	22.8	0.8	9.4	55.4	1.1	6.0	4.5	0.2
연 령 별	20대	(293)	29.4	0.7	7.5	54.6	1.4	2.7	3.8	0.0
	30대	(334)	24.9	1.2	7.2	57.2	1.8	5.4	2.4	0.0
	40대	(299)	23.7	0.0	10.0	53.5	1.3	9.4	1.7	0.3
	50대 이상	(400)	17.8	1.0	9.0	56.8	0.8	8.0	6.3	0.5
학 력 별	중졸 이하	(301)	18.9	1.0	10.6	52.8	2.0	8.3	5.6	0.7
	고졸 이하	(489)	22.5	0.8	8.6	58.5	1.6	4.9	3.1	0.0
	대재 이상	(528)	26.7	0.4	7.0	55.1	0.6	7.0	3.0	0.2
	무응답	(8)	37.5	12.5	12.5	25.0	0.0	0.0	12.5	0.0
직 업 별	전문직	(94)	23.4	0.0	6.4	54.3	1.1	8.5	6.4	0.0
	공무원	(26)	26.9	3.8	7.7	50.0	0.0	11.5	0.0	0.0
	화이트칼라	(180)	19.4	0.0	5.6	61.1	1.7	9.4	2.8	0.0
	자영업	(238)	22.3	0.4	6.3	60.1	0.8	7.6	2.1	0.4
	판매/서비스	(28)	25.0	0.0	7.1	64.3	0.0	0.0	3.6	0.0
	블루칼라	(59)	27.1	3.4	10.2	49.2	1.7	8.5	0.0	0.0
	농림어업	(65)	20.0	1.5	15.4	53.8	3.1	1.5	4.6	0.0
	학생	(156)	34.6	0.6	6.4	50.6	1.9	1.9	3.8	0.0
	가정주부	(250)	23.6	0.8	10.0	56.0	0.8	4.8	3.6	0.4
	기타	(90)	18.9	1.1	12.2	55.6	1.1	6.7	4.4	0.0
	무직	(120)	18.3	0.8	10.0	50.8	1.7	9.2	8.3	0.8
	무응답	(20)	30.0	0.0	15.0	45.0	0.0	10.0	0.0	0.0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29)	23.1	1.9	10.3	51.0	1.2	7.7	4.4	0.5
	150~300만원	(593)	24.6	0.3	7.8	57.0	1.2	5.7	3.2	0.2
	300만원 이상	(241)	20.7	0.0	6.6	61.8	1.7	7.5	1.7	0.0
	무응답	(63)	25.4	0.0	9.5	50.8	1.6	1.6	11.1	0.0
지 역 별	서울	(297)	19.2	0.0	8.8	58.6	1.0	6.1	6.4	0.0
	인천/경기	(325)	29.2	0.3	5.8	53.2	1.5	6.5	3.1	0.3
	강원	(44)	22.7		9.1	47.7	2.3	11.4	6.8	0.0
	대전/충청	(124)	25.8	0.8	6.5	53.2	0.8	7.3	5.6	0.0
	광주/전라	(162)	18.5	1.9	9.3	64.8	1.2	1.2	2.5	0.6
	대구/경북	(154)	16.9	0.6	7.8	61.7	1.9	9.7	1.3	0.0
	부산/울산 /경남	(220)	27.7	1.8	12.7	47.3	0.9	7.3	1.8	0.5
도시 규모별	대도시	(639)	23.0	0.3	9.5	54.9	1.4	6.3	4.1	0.5
	중소도시	(538)	25.7	1.1	7.2	54.3	0.9	7.1	3.7	0.0
	군지역	(149)	17.4	1.3	8.1	63.8	2.0	5.4	2.0	0.0

부표7.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정당 인식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대통령임기 인지여부	
			정답	오답
전체		(1,500)	91.9	8.1
성별	남자	(739)	94.3	5.7
	여자	(761)	89.6	10.4
연령별	20대	(357)	92.7	7.3
	30대	(382)	91.1	8.9
	40대	(333)	95.8	4.2
	50대 이상	(428)	89.0	11.0
	중졸 이하	(330)	84.5	15.5
학력별	고졸 이하	(560)	93.8	6.3
	대재 이상	(602)	94.2	5.8
	무응답	(8)	100.0	0.0
	전문직	(105)	92.4	7.6
직업별	공무원	(28)	89.3	10.7
	화이트칼라	(210)	96.7	3.3
	자영업	(270)	94.1	5.9
	판매/서비스	(32)	87.5	12.5
	블루칼라	(67)	94.0	6.0
	농림어업	(66)	90.9	9.1
	학생	(179)	92.2	7.8
	가정주부	(285)	90.9	9.1
	기타	(97)	87.6	12.4
	무직	(140)	86.4	13.6
	무응답	(21)	90.5	9.5
소득별	150만원 미만	(487)	90.3	9.7
	150~300만원	(670)	94.0	6.0
	300만원 이상	(278)	90.3	9.7
	무응답	(65)	89.2	10.8
지역별	서울	(335)	94.0	6.0
	인천/경기	(375)	93.6	6.4
	강원	(49)	93.9	6.1
	대전/충청	(151)	89.4	10.6
	광주/전라	(171)	89.5	10.5
	대구/경북	(169)	88.2	11.8
	부산/울산/경남	(250)	92.0	8.0
	무응답	(0)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92.2	7.8
	중소도시	(607)	91.9	8.1
	군지역	(163)	90.8	9.2

부표8. 거주지역의 광역단체장( \_\_\_\_ 도지사, 또는 \_\_\_\_ 광역시장)의 이름 인식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광역단체장 인지여부	
			정 답	오 답
전 체		(1,500)	60.8	39.2
성 별	남자	(739)	68.6	31.4
	여자	(761)	53.2	46.8
연 령 별	20대	(357)	51.8	48.2
	30대	(382)	62.8	37.2
	40대	(333)	74.5	25.5
	50대 이상	(428)	55.8	44.2
	무응답	(8)	100.0	0.0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50.9	49.1
	고졸 이하	(560)	62.7	37.3
	대재 이상	(602)	64.0	36.0
	무응답	(8)	100.0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65.7	34.3
	공무원	(28)	71.4	28.6
	화이트칼라	(210)	69.5	30.5
	자영업	(270)	66.3	33.7
	판매/서비스	(32)	50.0	50.0
	블루칼라	(67)	64.2	35.8
	농림어업	(66)	53.0	47.0
	학생	(179)	55.3	44.7
	가정주부	(285)	53.0	47.0
	기타	(97)	67.0	33.0
	무직	(140)	52.1	47.9
	무응답	(21)	76.2	23.8
	무응답	(21)	76.2	23.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57.1	42.9
	150~300만원	(670)	63.6	36.4
	300만원 이상	(278)	66.2	33.8
	무응답	(65)	36.9	63.1
지 역 별	서울	(335)	76.7	23.3
	인천/경기	(375)	44.3	55.7
	강원	(49)	67.3	32.7
	대전/충청	(151)	70.9	29.1
	광주/전라	(171)	40.4	59.6
	대구/경북	(169)	70.4	29.6
	부산/울산/경남	(250)	64.4	35.6
	무응답	(8)	100.0	0.0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66.2	33.8
	중소도시	(607)	53.4	46.6
	군지역	(163)	64.4	35.6

부표9.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명)	정치적 사건, 선거에 관심정도						
			전혀 없다	2	3	4	5	6	매 우 많다
전 체		(1,500)	4.6	13.3	18.9	28.0	18.7	8.3	8.2
성 별	남자	(739)	3.9	8.7	13.8	30.6	21.9	10.6	10.6
	여자	(761)	5.4	17.7	23.8	25.5	15.5	6.2	5.9
연 령 별	20대	(357)	3.1	13.4	25.8	27.7	16.8	8.4	4.8
	30대	(382)	2.1	11.8	22.0	30.1	21.7	6.5	5.8
	40대	(333)	3.9	11.7	14.7	27.6	22.2	9.9	9.9
	50대 이상	(428)	8.9	15.7	13.6	26.6	14.7	8.6	11.9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11.2	23.0	17.0	19.4	12.4	6.7	10.3
	고졸 이하	(560)	2.7	13.8	18.8	32.1	17.1	8.6	7.0
	대재 이상	(602)	3.0	7.5	19.8	29.1	23.6	9.0	8.1
	무응답	(8)	0.0	12.5	37.5	12.5	12.5	12.5	12.5
직 업 별	전문직	(105)	1.0	7.6	18.1	25.7	29.5	10.5	7.6
	공무원	(28)	0.0	0.0	10.7	35.7	25.0	21.4	7.1
	화이트칼라	(210)	4.3	7.1	17.1	33.3	23.8	9.5	4.8
	자영업	(270)	4.1	12.2	14.1	32.6	19.6	9.3	8.1
	판매/서비스	(32)	0.0	15.6	9.4	43.8	9.4	18.8	3.1
	블루칼라	(67)	3.0	13.4	11.9	29.9	25.4	10.4	6.0
	농림어업	(66)	15.2	15.2	16.7	15.2	13.6	9.1	15.2
	학생	(179)	1.7	9.5	28.5	26.3	19.6	8.9	5.6
	가정주부	(285)	3.9	18.9	26.3	25.3	14.7	3.5	7.4
	기타	(97)	7.2	11.3	14.4	24.7	16.5	8.2	17.5
	무직	(140)	10.0	25.0	14.3	22.9	10.0	5.7	12.1
	무응답	(21)	9.5	9.5	23.8	28.6	14.3	9.5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7.0	17.2	16.2	27.3	13.3	9.2	9.7
	150~300만원	(670)	3.3	11.5	20.4	29.7	21.2	7.5	6.4
	300만원 이상	(278)	4.0	9.4	20.5	26.6	21.6	8.6	9.4
	무응답	(65)	4.6	18.5	15.4	21.5	20.0	9.2	10.8
지 역 별	서울	(335)	3.6	11.9	18.5	27.8	23.9	7.8	6.6
	인천/경기	(375)	5.3	12.3	20.0	26.1	17.3	9.9	9.1
	강원	(49)	6.1	22.4	16.3	18.4	12.2	4.1	20.4
	대전/충청	(151)	6.0	6.6	17.9	36.4	17.2	7.9	7.9
	광주/전라	(171)	4.7	8.8	19.9	27.5	16.4	8.8	14.0
	대구/경북	(169)	5.9	24.3	20.7	23.7	18.3	4.1	3.0
	부산/울산/경남	(250)	3.2	14.4	16.8	31.2	17.6	10.4	6.4
도시 규모별	대도시	(730)	3.6	12.5	18.8	29.2	20.0	8.9	7.1
	중소도시	(607)	4.4	13.7	18.3	28.3	17.8	7.7	9.7
	군지역	(163)	10.4	15.3	21.5	21.5	16.0	8.0	7.4

부표10. 호주·호적제 폐지 주장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호주, 호적제 존폐여부				
			완전 폐지	크게 수정	일부 개선	현행 유지	모름/ 무응답
전 체		(1,500)	20.2	17.5	29.7	21.1	11.5
성 별	남자	(739)	18.3	16.5	29.6	25.8	9.7
	여자	(761)	22.1	18.5	29.7	16.6	13.1
연 령 별	20대	(357)	23.8	21.0	34.7	12.6	7.8
	30대	(382)	26.4	22.0	32.2	11.3	8.1
	40대	(333)	20.7	17.7	28.8	24.6	8.1
	50대 이상	(428)	11.2	10.5	23.8	34.3	20.1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8.8	10.9	17.6	36.7	26.1
	고졸 이하	(560)	18.0	17.7	34.6	20.2	9.5
	대재 이상	(602)	28.6	20.9	31.6	13.5	5.5
	무응답	(8)	12.5	25.0	37.5	25.0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29.5	24.8	29.5	12.4	3.8
	공무원	(28)	10.7	21.4	42.9	17.9	7.1
	화이트칼라	(210)	22.9	17.6	36.2	17.1	6.2
	자영업	(270)	22.2	14.8	30.7	22.2	10.0
	판매/서비스	(32)	12.5	28.1	31.3	15.6	12.5
	블루칼라	(67)	13.4	11.9	26.9	40.3	7.5
	농림어업	(66)	12.1	6.1	21.2	42.4	18.2
	학생	(179)	26.3	27.4	30.7	8.4	7.3
	가정주부	(285)	20.0	17.9	33.0	16.5	12.6
	기타	(97)	9.3	14.4	23.7	29.9	22.7
	무직	(140)	17.9	13.6	16.4	28.6	23.6
	무응답	(21)	9.5	0.0	28.6	57.1	4.8
소득별	150만원 미만	(487)	16.2	15.8	25.3	25.9	16.8
	150~300만원	(670)	21.9	17.2	34.3	18.1	8.5
	300만원 이상	(278)	25.2	22.3	28.8	16.5	7.2
	무응답	(65)	10.8	13.8	18.5	36.9	20.0
지역별	서울	(335)	27.5	19.7	22.4	20.9	9.6
	인천/경기	(375)	20.8	20.8	30.1	19.2	9.1
	강원	(49)	16.3	18.4	38.8	18.4	8.2
	대전/충청	(151)	13.9	18.5	37.1	14.6	15.9
	광주/전라	(171)	15.8	15.2	26.9	23.4	18.7
	대구/경북	(169)	14.8	9.5	31.4	28.4	16.0
	부산/울산/경남	(250)	20.8	16.0	33.2	22.4	7.6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20.8	17.5	30.4	21.0	10.3
	중소도시	(607)	21.3	18.6	29.3	18.9	11.9
	군지역	(163)	13.5	13.5	27.6	30.1	15.3

부표11. 여성과 관련된 문제 중 특히 관심있는 분야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여성 관련 문제 중 관심분야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교육	여성의 복지	여성 단체 활동 /문화 활동	여성의 인권 문제	관심 없다
전 체	(1,500)	14.1	9.9	8.5	19.8	11.0	18.1	18.6
성 별	남자	(739)	15.6	10.3	7.7	16.6	10.4	17.2
	여자	(761)	12.6	9.5	9.2	22.9	11.6	19.1
연 령 별	20대	(357)	18.5	9.5	7.0	18.2	9.5	23.5
	30대	(382)	17.0	9.9	8.6	23.0	11.5	17.8
	40대	(333)	14.4	12.6	7.8	18.6	14.1	16.8
	50대 이상	(428)	7.5	7.9	10.0	19.2	9.3	15.0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8.2	9.1	9.4	19.1	8.8	10.6
	고졸 이하	(560)	13.8	8.8	9.5	21.8	13.0	17.3
	대재 이상	(602)	17.6	11.5	7.1	18.1	10.5	22.8
	무응답	(8)	12.5	0.0	0.0	37.5	0.0	37.5
직 업 별	전문직	(105)	14.3	12.4	9.5	13.3	11.4	23.8
	공무원	(28)	21.4	21.4	10.7	17.9	10.7	3.6
	화이트칼라	(210)	17.1	11.4	6.7	20.0	11.4	21.0
	자영업	(270)	14.8	10.0	6.7	23.0	12.2	18.5
	판매/서비스	(32)	18.8	9.4	12.5	15.6	12.5	18.8
	블루칼라	(67)	16.4	16.4	6.0	19.4	7.5	14.9
	농림어업	(66)	3.0	7.6	10.6	13.6	16.7	15.2
	학생	(179)	21.2	10.1	8.4	15.1	5.6	24.0
	가정주부	(285)	10.2	8.4	8.4	23.9	13.3	17.9
	기타	(97)	13.4	9.3	8.2	22.7	8.2	14.4
	무직	(140)	10.0	5.0	12.1	17.1	10.7	10.0
	무응답	(21)	4.8	4.8	14.3	28.6	9.5	19.0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2.3	8.4	8.4	20.3	11.1	16.2
	150~300만원	(670)	15.1	11.3	9.3	20.1	10.4	19.0
	300만원 이상	(278)	14.7	9.4	6.8	19.4	13.3	18.7
	무응답	(65)	13.8	7.7	7.7	13.8	6.2	21.5
지 역 별	서울	(335)	13.1	8.4	5.4	13.7	9.9	20.3
	인천/경기	(375)	15.7	12.0	10.4	22.4	10.4	17.9
	강원	(49)	10.2	6.1	14.3	26.5	18.4	14.3
	대전/충청	(151)	21.2	11.3	8.6	13.2	11.9	16.6
	광주/전라	(171)	14.0	9.4	7.6	24.0	11.1	15.8
	대구/경북	(169)	10.1	5.3	10.7	21.9	14.2	11.2
	부산/울산/경남	(250)	12.0	12.0	7.6	22.4	9.2	23.6
도시 규모별	대도시	(730)	14.7	9.9	7.0	19.7	8.6	19.6
	중소도시	(607)	15.2	10.0	10.0	20.9	11.9	16.8
	군지역	(163)	7.4	9.2	9.2	16.0	18.4	16.6

부표 12.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에 대한 인식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여성/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인지여부	
			알고 있다	모른다
전 체		(1,500)	55.8	44.2
성 별	남자	(739)	56.7	43.3
	여자	(761)	54.9	45.1
연령별	20대	(357)	58.5	41.5
	30대	(382)	56.5	43.5
	40대	(333)	62.8	37.2
	50대 이상	(428)	47.4	52.6
학력별	중졸 이하	(330)	42.1	57.9
	고졸 이하	(560)	56.8	43.2
	대재 이상	(602)	62.1	37.9
	무응답	(8)	75.0	25.0
직업별	전문직	(105)	54.3	45.7
	공무원	(28)	78.6	21.4
	화이트칼라	(210)	56.2	43.8
	자영업	(270)	58.9	41.1
	판매/서비스	(32)	68.8	31.3
	블루칼라	(67)	59.7	40.3
	농림어업	(66)	54.5	45.5
	학생	(179)	62.6	37.4
	가정주부	(285)	53.7	46.3
	기타	(97)	56.7	43.3
	무직	(140)	39.3	60.7
	무응답	(21)	38.1	61.9
소득별	150만원 미만	(487)	51.5	48.5
	150~300만원	(670)	57.6	42.4
	300만원 이상	(278)	59.4	40.6
	무응답	(65)	53.8	46.2
지역별	서울	(335)	52.8	47.2
	인천/경기	(375)	60.8	39.2
	강원	(49)	57.1	42.9
	대전/충청	(151)	57.0	43.0
	광주/전라	(171)	62.0	38.0
	대구/경북	(169)	45.0	55.0
	부산/울산/경남	(250)	54.4	45.6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54.5	45.5
	중소도시	(607)	57.8	42.2
	군지역	(163)	54.0	46.0

부표12. 여성권익활동에 참가한 경험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명)	여성/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참여여부	
			있 다	없 다
전 체		(837)	20.2	79.8
성 별	남자	(419)	15.5	84.5
	여자	(418)	24.9	75.1
연 령 별	20대	(209)	16.3	83.7
	30대	(216)	14.4	85.6
	40대	(209)	26.8	73.2
	50대 이상	(203)	23.6	76.4
학 력 별	중졸 이하	(139)	26.6	73.4
	고졸 이하	(318)	18.9	81.1
	대재 이상	(374)	18.7	81.3
	무응답	(6)	33.3	66.7
직 업 별	전문직	(57)	26.3	73.7
	공무원	(22)	18.2	81.8
	화이트칼라	(118)	14.4	85.6
	자영업	(159)	15.7	84.3
	판매/서비스	(22)	22.7	77.3
	블루칼라	(40)	10.0	90.0
	농림어업	(36)	38.9	61.1
	학생	(112)	20.5	79.5
	가정주부	(153)	28.1	71.9
	기타	(55)	20.0	80.0
	무직	(55)	12.7	87.3
	무응답	(8)	12.5	87.5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251)	16.7	83.3
	150~300만원	(386)	18.1	81.9
	300만원 이상	(165)	28.5	71.5
	무응답	(35)	28.6	71.4
지 역 별	서울	(177)	20.3	79.7
	인천/경기	(228)	18.9	81.1
	강원	(28)	21.4	78.6
	대전/충청	(86)	15.1	84.9
	광주/전라	(106)	26.4	73.6
	대구/경북	(76)	14.5	85.5
	부산/울산/경남	(136)	23.5	76.5
도시규모별	대도시	(398)	19.1	80.9
	중소도시	(351)	21.4	78.6
	군지역	(88)	20.5	79.5

부표13. 선거의 효용감(“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인식정도

구 분		사례 수 (명)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르 겠다
전 체		(1,500)	22.9	55.2	18.9	2.2	0.8
성 별	남자	(739)	22.6	55.8	17.9	2.8	0.9
	여자	(761)	23.1	54.7	19.8	1.6	0.8
연령 별	20대	(357)	20.2	61.6	16.5	1.4	0.3
	30대	(382)	23.8	54.7	19.1	1.3	1.0
	40대	(333)	23.4	51.7	21.0	3.3	0.6
	50대 이상	(428)	23.8	53.0	18.9	2.8	1.4
학력 별	중졸 이하	(330)	23.9	52.1	19.4	3.3	1.2
	고졸 이하	(560)	22.5	53.8	20.7	2.3	0.7
	대재 이상	(602)	22.6	58.5	16.6	1.5	0.8
	무응답	(8)	25.0	37.5	37.5	0.0	0.0
직업 별	전문직	(105)	16.2	63.8	16.2	3.8	0.0
	공무원	(28)	21.4	50.0	21.4	3.6	3.6
	화이트칼라	(210)	18.1	58.1	23.3	0.5	0.0
	자영업	(270)	21.1	52.2	23.3	3.0	0.4
	판매/서비스	(32)	31.3	46.9	18.8	0.0	3.1
	블루칼라	(67)	26.9	55.2	16.4	0.0	1.5
	농림어업	(66)	24.2	54.5	10.6	7.6	3.0
	학생	(179)	22.9	60.3	15.1	1.7	0.0
	가정주부	(285)	27.7	52.6	17.2	1.4	1.1
	기타	(97)	23.7	56.7	16.5	0.0	3.1
	무직	(140)	23.6	50.0	21.4	5.0	0.0
	무응답	(21)	23.8	61.9	9.5	0.0	4.8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20.1	57.7	19.1	2.3	0.8
	150~300만원	(670)	25.2	52.1	20.1	1.6	0.9
	300만원 이상	(278)	23.0	55.4	17.6	3.2	0.7
	무응답	(65)	18.5	67.7	9.2	3.1	1.5
지역 별	서울	(335)	24.8	52.2	20.9	1.5	0.6
	인천/경기	(375)	25.3	53.3	19.2	2.1	0.0
	강원	(49)	28.6	51.0	18.4	0.0	2.0
	대전/충청	(151)	16.6	57.0	23.8	2.6	0.0
	광주/전라	(171)	34.5	52.6	7.6	1.2	4.1
	대구/경북	(169)	13.0	57.4	25.4	4.1	0.0
	부산/울산/경남	(250)	18.0	62.0	16.0	2.8	1.2
도시규모 별	대도시	(730)	21.6	54.8	21.0	1.6	1.0
	중소도시	(607)	24.4	55.7	17.0	2.0	1.0
	군지역	(163)	22.7	55.2	16.6	5.5	0.0

부표 14. 북한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13.9	37.6	28.7	15.7	4.1
성 별	남 자	(739)	16.1	40.1	26.9	14.9	2.0
	여 자	(761)	11.7	35.2	30.5	16.4	6.2
연 령 별	20대	(357)	16.0	46.2	27.7	8.7	1.4
	30대	(382)	13.4	40.3	27.7	16.5	2.1
	40대	(333)	12.9	35.1	31.2	15.6	5.1
	50대 이상	(428)	13.3	29.9	28.5	20.8	7.5
	중졸 이하	(330)	10.6	26.7	27.9	23.0	11.8
학 력 별	고졸 이하	(560)	12.5	38.6	31.3	15.0	2.7
	대재 이상	(602)	17.1	42.4	26.9	12.3	1.3
	무응답	(8)	0.0	62.5	25.0	12.5	0.0
	무응답	(8)	0.0	62.5	25.0	12.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17.1	37.1	30.5	15.2	0.0
	공무원	(28)	10.7	39.3	42.9	7.1	0.0
	화이트칼라	(210)	11.4	47.6	28.1	11.9	1.0
	자영업	(270)	13.7	34.1	28.1	18.9	5.2
	판매/서비스	(32)	18.8	21.9	40.6	12.5	6.3
	블루칼라	(67)	16.4	37.3	23.9	17.9	4.5
	농림어업	(66)	12.1	37.9	24.2	16.7	9.1
	학생	(179)	17.3	48.0	29.1	4.5	1.1
	가정주부	(285)	11.6	35.1	30.5	17.2	5.6
	기타	(97)	17.5	39.2	18.6	20.6	4.1
	무직	(140)	14.3	23.6	30.7	22.9	8.6
	무응답	(21)	0.0	38.1	33.3	23.8	4.8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1.7	35.3	29.0	17.5	6.6
	150~300만원	(670)	14.9	38.1	27.9	16.0	3.1
	300만원 이상	(278)	15.1	38.5	33.1	12.2	1.1
	무응답	(65)	13.8	46.2	16.9	13.8	9.2
지역 별	서울	(335)	14.0	36.7	30.1	14.6	4.5
	인천/경기	(375)	15.7	39.2	27.2	14.4	3.5
	강원	(49)	16.3	28.6	36.7	16.3	2.0
	대전/충청	(151)	12.6	39.7	25.2	16.6	6.0
	광주/전라	(171)	22.8	52.6	12.3	7.6	4.7
	대구/경북	(169)	10.1	26.0	36.1	22.5	5.3
	부산/울산/경남	(250)	7.6	34.4	36.0	19.2	2.8
도시규모 별	대도시	(730)	12.3	37.0	30.4	16.4	3.8
	중소도시	(607)	15.8	36.7	28.3	15.0	4.1
	군지역	(163)	13.5	43.6	22.7	14.7	5.5

부표15.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배제에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 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11.9	30.3	36.0	11.8	10.0
성 별	남자	(739)	13.3	32.5	33.4	14.9	6.0
	여자	(761)	10.5	28.1	38.5	8.8	14.1
연 령 별	20대	(357)	10.6	31.7	44.5	12.3	0.8
	30대	(382)	11.3	34.6	35.1	13.6	5.5
	40대	(333)	14.4	33.6	34.8	9.9	7.2
	50대 이상	(428)	11.4	22.7	30.6	11.2	24.1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10.6	22.1	27.3	9.4	30.6
	고졸 이하	(560)	11.6	32.3	38.2	11.8	6.1
	대재 이상	(602)	12.8	32.7	38.7	13.1	2.7
	무응답	(8)	12.5	37.5	37.5	12.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6.7	31.4	41.0	17.1	3.8
	공무원	(28)	17.9	21.4	50.0	7.1	3.6
	화이트칼라	(210)	12.9	35.7	37.6	11.4	2.4
	자영업	(270)	14.4	30.7	33.0	14.1	7.8
	판매/서비스	(32)	12.5	40.6	31.3	3.1	12.5
	블루칼라	(67)	13.4	26.9	37.3	16.4	6.0
	농림어업	(66)	13.6	19.7	30.3	13.6	22.7
	학생	(179)	8.4	30.7	48.0	12.8	0.0
	가정주부	(285)	13.0	29.5	34.7	8.8	14.0
	기타	(97)	12.4	35.1	22.7	9.3	20.6
	무직	(140)	9.3	21.4	34.3	10.0	25.0
	무응답	(21)	4.8	47.6	23.8	14.3	9.5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1.7	26.9	32.0	12.5	16.8
	150~300만원	(670)	10.9	31.6	40.1	10.9	6.4
	300만원 이상	(278)	13.7	34.5	33.5	14.0	4.3
	무응답	(65)	15.4	23.1	33.8	6.2	21.5
지 역 별	서울	(335)	11.0	26.9	38.2	11.6	12.2
	인천/경기	(375)	15.5	32.5	34.1	11.7	6.1
	강원	(49)	14.3	20.4	38.8	18.4	8.2
	대전/충청	(151)	14.6	23.8	32.5	19.2	9.9
	광주/전라	(171)	12.3	36.8	28.1	8.2	14.6
	대구/경북	(169)	9.5	30.2	35.5	7.7	17.2
	부산/울산/경남	(250)	6.8	32.8	43.2	11.6	5.6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10.1	29.9	37.1	12.5	10.4
	중소도시	(607)	12.7	31.6	35.3	11.0	9.4
	군지역	(163)	16.6	27.0	33.7	11.7	11.0

부표16.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이 필요 지지.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 (한미주둔지위협정)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50.0	27.1	11.9	5.3	5.7
성 별	남자	(739)	54.4	24.6	12.2	6.4	2.4
	여자	(761)	45.7	29.6	11.6	4.3	8.8
연 령 별	20대	(357)	60.8	25.2	10.1	3.6	.3
	30대	(382)	53.1	30.1	12.0	2.6	2.1
	40대	(333)	50.2	27.9	12.9	5.1	3.9
	50대 이상	(428)	38.1	25.5	12.4	9.3	14.7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37.9	24.2	11.5	7.0	19.4
	고졸 이하	(560)	51.8	28.0	12.7	5.0	2.5
	대재 이상	(602)	54.8	27.9	11.3	4.8	1.2
	무응답	(8)	62.5	25.0	12.5	0.0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45.7	26.7	15.2	9.5	2.9
	공무원	(28)	42.9	42.9	10.7	3.6	0.0
	화이트칼라	(210)	53.3	30.0	9.5	6.7	0.5
	자영업	(270)	54.4	23.0	13.3	5.2	4.1
	판매/서비스	(32)	46.9	37.5	9.4	6.3	0.0
	블루칼라	(67)	50.7	26.9	16.4	3.0	3.0
	농림어업	(66)	47.0	30.3	4.5	1.5	16.7
	학생	(179)	62.6	27.4	8.4	1.7	0.0
	가정주부	(285)	45.6	29.5	11.9	4.2	8.8
	기타	(97)	47.4	22.7	13.4	6.2	10.3
	무직	(140)	40.0	22.1	15.0	7.9	15.0
	무응답	(21)	33.3	28.6	14.3	19.0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52.0	24.2	10.5	4.1	9.2
	150~300만원	(670)	50.4	28.8	12.1	4.8	3.9
	300만원 이상	(278)	47.1	28.4	14.7	8.3	1.4
	무응답	(65)	43.1	26.2	7.7	7.7	15.4
지 역 별	서울	(335)	45.4	28.7	16.4	4.8	4.8
	인천/경기	(375)	51.2	28.0	10.4	6.1	4.3
	강원	(49)	49.0	22.4	12.2	8.2	8.2
	대전/충청	(151)	59.6	21.9	6.0	8.6	4.0
	광주/전라	(171)	46.2	29.2	11.1	1.8	11.7
	대구/경북	(169)	62.1	16.6	11.2	1.2	8.9
	부산/울산/경남	(250)	43.2	33.6	12.4	7.6	3.2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47.9	28.6	13.3	5.5	4.7
	중소도시	(607)	51.4	26.2	10.0	6.1	6.3
	군지역	(163)	54.0	23.9	12.3	1.8	8.0

부표17.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 례 수 (명)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 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22.5	36.0	26.4	11.1	4.0
성 별	남 자	(739)	25.7	36.7	25.2	9.3	3.1
	여 자	(761)	19.4	35.3	27.6	12.7	4.9
연 령 별	20대	(357)	20.2	42.0	27.7	7.6	2.5
	30대	(382)	21.7	36.4	27.7	12.0	2.1
	40대	(333)	22.5	37.5	26.4	10.8	2.7
	50대 이상	(428)	25.2	29.4	24.1	13.3	7.9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21.2	30.3	25.8	13.6	9.1
	고졸 이하	(560)	22.1	33.8	28.8	12.1	3.2
	대재 이상	(602)	23.6	41.4	24.8	8.3	2.0
	무응답	(8)	25.0	25.0	12.5	37.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28.6	38.1	25.7	6.7	1.0
	공무원	(28)	17.9	50.0	17.9	10.7	3.6
	화이트칼라	(210)	18.1	40.0	32.9	6.7	2.4
	자영업	(270)	24.4	35.2	22.6	14.1	3.7
	판매/서비스	(32)	31.3	31.3	25.0	3.1	9.4
	블루칼라	(67)	17.9	38.8	26.9	14.9	1.5
	농임어업	(66)	30.3	28.8	30.3	7.6	3.0
	학생	(179)	18.4	50.8	23.5	5.0	2.2
	가정주부	(285)	19.6	30.9	28.1	16.5	4.9
	기타	(97)	26.8	37.1	20.6	8.2	7.2
	무직	(140)	26.4	23.6	27.9	13.6	8.6
	무응답	(21)	23.8	19.0	33.3	23.8	0.0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26.5	28.3	26.7	12.3	6.2
	150~300만원	(670)	19.9	41.6	25.4	10.7	2.4
	300만원 이상	(278)	21.2	38.1	27.7	9.7	3.2
	무응답	(65)	26.2	26.2	29.2	10.8	7.7
지 역 별	서울	(335)	19.7	39.7	25.7	10.7	4.2
	인천/경기	(375)	22.4	34.7	27.5	13.9	1.6
	강원	(49)	34.7	36.7	16.3	10.2	2.0
	대전/충청	(151)	28.5	37.7	19.9	8.6	5.3
	광주/전라	(171)	26.9	38.0	24.6	4.1	6.4
	대구/경북	(169)	22.5	32.0	24.9	11.8	8.9
	부산/울산/경남	(250)	17.6	33.2	34.0	13.2	2.0
도시 규모 별	대 도시	(730)	20.5	38.6	26.8	9.7	4.2
	중소도시	(607)	24.5	34.3	24.9	12.2	4.1
	군지역	(163)	23.9	30.7	30.1	12.9	2.5

부표18.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19.7	27.9	28.9	10.2	13.3
성 별	남자	(739)	23.5	28.3	28.4	13.0	6.8
	여자	(761)	15.9	27.5	29.4	7.5	19.7
연 령 별	20대	(357)	26.1	36.7	27.2	3.1	7.0
	30대	(382)	20.7	31.9	28.8	7.9	10.7
	40대	(333)	21.9	23.4	30.3	13.5	10.8
	50대 이상	(428)	11.7	20.3	29.4	15.7	22.9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11.2	17.9	27.6	13.6	29.7
	고졸 이하	(560)	16.6	30.5	29.3	11.8	11.8
	대재 이상	(602)	26.9	31.2	29.4	6.5	6.0
	무응답	(8)	37.5	0.0	25.0	37.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23.8	27.6	32.4	7.6	8.6
	공무원	(28)	17.9	50.0	17.9	10.7	3.6
	화이트칼라	(210)	21.4	32.9	31.0	9.0	5.7
	자영업	(270)	20.4	22.2	29.6	14.4	13.3
	판매/서비스	(32)	25.0	34.4	21.9	3.1	15.6
	블루칼라	(67)	14.9	26.9	32.8	13.4	11.9
	농임어업	(66)	18.2	25.8	27.3	12.1	16.7
	학생	(179)	26.8	38.5	26.8	1.1	6.7
	가정주부	(285)	16.1	29.1	28.4	8.8	17.5
	기타	(97)	16.5	21.6	24.7	14.4	22.7
	무직	(140)	16.4	17.9	29.3	12.9	23.6
	무응답	(21)	9.5	9.5	42.9	33.3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7.9	23.4	29.2	11.3	18.3
	150~300만원	(670)	20.9	30.3	29.7	9.0	10.1
	300만원 이상	(278)	20.1	31.3	28.1	11.2	9.4
	무응답	(65)	18.5	21.5	23.1	10.8	26.2
지 역 별	서울	(335)	22.4	27.2	29.0	10.4	11.0
	인천/경기	(375)	21.3	28.3	29.3	10.1	10.9
	강원	(49)	10.2	26.5	28.6	14.3	20.4
	대전/충청	(151)	15.2	21.2	35.1	10.6	17.9
	광주/전라	(171)	25.1	32.2	21.6	4.1	17.0
	대구/경북	(169)	14.2	17.8	36.1	13.0	18.9
	부산/울산/경남	(250)	18.0	36.4	24.8	11.2	9.6
도시 규모 별	대도시	(730)	21.5	28.4	28.1	11.4	10.7
	중소도시	(607)	18.9	27.8	28.2	8.9	16.1
	군지역	(163)	14.1	25.8	35.6	9.8	14.7

부표19.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25.5	40.1	20.4	5.9	8.1
성 별	남자	(739)	20.0	40.6	23.8	9.3	6.2
	여자	(761)	30.9	39.6	17.1	2.6	9.9
연 령 별	20대	(357)	27.5	45.9	19.0	4.2	3.4
	30대	(382)	26.2	39.8	22.3	5.8	6.0
	40대	(333)	28.2	37.8	21.9	6.3	5.7
	50대 이상	(428)	21.3	37.1	18.7	7.2	15.7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23.6	35.5	15.2	5.2	20.6
	고졸 이하	(560)	25.5	41.3	22.0	4.8	6.4
	대재 이상	(602)	26.7	41.2	21.9	7.3	2.8
	무응답	(8)	12.5	62.5	12.5	12.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28.6	41.9	19.0	9.5	1.0
	공무원	(28)	28.6	32.1	14.3	10.7	14.3
	화이트칼라	(210)	25.2	44.8	19.5	7.1	3.3
	자영업	(270)	28.9	38.1	21.1	3.7	8.1
	판매/서비스	(32)	37.5	31.3	25.0	3.1	3.1
	블루칼라	(67)	16.4	41.8	25.4	11.9	4.5
	농림어업	(66)	16.7	47.0	16.7	7.6	12.1
	학생	(179)	27.9	45.8	20.7	4.5	1.1
	가정주부	(285)	24.6	39.6	21.1	3.5	11.2
	기타	(97)	22.7	38.1	16.5	6.2	16.5
	무직	(140)	25.0	30.7	20.0	7.1	17.1
	무응답	(21)	14.3	33.3	33.3	14.3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25.3	38.6	19.5	5.3	11.3
	150~300만원	(670)	25.2	43.0	20.1	5.5	6.1
	300만원 이상	(278)	27.0	36.3	24.5	8.3	4.0
	무응답	(65)	24.6	36.9	12.3	4.6	21.5
지 역 별	서울	(335)	23.3	35.5	26.9	7.5	6.9
	인천/경기	(375)	33.6	35.5	18.7	6.7	5.6
	강원	(49)	32.7	28.6	12.2	14.3	12.2
	대전/충청	(151)	20.5	53.6	14.6	2.0	9.3
	광주/전라	(171)	29.8	40.9	12.3	2.9	14.0
	대구/경북	(169)	17.2	42.6	22.5	4.7	13.0
	부산/울산/경남	(250)	20.8	44.8	23.6	6.4	4.4
도시 규모별	대도시	(730)	24.5	41.2	22.7	4.9	6.6
	중소도시	(607)	27.5	36.7	19.1	7.4	9.2
	군지역	(163)	22.7	47.2	14.7	4.9	10.4

부표20.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한 지지정도.

구 분		사례수 (명)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34.6	45.1	13.2	2.8	4.3
성 별	남자	(739)	26.7	48.8	17.1	4.5	3.0
	여자	(761)	42.3	41.4	9.5	1.2	5.7
연 령 별	20대	(357)	40.9	48.2	8.1	1.1	1.7
	30대	(382)	37.7	44.5	15.2	1.3	1.3
	40대	(333)	36.3	45.0	12.6	3.0	3.0
	50대 이상	(428)	25.2	43.0	16.1	5.4	10.3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26.4	44.2	10.9	5.2	13.3
	고졸 이하	(560)	33.0	45.2	17.0	2.7	2.1
	대재 이상	(602)	40.5	45.5	11.0	1.5	1.5
	무응답	(8)	37.5	37.5	12.5	12.5	0.0
직업 별	전문직	(105)	41.9	42.9	11.4	1.9	1.9
	공무원	(28)	32.1	42.9	21.4	3.6	0.0
	화이트칼라	(210)	32.4	48.6	14.8	2.9	1.4
	자영업	(270)	34.1	46.7	15.2	2.2	1.9
	판매/서비스	(32)	46.9	28.1	25.0	0.0	0.0
	블루칼라	(67)	29.9	46.3	17.9	3.0	3.0
	농임어업	(66)	19.7	47.0	18.2	10.6	4.5
	학생	(179)	45.3	46.4	6.1	1.1	1.1
	가정주부	(285)	37.9	43.9	10.2	1.1	7.0
	기타	(97)	26.8	44.3	15.5	2.1	11.3
	무직	(140)	28.6	43.6	9.3	6.4	12.1
	무응답	(21)	14.3	38.1	38.1	9.5	0.0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30.4	43.9	14.6	3.5	7.6
	150~300만원	(670)	36.9	45.8	12.7	1.9	2.7
	300만원 이상	(278)	36.0	45.3	12.6	4.0	2.2
	무응답	(65)	36.9	44.6	10.8	1.5	6.2
지역 별	서울	(335)	35.8	40.9	15.2	4.2	3.9
	인천/경기	(375)	42.4	40.8	11.7	2.4	2.7
	강원	(49)	36.7	40.8	10.2	8.2	4.1
	대전/충청	(151)	25.8	52.3	14.6	2.0	5.3
	광주/전라	(171)	40.9	44.4	9.9	0.0	4.7
	대구/경북	(169)	21.3	48.5	18.3	1.2	10.7
	부산/울산/경남	(250)	30.8	51.6	11.2	4.0	2.4
도시 규모 별	대도시	(730)	34.0	45.8	14.1	2.7	3.4
	중소도시	(607)	37.1	43.2	11.9	3.0	4.9
	군지역	(163)	28.2	49.1	14.1	2.5	6.1

부표21.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한 지지정도(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12.0	16.2	31.1	37.9	2.8
성 별	남자	(739)	13.9	17.2	34.0	32.6	2.3
	여자	(761)	10.1	15.2	28.3	43.1	3.3
연령 별	20대	(357)	4.5	11.8	28.0	53.8	2.0
	30대	(382)	6.8	12.8	33.5	45.0	1.8
	40대	(333)	13.5	20.1	31.8	33.3	1.2
	50대 이상	(428)	21.7	19.9	30.8	22.0	5.6
학력 별	중졸 이하	(330)	20.0	19.4	33.6	20.9	6.1
	고졸 이하	(560)	12.1	17.9	29.5	38.2	2.3
	대재 이상	(602)	7.5	13.0	31.1	47.0	1.5
	무응답	(8)	12.5	12.5	37.5	37.5	0.0
직업 별	전문직	(105)	9.5	8.6	34.3	47.6	0.0
	공무원	(28)	14.3	10.7	14.3	60.7	0.0
	화이트칼라	(210)	7.1	13.8	32.4	45.7	1.0
	자영업	(270)	10.4	20.4	32.6	34.4	2.2
	판매/서비스	(32)	9.4	12.5	40.6	34.4	3.1
	블루칼라	(67)	19.4	20.9	34.3	25.4	0.0
	농림어업	(66)	39.4	13.6	25.8	21.2	0.0
	학생	(179)	2.8	11.7	30.2	52.5	2.8
	가정주부	(285)	9.1	20.7	28.4	38.9	2.8
	기타	(97)	11.3	16.5	35.1	25.8	11.3
	무직	(140)	22.9	13.6	30.7	26.4	6.4
	무응답	(21)	33.3	23.8	23.8	19.0	0.0
소득 별	150만원 미만	(487)	16.0	18.1	30.4	31.6	3.9
	150~300만원	(670)	9.9	14.5	31.6	41.0	3.0
	300만원 이상	(278)	7.9	17.3	29.5	44.6	0.7
	무응답	(65)	21.5	15.4	36.9	24.6	1.5
지역 별	서울	(335)	9.0	17.3	33.4	37.3	3.0
	인천/경기	(375)	10.9	15.7	27.7	43.5	2.1
	강원	(49)	30.6	14.3	22.4	30.6	2.0
	대전/충청	(151)	12.6	13.9	41.1	26.5	6.0
	광주/전라	(171)	16.4	18.1	28.1	35.1	2.3
	대구/경북	(169)	8.9	17.8	35.5	33.7	4.1
	부산/울산/경남	(250)	12.8	14.8	27.6	43.6	1.2
도시 규모 별	대도시	(730)	8.9	15.1	33.6	39.7	2.7
	중소도시	(607)	14.0	16.8	28.7	37.4	3.1
	군지역	(163)	18.4	19.0	28.8	31.9	1.8

부표22.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대 학의 기여입 학은 필 요하 다”에 대 해				
			전 적 으 로 찬 성	약 간 찬 성	약 간 반 대	절 대 반 대	모 르 겠 다
전 체		(1,500)	5.7	23.8	23.6	36.9	10.0
성 별	남 자	(739)	5.5	27.5	22.2	37.6	7.2
	여 자	(761)	5.8	20.2	25.0	36.3	12.7
연 령 별	20대	(357)	4.8	21.6	27.2	41.2	5.3
	30대	(382)	6.0	26.7	24.9	36.4	6.0
	40대	(333)	6.9	29.1	23.4	33.0	7.5
	50대 이상	(428)	5.1	18.9	19.6	36.9	19.4
학 력 별	중 졸 이 하	(330)	4.5	16.4	17.0	41.2	20.9
	고 졸 이 하	(560)	5.9	23.0	23.9	36.8	10.4
	대 재 이 상	(602)	5.8	28.7	26.9	34.7	3.8
	무응답	(8)	25.0	12.5	25.0	37.5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3.8	33.3	26.7	33.3	2.9
	공무원	(28)	10.7	32.1	17.9	32.1	7.1
	화이트칼라	(210)	4.3	31.4	29.5	31.9	2.9
	자영업	(270)	6.7	24.4	19.3	39.3	10.4
	판매/서비스	(32)	15.6	28.1	18.8	28.1	9.4
	블루칼라	(67)	6.0	20.9	23.9	43.3	6.0
	농림어업	(66)	4.5	24.2	15.2	45.5	10.6
	학생	(179)	4.5	20.1	27.4	42.5	5.6
	가정주부	(285)	6.7	22.1	23.5	33.0	14.7
	기타	(97)	6.2	17.5	22.7	34.0	19.6
	무직	(140)	3.6	16.4	22.1	41.4	16.4
	무응답	(21)	4.8	14.3	28.6	38.1	14.3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5.3	20.3	18.7	42.1	13.6
	150~300만원	(670)	5.1	24.8	24.8	36.0	9.4
	300만원 이상	(278)	7.2	28.4	27.7	32.0	4.7
	무응답	(65)	7.7	20.0	30.8	29.2	12.3
지 역 별	서울	(335)	5.7	26.3	25.7	36.1	6.3
	인천/경기	(375)	6.4	28.3	22.1	33.6	9.6
	강원	(49)	18.4	14.3	16.3	40.8	10.2
	대전/충청	(151)	4.6	23.8	20.5	34.4	16.6
	광주/전라	(171)	5.8	19.9	18.7	37.4	18.1
	대구/경북	(169)	1.2	17.2	20.1	49.1	12.4
	부산/울산/경남	(250)	5.6	22.8	32.0	35.2	4.4
도 시 규 모 별	대 도시	(730)	5.6	24.4	25.9	36.6	7.5
	중 소 도 시	(607)	6.3	22.4	21.9	37.9	11.5
	군 지 역	(163)	3.7	26.4	19.6	35.0	15.3

부표23.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다에 대한 지지정도

(단위 : %)

구 분		사례 수 (명)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	약간 찬성	약간 반대	절대 반대	모르 겠다
전 체		(1,500)	34.5	39.1	17.4	2.7	6.3
성 별	남자	(739)	34.4	40.6	17.1	3.0	5.0
	여자	(761)	34.7	37.7	17.7	2.4	7.5
연 령 별	20대	(357)	32.5	43.4	19.3	0.8	3.9
	30대	(382)	34.3	39.8	18.6	3.7	3.7
	40대	(333)	36.3	42.9	14.1	3.3	3.3
	50대 이상	(428)	35.0	32.0	17.3	2.8	12.9
학 령 별	중졸 이하	(330)	28.2	35.2	16.4	4.8	15.5
	고졸 이하	(560)	36.6	38.4	17.9	3.0	4.1
	대재 이상	(602)	35.5	42.2	17.8	1.2	3.3
	무응답	(8)	75.0	25.0	0.0	0.0	0.0
직 업 별	전문직	(105)	31.4	44.8	19.0	1.9	2.9
	공무원	(28)	28.6	42.9	14.3	3.6	10.7
	화이트칼라	(210)	31.9	44.3	19.0	1.4	3.3
	자영업	(270)	41.1	38.5	13.3	2.6	4.4
	판매/서비스	(32)	21.9	50.0	18.8	0.0	9.4
	블루칼라	(67)	34.3	46.3	10.4	7.5	1.5
	농림어업	(66)	34.8	36.4	15.2	7.6	6.1
	학생	(179)	32.4	44.7	19.6	0.0	3.4
	가정주부	(285)	38.2	32.6	18.9	2.8	7.4
	기타	(97)	39.2	27.8	19.6	1.0	12.4
	무직	(140)	24.3	38.6	17.1	5.0	15.0
	무응답	(21)	33.3	28.6	28.6	4.8	4.8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32.0	35.9	17.9	3.7	10.5
	150~300만원	(670)	36.3	39.9	16.7	2.7	4.5
	300만원 이상	(278)	34.9	42.4	19.4	0.7	2.5
	무응답	(65)	33.8	41.5	12.3	3.1	9.2
지 역 별	서울	(335)	31.9	38.5	21.8	2.1	5.7
	인천/경기	(375)	39.2	41.1	13.3	1.9	4.5
	강원	(49)	53.1	32.7	10.2	2.0	2.0
	대전/충청	(151)	32.5	34.4	19.9	3.3	9.9
	광주/전라	(171)	36.3	38.6	15.8	3.5	5.8
	대구/경북	(169)	26.0	35.5	20.1	4.1	14.2
	부산/울산/경남	(250)	33.2	44.0	16.8	2.8	3.2
도시 규모별	대도시	(730)	31.1	41.0	19.3	2.3	6.3
	중소도시	(607)	37.2	37.6	15.8	3.1	6.3
	군지역	(163)	39.9	36.8	14.7	2.5	6.1

부표24. 국회의원 또는 선거출마 후보자(정당, 정치인 등)를 후원하는 단체에 가입여부 (단위 : %)

구 분		사례수 (명)	정당,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여부	
			가입하고 있다	가입하고 있지 않다
전 체		(1,500)	4.2	95.8
성 별	남 자	(739)	4.7	95.3
	여 자	(761)	3.7	96.3
연 령 별	20대	(357)	2.5	97.5
	30대	(382)	5.2	94.8
	40대	(333)	5.4	94.6
	50대 이상	(428)	3.7	96.3
학 력 별	중졸 이하	(330)	2.7	97.3
	고졸 이하	(560)	5.4	94.6
	대재 이상	(602)	3.7	96.3
	무응답	(8)	25.0	75.0
직 업 별	전문직	(105)	2.9	97.1
	공무원	(28)	0.0	100.0
	화이트칼라	(210)	3.3	96.7
	자영업	(270)	5.9	94.1
	판매/서비스	(32)	9.4	90.6
	블루칼라	(67)	4.5	95.5
	농임어업	(66)	9.1	90.9
	학생	(179)	2.8	97.2
	가정주부	(285)	4.6	95.4
	기타	(97)	3.1	96.9
	무직	(140)	2.9	97.1
	무응답	(21)	0.0	100.0
소 득 별	150만원 미만	(487)	5.1	94.9
	150~300만원	(670)	3.9	96.1
	300만원 이상	(278)	3.6	96.4
	무응답	(65)	3.1	96.9
지 역 별	서울	(335)	3.0	97.0
	인천/경기	(375)	4.3	95.7
	강원	(49)	2.0	98.0
	대전/충청	(151)	4.6	95.4
	광주/전라	(171)	7.6	92.4
	대구/경북	(169)	1.2	98.8
	부산/울산/경남	(250)	5.6	94.4
도시규모별	대도시	(730)	3.8	96.2
	중소도시	(607)	4.0	96.0
	군지역	(163)	6.7	93.3

부표25. 성별 \* 선거관심도 \* 연령별

% within 성별

			선거관심도				Total
연령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조금 있었다	매우 많았다	
20대	성별	남자	2.2%	11.7%	44.4%	41.7%	100.0%
		여자	2.3%	17.5%	56.5%	23.7%	100.0%
	Total		2.2%	14.6%	50.4%	32.8%	100.0%
30대	성별	남자	.5%	11.7%	42.6%	45.2%	100.0%
		여자	1.6%	16.8%	46.5%	35.1%	100.0%
	Total		1.0%	14.1%	44.5%	40.3%	100.0%
40대	성별	남자	1.8%	10.2%	37.7%	50.3%	100.0%
		여자	2.4%	13.3%	39.8%	44.6%	100.0%
	Total		2.1%	11.7%	38.7%	47.4%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0%	7.2%	29.2%	62.6%	100.0%
		여자	2.6%	19.7%	33.9%	43.8%	100.0%
	Total		1.9%	14.0%	31.8%	52.3%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3.429(a)	3	.004
30대	Pearson Chi-Square	5.578(b)	3	.134
40대	Pearson Chi-Square	1.484(c)	3	.686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1.205(d)	3	.000

부표26. 성별 \* 공정성(지난 선거와 비교) \* 연령별

% within 성별

			공정성(지난 선거와 비교)					Total
연령별			매우 혼탁했다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비슷했다	다소 깨끗했다	매우 깨끗했다	
20대	성별	남자		6.7%	7.2%	68.3%	17.8%	100.0%
		여자	.6%	7.9%	11.3%	70.1%	10.2%	100.0%
	Total		.3%	7.3%	9.2%	69.2%	14.0%	100.0%
30대	성별	남자	1.0%	5.1%	10.7%	62.4%	20.8%	100.0%
		여자	1.6%	5.9%	12.4%	65.4%	14.6%	100.0%
	Total		1.3%	5.5%	11.5%	63.9%	17.8%	100.0%
40대	성별	남자	1.8%	7.8%	7.8%	53.3%	29.3%	100.0%
		여자	3.0%	6.0%	11.4%	51.2%	28.3%	100.0%
	Total		2.4%	6.9%	9.6%	52.3%	28.8%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5%	5.1%	7.7%	44.1%	42.6%	100.0%
		여자	.4%	3.4%	12.4%	48.9%	34.8%	100.0%
	Total		.5%	4.2%	10.3%	46.7%	38.3%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6.538(a)	4	.162
30대	Pearson Chi-Square	2.863(b)	4	.581
40대	Pearson Chi-Square	2.147(c)	4	.709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5.289(d)	4	.259

부표27. 성별 \* 정부의 중립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정부의 중립					Total
			무응답	전혀 지키지 못했다	별로 지키지 못했다	대체로 잘 지켰다	매우 잘 지켰다	
20대	성별	남자	.6%	2.2%	12.8%	72.8%	11.7%	100.0%
		여자		1.1%	22.0%	71.8%	5.1%	100.0%
	Total		.3%	1.7%	17.4%	72.3%	8.4%	100.0%
30대	성별	남자	.5%	2.0%	15.7%	70.1%	11.7%	100.0%
		여자	.5%	1.1%	26.5%	64.9%	7.0%	100.0%
	Total		.5%	1.6%	20.9%	67.5%	9.4%	100.0%
40대	성별	남자	.6%	3.0%	18.0%	59.3%	19.2%	100.0%
		여자		3.0%	15.7%	69.9%	11.4%	100.0%
	Total		.3%	3.0%	16.8%	64.6%	15.3%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0%	1.5%	18.5%	59.0%	20.0%	100.0%
		여자	.9%	1.7%	13.3%	64.4%	19.7%	100.0%
	Total		.9%	1.6%	15.7%	61.9%	19.9%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0.633(a)	4	.031
30대	Pearson Chi-Square	8.382(b)	4	.079
40대	Pearson Chi-Square	5.941(c)	4	.204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360(d)	4	.670

부표28. 성별 \* 투표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투표여부		Total
			투표하지 않았다	투표했다	
20대	성별	남자	16.7%	83.3%	100.0%
		여자	19.2%	80.8%	100.0%
	Total		17.9%	82.1%	100.0%
30대	성별	남자	13.2%	86.8%	100.0%
		여자	11.9%	88.1%	100.0%
	Total		12.6%	87.4%	100.0%
40대	성별	남자	7.8%	92.2%	100.0%
		여자	12.7%	87.3%	100.0%
	Total		10.2%	89.8%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3.6%	96.4%	100.0%
		여자	9.0%	91.0%	100.0%
	Total		6.5%	93.5%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392(b)	1	.531		
30대	Pearson Chi-Square	.148(c)	1	.700		
40대	Pearson Chi-Square	2.150(d)	1	.143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5.106(e)	1	.024		

부표29. 성별 \* 투표대상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투표대상						Total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무응답	
20대	성별	남자	21.3%	71.3%		7.3%			100.0%
		여자	28.0%	63.6%		7.0%		1.4%	100.0%
	Total		24.6%	67.6%		7.2%		.7%	100.0%
30대	성별	남자	27.5%	67.3%		5.3%			100.0%
		여자	38.0%	54.6%		6.7%		.6%	100.0%
	Total		32.6%	61.1%		6.0%		.3%	100.0%
40대	성별	남자	46.8%	47.4%	.6%	4.5%		.6%	100.0%
		여자	42.8%	49.7%		4.8%		2.8%	100.0%
	Total		44.8%	48.5%	.3%	4.7%		1.7%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51.1%	44.7%		2.1%	.5%	1.6%	100.0%
		여자	46.2%	51.9%		1.4%		.5%	100.0%
	Total		48.5%	48.5%		1.8%	.3%	1.0%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4.065(a)	3	.255
30대	Pearson Chi-Square	6.390(b)	3	.094
40대	Pearson Chi-Square	3.285(c)	4	.511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4.223(d)	4	.377

## 부표30. 성별 \* 투표 결정기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투표 결정기준								Total
			정책 /공약	선거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등)	개인적 연고 (출신 지역등)	정치 경력	기타	무응답	
20대	성별	남자	35.3%	.7%	6.7%	51.3%		1.3%	2.0%		100.0%
		여자	23.1%	.7%	8.4%	58.0%		4.2%	5.6%		100.0%
	Total		29.4%	.7%	7.5%	54.6%	1.4%	2.7%	3.8%		100.0%
30대	성별	남자	22.8%	1.2%	5.8%	58.5%	2.3%	7.0%	2.3%		100.0%
		여자	27.0%	1.2%	8.6%	55.8%	1.2%	3.7%	2.5%		100.0%
	Total		24.9%	1.2%	7.2%	57.2%	1.8%	5.4%	2.4%		100.0%
40대	성별	남자	24.0%		9.1%	54.5%		9.7%	1.9%	.6%	100.0%
		여자	23.4%		11.0%	52.4%	2.8%	9.0%	1.4%		100.0%
	Total		23.7%		10.0%	53.5%	1.3%	9.4%	1.7%	.3%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6.5%	1.1%	8.5%	58.5%	1.1%	9.0%	4.8%	.5%	100.0%
		여자	18.9%	.9%	9.4%	55.2%	.5%	7.1%	7.5%	.5%	100.0%
	Total		17.8%	1.0%	9.0%	56.8%	.8%	8.0%	6.3%	.5%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3.171(a)	6	.040
30대	Pearson Chi-Square	3.869(b)	6	.694
40대	Pearson Chi-Square	5.737(c)	6	.453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790(d)	7	.904

부표31. 성별 \* 투표 결정기준(정책,비정책)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투표 결정기준(정책,비정책)		Total
			비정책	정책	
20대	성별	남자	64.7%	35.3%	100.0%
		여자	76.9%	23.1%	100.0%
	Total		70.6%	29.4%	100.0%
30대	성별	남자	77.2%	22.8%	100.0%
		여자	73.0%	27.0%	100.0%
	Total		75.1%	24.9%	100.0%
40대	성별	남자	76.0%	24.0%	100.0%
		여자	76.6%	23.4%	100.0%
	Total		76.3%	23.7%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83.5%	16.5%	100.0%
		여자	81.1%	18.9%	100.0%
	Total		82.3%	17.8%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5.303(b)	1	.021		
30대	Pearson Chi-Square	.783(c)	1	.376		
40대	Pearson Chi-Square	.014(d)	1	.90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386(e)	1	.534		

부표32. 성별 \* 대통령임기 인지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대통령임기 인지여부		Total
			오답	정답	
20대	성별	남자	7.8%	92.2%	100.0%
		여자	6.8%	93.2%	100.0%
	Total		7.3%	92.7%	100.0%
30대	성별	남자	7.6%	92.4%	100.0%
		여자	10.3%	89.7%	100.0%
	Total		8.9%	91.1%	100.0%
40대	성별	남자	3.0%	97.0%	100.0%
		여자	5.4%	94.6%	100.0%
	Total		4.2%	95.8%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4.1%	95.9%	100.0%
		여자	16.7%	83.3%	100.0%
	Total		11.0%	89.0%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32(b)	1	.717		
30대	Pearson Chi-Square	.830(c)	1	.362		
40대	Pearson Chi-Square	1.218(d)	1	.270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7.338(e)	1	.000		

부표33. 성별 \* 광역단체장 인지에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광역단체장 인지에부		Total
			오답	정답	
20대	성별	남자	43.9%	56.1%	100.0%
		여자	52.5%	47.5%	100.0%
	Total		48.2%	51.8%	100.0%
30대	성별	남자	31.5%	68.5%	100.0%
		여자	43.2%	56.8%	100.0%
	Total		37.2%	62.8%	100.0%
40대	성별	남자	19.8%	80.2%	100.0%
		여자	31.3%	68.7%	100.0%
	Total		25.5%	74.5%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29.7%	70.3%	100.0%
		여자	56.2%	43.8%	100.0%
	Total		44.2%	55.8%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2.677(b)	1	.102		
30대	Pearson Chi-Square	5.660(c)	1	.017		
40대	Pearson Chi-Square	5.857(d)	1	.016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30.185(e)	1	.000		

부표34. 성별 \* 정치적 사건, 선거에 관심정도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정치적 사건, 선거에 관심정도							Total
			전혀 없다	2	3	4	5	6	매우 많다	
20대	성별	남자	3.3%	10.6%	17.8%	31.7%	20.0%	10.0%	6.7%	100.0%
		여자	2.8%	16.4%	33.9%	23.7%	13.6%	6.8%	2.8%	100.0%
	Total		3.1%	13.4%	25.8%	27.7%	16.8%	8.4%	4.8%	100.0%
30대	성별	남자	2.0%	9.1%	15.7%	31.5%	25.4%	8.6%	7.6%	100.0%
		여자	2.2%	14.6%	28.6%	28.6%	17.8%	4.3%	3.8%	100.0%
	Total		2.1%	11.8%	22.0%	30.1%	21.7%	6.5%	5.8%	100.0%
40대	성별	남자	4.8%	7.2%	10.8%	27.5%	25.7%	11.4%	12.6%	100.0%
		여자	3.0%	16.3%	18.7%	27.7%	18.7%	8.4%	7.2%	100.0%
	Total		3.9%	11.7%	14.7%	27.6%	22.2%	9.9%	9.9%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5.6%	7.7%	10.8%	31.3%	16.9%	12.3%	15.4%	100.0%
		여자	11.6%	22.3%	15.9%	22.7%	12.9%	5.6%	9.0%	100.0%
	Total		8.9%	15.7%	13.6%	26.6%	14.7%	8.6%	11.9%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9.427(a)	6	.003
30대	Pearson Chi-Square	17.538(b)	6	.007
40대	Pearson Chi-Square	15.066(c)	6	.020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34.041(d)	6	.000

부표35. 성별 \* 호주,호적제 존폐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호주,호적제 존폐여부					Total
			현행 유지	일부 개선	모르겠다	크게 수정	완전 폐지	
20대	성별	남자	17.8%	36.1%	10.6%	18.3%	17.2%	100.0%
		여자	7.3%	33.3%	5.1%	23.7%	30.5%	100.0%
	Total		12.6%	34.7%	7.8%	21.0%	23.8%	100.0%
30대	성별	남자	16.2%	32.5%	8.6%	18.8%	23.9%	100.0%
		여자	5.9%	31.9%	7.6%	25.4%	29.2%	100.0%
	Total		11.3%	32.2%	8.1%	22.0%	26.4%	100.0%
40대	성별	남자	31.7%	26.3%	7.2%	16.2%	18.6%	100.0%
		여자	17.5%	31.3%	9.0%	19.3%	22.9%	100.0%
	Total		24.6%	28.8%	8.1%	17.7%	20.7%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37.9%	23.6%	12.3%	12.8%	13.3%	100.0%
		여자	31.3%	24.0%	26.6%	8.6%	9.4%	100.0%
	Total		34.3%	23.8%	20.1%	10.5%	11.2%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9.164(a)	4	.001
30대	Pearson Chi-Square	12.060(b)	4	.017
40대	Pearson Chi-Square	9.155(c)	4	.05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5.414(d)	4	.004

부표36. 성별 \* 여성관련 문제 중 관심분야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여성관련 문제 중 관심분야							Total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교육	여성의 복지	여성 단체 활동 및 문화 활동	여성의 인권 문제	관심 없다	
20대	성별	남자	18.3%	7.8%	5.6%	13.3%	10.0%	22.2%	22.8%	100.0%
		여자	18.6%	11.3%	8.5%	23.2%	9.0%	24.9%	4.5%	100.0%
	Total		18.5%	9.5%	7.0%	18.2%	9.5%	23.5%	13.7%	100.0%
30대	성별	남자	19.3%	10.7%	6.6%	20.8%	10.2%	15.7%	16.8%	100.0%
		여자	14.6%	9.2%	10.8%	25.4%	13.0%	20.0%	7.0%	100.0%
	Total		17.0%	9.9%	8.6%	23.0%	11.5%	17.8%	12.0%	100.0%
40대	성별	남자	15.6%	13.2%	8.4%	15.0%	11.4%	15.6%	21.0%	100.0%
		여자	13.3%	12.0%	7.2%	22.3%	16.9%	18.1%	10.2%	100.0%
	Total		14.4%	12.6%	7.8%	18.6%	14.1%	16.8%	15.6%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9.2%	9.7%	10.3%	16.9%	10.3%	15.4%	28.2%	100.0%
		여자	6.0%	6.4%	9.9%	21.0%	8.6%	14.6%	33.5%	100.0%
	Total		7.5%	7.9%	10.0%	19.2%	9.3%	15.0%	31.1%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29.014(a)	6	.000
30대	Pearson Chi-Square	13.401(b)	6	.037
40대	Pearson Chi-Square	11.142(c)	6	.084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5.196(d)	6	.519

부표37. 성별 \*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인지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인지여부		Total
			모른다	알고 있다	
20대	성별	남자	43.9%	56.1%	100.0%
		여자	39.0%	61.0%	100.0%
	Total		41.5%	58.5%	100.0%
30대	성별	남자	43.1%	56.9%	100.0%
		여자	43.8%	56.2%	100.0%
	Total		43.5%	56.5%	100.0%
40대	성별	남자	39.5%	60.5%	100.0%
		여자	34.9%	65.1%	100.0%
	Total		37.2%	62.8%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46.2%	53.8%	100.0%
		여자	57.9%	42.1%	100.0%
	Total		52.6%	47.4%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885(b)	1	.347		
30대	Pearson Chi-Square	.016(c)	1	.900		
40대	Pearson Chi-Square	.748(d)	1	.38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5.914(e)	1	.015		
N of Valid Cases		428				

부표38. 성별 \*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참여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참여여부		Total
			없다	있다	
20대	성별	남자	83.2%	16.8%	100.0%
		여자	84.3%	15.7%	100.0%
	Total		83.7%	16.3%	100.0%
30대	성별	남자	89.3%	10.7%	100.0%
		여자	81.7%	18.3%	100.0%
	Total		85.6%	14.4%	100.0%
40대	성별	남자	84.2%	15.8%	100.0%
		여자	63.0%	37.0%	100.0%
	Total		73.2%	26.8%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81.0%	19.0%	100.0%
		여자	71.4%	28.6%	100.0%
	Total		76.4%	23.6%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046(b)	1	.831		
30대	Pearson Chi-Square	2.504(c)	1	.114		
40대	Pearson Chi-Square	11.954(d)	1	.001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547(e)	1	.111		

부표39. 성별 \*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모르겠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20대	성별	남자	.6%	1.7%	13.9%	62.8%	21.1%	100.0%
		여자		1.1%	19.2%	60.5%	19.2%	100.0%
	Total		.3%	1.4%	16.5%	61.6%	20.2%	100.0%
30대	성별	남자	1.0%	1.5%	21.8%	54.8%	20.8%	100.0%
		여자	1.1%	1.1%	16.2%	54.6%	27.0%	100.0%
	Total		1.0%	1.3%	19.1%	54.7%	23.8%	100.0%
40대	성별	남자	.6%	5.4%	18.6%	51.5%	24.0%	100.0%
		여자	.6%	1.2%	23.5%	51.8%	22.9%	100.0%
	Total		.6%	3.3%	21.0%	51.7%	23.4%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5%	3.1%	16.9%	53.8%	24.6%	100.0%
		여자	1.3%	2.6%	20.6%	52.4%	23.2%	100.0%
	Total		1.4%	2.8%	18.9%	53.0%	23.8%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2.934(a)	4	.569
30대	Pearson Chi-Square	3.266(b)	4	.514
40대	Pearson Chi-Square	5.417(c)	4	.24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038(d)	4	.904

부표40. 성별 \*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8.9%	20.6%	1.1%	51.7%	17.8%	100.0%
		여자	8.5%	35.0%	1.7%	40.7%	14.1%	100.0%
	Total		8.7%	27.7%	1.4%	46.2%	16.0%	100.0%
30대	성별	남자	14.2%	23.9%	2.0%	43.1%	16.8%	100.0%
		여자	18.9%	31.9%	2.2%	37.3%	9.7%	100.0%
	Total		16.5%	27.7%	2.1%	40.3%	13.4%	100.0%
40대	성별	남자	13.8%	31.7%	3.6%	35.9%	15.0%	100.0%
		여자	17.5%	30.7%	6.6%	34.3%	10.8%	100.0%
	Total		15.6%	31.2%	5.1%	35.1%	12.9%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22.1%	31.8%	1.5%	29.7%	14.9%	100.0%
		여자	19.7%	25.8%	12.4%	30.0%	12.0%	100.0%
	Total		20.8%	28.5%	7.5%	29.9%	13.3%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0.053(a)	4	.040
30대	Pearson Chi-Square	7.841(b)	4	.098
40대	Pearson Chi-Square	3.415(c)	4	.491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9.179(d)	4	.001

부표40. 성별 \*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16.1%	40.0%	1.7%	29.4%	12.8%	100.0%
		여자	8.5%	49.2%		33.9%	8.5%	100.0%
	Total		12.3%	44.5%	.8%	31.7%	10.6%	100.0%
30대	성별	남자	17.3%	32.5%	3.6%	34.5%	12.2%	100.0%
		여자	9.7%	37.8%	7.6%	34.6%	10.3%	100.0%
	Total		13.6%	35.1%	5.5%	34.6%	11.3%	100.0%
40대	성별	남자	10.8%	31.7%	4.2%	37.1%	16.2%	100.0%
		여자	9.0%	38.0%	10.2%	30.1%	12.7%	100.0%
	Total		9.9%	34.8%	7.2%	33.6%	14.4%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4.9%	29.7%	13.8%	29.2%	12.3%	100.0%
		여자	8.2%	31.3%	32.6%	17.2%	10.7%	100.0%
	Total		11.2%	30.6%	24.1%	22.7%	11.4%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0.963(a)	4	.027
30대	Pearson Chi-Square	7.858(b)	4	.097
40대	Pearson Chi-Square	7.334(c)	4	.119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6.950(d)	4	.000

부표41. 성별 \*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  
이 필요하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4.4%	13.3%	.6%	17.8%	63.9%	100.0%
		여자	2.8%	6.8%		32.8%	57.6%	100.0%
	Total		3.6%	10.1%	.3%	25.2%	60.8%	100.0%
30대	성별	남자	2.5%	9.6%	1.0%	28.9%	57.9%	100.0%
		여자	2.7%	14.6%	3.2%	31.4%	48.1%	100.0%
	Total		2.6%	12.0%	2.1%	30.1%	53.1%	100.0%
40대	성별	남자	6.6%	12.6%	2.4%	29.3%	49.1%	100.0%
		여자	3.6%	13.3%	5.4%	26.5%	51.2%	100.0%
	Total		5.1%	12.9%	3.9%	27.9%	50.2%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1.8%	13.3%	5.6%	22.6%	46.7%	100.0%
		여자	7.3%	11.6%	22.3%	27.9%	30.9%	100.0%
	Total		9.3%	12.4%	14.7%	25.5%	38.1%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3.958(a)	4	.007
30대	Pearson Chi-Square	6.108(b)	4	.191
40대	Pearson Chi-Square	3.737(c)	4	.443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30.730(d)	4	.000

부표42. 성별 \*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7.8%	28.9%	3.3%	37.8%	22.2%	100.0%
		여자	7.3%	26.6%	1.7%	46.3%	18.1%	100.0%
	Total		7.6%	27.7%	2.5%	42.0%	20.2%	100.0%
30대	성별	남자	11.2%	24.9%	2.0%	37.1%	24.9%	100.0%
		여자	13.0%	30.8%	2.2%	35.7%	18.4%	100.0%
	Total		12.0%	27.7%	2.1%	36.4%	21.7%	100.0%
40대	성별	남자	6.6%	25.1%	3.0%	39.5%	25.7%	100.0%
		여자	15.1%	27.7%	2.4%	35.5%	19.3%	100.0%
	Total		10.8%	26.4%	2.7%	37.5%	22.5%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1.3%	22.1%	4.1%	32.8%	29.7%	100.0%
		여자	15.0%	25.8%	11.2%	26.6%	21.5%	100.0%
	Total		13.3%	24.1%	7.9%	29.4%	25.2%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3.460(a)	4	.484
30대	Pearson Chi-Square	3.380(b)	4	.496
40대	Pearson Chi-Square	7.740(c)	4	.102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2.650(d)	4	.013

부표43. 성별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4.4%	26.1%	3.9%	31.7%	33.9%	100.0%
		여자	1.7%	28.2%	10.2%	41.8%	18.1%	100.0%
	Total		3.1%	27.2%	7.0%	36.7%	26.1%	100.0%
30대	성별	남자	9.1%	26.9%	7.1%	32.5%	24.4%	100.0%
		여자	6.5%	30.8%	14.6%	31.4%	16.8%	100.0%
	Total		7.9%	28.8%	10.7%	31.9%	20.7%	100.0%
40대	성별	남자	13.2%	30.5%	6.0%	24.6%	25.7%	100.0%
		여자	13.9%	30.1%	15.7%	22.3%	18.1%	100.0%
	Total		13.5%	30.3%	10.8%	23.4%	21.9%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24.6%	30.3%	9.7%	24.1%	11.3%	100.0%
		여자	8.2%	28.8%	33.9%	17.2%	12.0%	100.0%
	Total		15.7%	29.4%	22.9%	20.3%	11.7%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8.431(a)	4	.001
30대	Pearson Chi-Square	9.053(b)	4	.060
40대	Pearson Chi-Square	9.661(c)	4	.04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48.083(d)	4	.000

부표44. 성별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7.8%	27.2%	3.3%	43.3%	18.3%	100.0%
		여자	.6%	10.7%	3.4%	48.6%	36.7%	100.0%
	Total		4.2%	19.0%	3.4%	45.9%	27.5%	100.0%
30대	성별	남자	8.1%	22.8%	6.6%	42.6%	19.8%	100.0%
		여자	3.2%	21.6%	5.4%	36.8%	33.0%	100.0%
	Total		5.8%	22.3%	6.0%	39.8%	26.2%	100.0%
40대	성별	남자	10.2%	21.6%	5.4%	37.7%	25.1%	100.0%
		여자	2.4%	22.3%	6.0%	38.0%	31.3%	100.0%
	Total		6.3%	21.9%	5.7%	37.8%	28.2%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1.3%	23.6%	9.2%	38.5%	17.4%	100.0%
		여자	3.9%	14.6%	21.0%	36.1%	24.5%	100.0%
	Total		7.2%	18.7%	15.7%	37.1%	21.3%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35.318(a)	4	.000
30대	Pearson Chi-Square	11.389(b)	4	.023
40대	Pearson Chi-Square	9.175(c)	4	.05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4.739(d)	4	.000

부표45. 성별 \*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2.2%	12.2%	1.7%	53.9%	30.0%	100.0%
		여자		4.0%	1.7%	42.4%	52.0%	100.0%
	Total		1.1%	8.1%	1.7%	48.2%	40.9%	100.0%
30대	성별	남자	2.5%	18.3%	1.5%	46.7%	31.0%	100.0%
		여자		11.9%	1.1%	42.2%	44.9%	100.0%
	Total		1.3%	15.2%	1.3%	44.5%	37.7%	100.0%
40대	성별	남자	4.2%	15.0%	2.4%	51.5%	26.9%	100.0%
		여자	1.8%	10.2%	3.6%	38.6%	45.8%	100.0%
	Total		3.0%	12.6%	3.0%	45.0%	36.3%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8.7%	22.1%	6.2%	44.1%	19.0%	100.0%
		여자	2.6%	11.2%	13.7%	42.1%	30.5%	100.0%
	Total		5.4%	16.1%	10.3%	43.0%	25.2%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24.440(a)	4	.000
30대	Pearson Chi-Square	12.729(b)	4	.013
40대	Pearson Chi-Square	14.690(c)	4	.005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26.864(d)	4	.000

부표46. 성별 \*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44.4%	33.3%	2.8%	13.9%	5.6%	100.0%
		여자	63.3%	22.6%	1.1%	9.6%	3.4%	100.0%
	Total		53.8%	28.0%	2.0%	11.8%	4.5%	100.0%
30대	성별	남자	38.6%	38.1%	1.5%	13.7%	8.1%	100.0%
		여자	51.9%	28.6%	2.2%	11.9%	5.4%	100.0%
	Total		45.0%	33.5%	1.8%	12.8%	6.8%	100.0%
40대	성별	남자	28.7%	32.9%	1.8%	21.0%	15.6%	100.0%
		여자	38.0%	30.7%	.6%	19.3%	11.4%	100.0%
	Total		33.3%	31.8%	1.2%	20.1%	13.5%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19.0%	31.3%	3.1%	20.5%	26.2%	100.0%
		여자	24.5%	30.5%	7.7%	19.3%	18.0%	100.0%
	Total		22.0%	30.8%	5.6%	19.9%	21.7%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13.119(a)	4	.011
30대	Pearson Chi-Square	7.775(b)	4	.100
40대	Pearson Chi-Square	4.398(c)	4	.355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8.874(d)	4	.064

부표47. 성별 \*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46.7%	22.2%	4.4%	21.7%	5.0%	100.0%
		여자	35.6%	32.2%	6.2%	21.5%	4.5%	100.0%
	Total		41.2%	27.2%	5.3%	21.6%	4.8%	100.0%
30대	성별	남자	31.0%	22.8%	4.6%	35.5%	6.1%	100.0%
		여자	42.2%	27.0%	7.6%	17.3%	5.9%	100.0%
	Total		36.4%	24.9%	6.0%	26.7%	6.0%	100.0%
40대	성별	남자	31.7%	25.1%	6.6%	29.3%	7.2%	100.0%
		여자	34.3%	21.7%	8.4%	28.9%	6.6%	100.0%
	Total		33.0%	23.4%	7.5%	29.1%	6.9%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41.0%	19.0%	12.8%	23.1%	4.1%	100.0%
		여자	33.5%	20.2%	24.9%	15.5%	6.0%	100.0%
	Total		36.9%	19.6%	19.4%	18.9%	5.1%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6.500(a)	4	.165
30대	Pearson Chi-Square	17.270(b)	4	.002
40대	Pearson Chi-Square	1.018(c)	4	.907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3.707(d)	4	.008

부표48. 성별 \*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 연령별

% within 성별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연령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20대	성별	남자	1.1%	18.3%	3.9%	46.7%	30.0%	100.0%
		여자	.6%	20.3%	4.0%	40.1%	35.0%	100.0%
	Total		.8%	19.3%	3.9%	43.4%	32.5%	100.0%
30대	성별	남자	3.6%	16.8%	3.0%	45.2%	31.5%	100.0%
		여자	3.8%	20.5%	4.3%	34.1%	37.3%	100.0%
	Total		3.7%	18.6%	3.7%	39.8%	34.3%	100.0%
40대	성별	남자	3.6%	14.4%	3.6%	40.1%	38.3%	100.0%
		여자	3.0%	13.9%	3.0%	45.8%	34.3%	100.0%
	Total		3.3%	14.1%	3.3%	42.9%	36.3%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3.6%	18.5%	9.2%	30.8%	37.9%	100.0%
		여자	2.1%	16.3%	15.9%	33.0%	32.6%	100.0%
	Total		2.8%	17.3%	12.9%	32.0%	35.0%	100.0%

##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2.081(a)	4	.721
30대	Pearson Chi-Square	5.087(b)	4	.278
40대	Pearson Chi-Square	1.171(c)	4	.883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5.759(d)	4	.218

부표49. 성별 \*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여부		Total
연령별			가입하고 있지 않다	가입하고 있다	
20대	성별	남자	97.2%	2.8%	100.0%
		여자	97.7%	2.3%	100.0%
	Total		97.5%	2.5%	100.0%
30대	성별	남자	95.4%	4.6%	100.0%
		여자	94.1%	5.9%	100.0%
	Total		94.8%	5.2%	100.0%
40대	성별	남자	92.2%	7.8%	100.0%
		여자	97.0%	3.0%	100.0%
	Total		94.6%	5.4%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95.9%	4.1%	100.0%
		여자	96.6%	3.4%	100.0%
	Total		96.3%	3.7%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097(b)	1	.755		
30대	Pearson Chi-Square	.365(c)	1	.546		
40대	Pearson Chi-Square	3.708(d)	1	.054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132(e)	1	.716		

부표50. 성별 \* 가입단체여부 \* 연령별

% within 성별

연령별			가입단체여부		Total
			미가입	가입	
20대	성별	남자	68.9%	31.1%	100.0%
		여자	72.3%	27.7%	100.0%
	Total		70.6%	29.4%	100.0%
30대	성별	남자	60.4%	39.6%	100.0%
		여자	67.0%	33.0%	100.0%
	Total		63.6%	36.4%	100.0%
40대	성별	남자	62.3%	37.7%	100.0%
		여자	56.6%	43.4%	100.0%
	Total		59.5%	40.5%	100.0%
50대 이상	성별	남자	62.1%	37.9%	100.0%
		여자	71.2%	28.8%	100.0%
	Total		67.1%	32.9%	100.0%

Chi-Square Tests

연령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20대	Pearson Chi-Square	.505(b)	1	.477		
30대	Pearson Chi-Square	1.807(c)	1	.179		
40대	Pearson Chi-Square	1.102(d)	1	.294		
50대 이상	Pearson Chi-Square	4.061(e)	1	.044		
N of Valid Cases		428				

부표51. 성별 \* 선거관심도 \* 학력별

% within 성별

			선거관심도				Total
학력별			전혀 없었다	별로 없었다	조금 있었다	매우 많았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16.7%	50.0%	33.3%	100.0%
	Total			37.5%	37.5%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5%	15.3%	31.4%	50.8%	100.0%
		여자	4.2%	22.6%	31.1%	42.0%	100.0%
	Total		3.6%	20.0%	31.2%	45.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	10.8%	42.4%	46.1%	100.0%
		여자	1.7%	14.8%	47.4%	36.1%	100.0%
	Total		1.3%	12.9%	45.0%	40.9%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4%	7.4%	38.0%	53.1%	100.0%
		여자	1.2%	15.1%	49.2%	34.5%	100.0%
	Total		1.3%	10.6%	42.7%	45.3%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2	.108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3.994(b)	3	.262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7.017(c)	3	.071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23.639(d)	3	.000

부표52. 성별 \* 공정성(지난 선거와 비교)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공정성(지난 선거와 비교)					Total
			매우 흔탁했다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비슷했 다	다소 깨끗했다	매우 깨끗했다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16.7%	33.3%	16.7%	16.7%	100.0%
	Total		12.5%	25.0%	25.0%	25.0%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5%	9.3%	44.1%	44.1%	100.0%
		여자		2.4%	14.2%	45.3%	38.2%	100.0%
	Total			2.4%	12.4%	44.8%	40.3%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1.5%	7.1%	11.9%	54.6%	24.9%	100.0%
		여자	2.7%	7.2%	12.7%	59.5%	17.9%	100.0%
	Total		2.1%	7.1%	12.3%	57.1%	21.3%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6%	6.3%	5.4%	63.1%	24.6%	100.0%
		여자	.4%	6.3%	8.7%	69.0%	15.5%	100.0%
	Total		.5%	6.3%	6.8%	65.6%	20.8%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2.667(a)	4	.615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104(b)	3	.551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942(c)	4	.293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9.051(d)	4	.060

부표53. 성별 \* 정부의 중립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정부의 중립					Total
			무응답	전혀 지키지 못했다	별로 지키지 못했다	대체로 잘 지켰다	매우 잘 지켰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66.7%	33.3%		100.0%
	Total				50.0%	50.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8%	2.5%	21.2%	53.4%	22.0%	100.0%
		여자	.9%	1.4%	13.7%	64.2%	19.8%	100.0%
	Total		.9%	1.8%	16.4%	60.3%	20.6%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	2.2%	17.5%	66.2%	13.4%	100.0%
		여자	.3%	2.1%	17.9%	71.8%	7.9%	100.0%
	Total		.5%	2.1%	17.7%	69.1%	10.5%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6%	2.0%	13.7%	68.6%	15.1%	100.0%
		여자		1.6%	23.8%	65.9%	8.7%	100.0%
	Total		.3%	1.8%	17.9%	67.4%	12.5%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2.667(b)	1	.102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786(c)	4	.31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5.077(d)	4	.279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4.894(e)	4	.005		

부표54. 성별 \* 투표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투표여부		Total
			투표하지 않았	투표했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100.0%	100.0%
	Total			100.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6.8%	93.2%	100.0%
		여자	9.9%	90.1%	100.0%
	Total		8.8%	91.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9.7%	90.3%	100.0%
		여자	15.5%	84.5%	100.0%
	Total		12.7%	87.3%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2.0%	88.0%	100.0%
		여자	12.7%	87.3%	100.0%
	Total		12.3%	87.7%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b)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924(c)	1	.336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245(d)	1	.039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066(e)	1	.797		

부표55. 성별 \* 투표대상 \* 학력별

% within 성별

			투표대상						Total
학력별			이회창	노무현	이한동	권영길	장세동	무응답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66.7%	16.7%		16.7%			100.0%
	Total		62.5%	12.5%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45.5%	49.1%	.9%	.9%	.9%	2.7%	100.0%
		여자	45.5%	52.4%		1.6%		.5%	100.0%
	Total		45.5%	51.2%	.3%	1.3%	.3%	1.3%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1.2%	51.9%		6.6%		.4%	100.0%
		여자	37.4%	54.5%		6.5%		1.6%	100.0%
	Total		39.3%	53.2%		6.5%		1.0%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31.2%	64.6%		4.2%			100.0%
		여자	35.9%	57.7%		5.0%		1.4%	100.0%
	Total		33.1%	61.7%		4.5%		.6%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1.067(a)	2	.58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6.399(b)	5	.269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361(c)	3	.501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6.226(d)	3	.101

부표56. 성별 \* 투표 결정기준 \* 학력별

% within 성별

			투표 결정기준								Total
학력별			정책 /공약	선거법 준수 여부	소속 정당	인물 /능력 (도덕성, 자질등)	개인적 연고 (출신 지역등)	정치 경력	기타	무응답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16.7%	16.7%	16.7%	33.3%			16.7%		100.0%
	Total		37.5%	12.5%	12.5%	25.0%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9.1%	1.8%	10.9%	53.6%	1.8%	7.3%	4.5%	.9%	100.0%
		여자	18.8%	.5%	10.5%	52.4%	2.1%	8.9%	6.3%	.5%	100.0%
	Total		18.9%	1.0%	10.6%	52.8%	2.0%	8.3%	5.6%	.7%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23.9%	.8%	8.2%	56.4%	2.5%	6.2%	2.1%		100.0%
		여자	21.1%	.8%	8.9%	60.6%	.8%	3.7%	4.1%		100.0%
	Total		22.5%	.8%	8.6%	58.5%	1.6%	4.9%	3.1%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25.6%	.3%	5.8%	56.8%	.6%	7.5%	2.9%	.3%	100.0%
		여자	28.2%	.5%	8.6%	52.7%	.5%	6.4%	3.2%		100.0%
	Total		26.7%	.4%	7.0%	55.1%	.6%	7.0%	3.0%	.2%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4	.349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989(b)	7	.96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6.074(c)	6	.415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3.235(d)	7	.862

부표57. 성별 \* 투표 결정기준(정책,비정책)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투표 결정기준(정책,비정책)		Total
			비정책	정책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83.3%	16.7%	100.0%
	Total		62.5%	37.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80.9%	19.1%	100.0%
		여자	81.2%	18.8%	100.0%
	Total		81.1%	18.9%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6.1%	23.9%	100.0%
		여자	78.9%	21.1%	100.0%
	Total		77.5%	22.5%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74.4%	25.6%	100.0%
		여자	71.8%	28.2%	100.0%
	Total		73.3%	26.7%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b)	1	.035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003(c)	1	.959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523(d)	1	.47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420(e)	1	.517		

부표58. 성별 \* 대통령임기 인지에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대통령임기 인지에부		Total
			오답	정답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100.0%	100.0%
	Total			100.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7.6%	92.4%	100.0%
		여자	19.8%	80.2%	100.0%
	Total		15.5%	84.5%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8%	95.2%	100.0%
		여자	7.6%	92.4%	100.0%
	Total		6.3%	93.8%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5.7%	94.3%	100.0%
		여자	6.0%	94.0%	100.0%
	Total		5.8%	94.2%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8.613(c)	1	.003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775(d)	1	.183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015(e)	1	.902

부표59. 성별 \* 광역단체장 인지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광역단체장 인지여부		Total
			오답	정답	
중졸 이하	성별	남자	31.4%	68.6%	100.0%
		여자	59.0%	41.0%	100.0%
	Total		49.1%	50.9%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33.8%	66.2%	100.0%
		여자	40.5%	59.5%	100.0%
	Total		37.3%	62.7%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29.7%	70.3%	100.0%
		여자	44.8%	55.2%	100.0%
	Total		36.0%	64.0%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3.117(c)	1	.00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699(d)	1	.1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4.543(e)	1	.000

부표60. 성별 \* 정치적 사건, 선거에 관심정도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정치적 사건, 선거에 관심정도							Total
			전혀 없다	2	3	4	5	6	매우 많다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16.7%	16.7%	16.7%	16.7%	100.0%
	Total			12.5%	37.5%	12.5%	12.5%	12.5%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7.6%	15.3%	17.8%	21.2%	14.4%	10.2%	13.6%	100.0%
		여자	13.2%	27.4%	16.5%	18.4%	11.3%	4.7%	8.5%	100.0%
	Total		11.2%	23.0%	17.0%	19.4%	12.4%	6.7%	10.3%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1%	7.8%	11.9%	36.4%	19.0%	11.5%	9.3%	100.0%
		여자	1.4%	19.2%	25.1%	28.2%	15.5%	5.8%	4.8%	100.0%
	Total		2.7%	13.8%	18.8%	32.1%	17.1%	8.6%	7.0%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2.6%	6.9%	13.7%	29.4%	26.9%	10.0%	10.6%	100.0%
		여자	3.6%	8.3%	28.2%	28.6%	19.0%	7.5%	4.8%	100.0%
	Total		3.0%	7.5%	19.8%	29.1%	23.6%	9.0%	8.1%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5	.48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3.158(b)	6	.041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3.371(c)	6	.0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27.304(d)	6	.000

부표61. 성별 \* 호주,호적제 존폐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호주,호적제 존폐여부					Total
			현행 유지	일부 개선	모르겠다	크게 수정	완전 폐지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33.3%		33.3%	16.7%	100.0%
	Total		25.0%	37.5%		25.0%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41.5%	12.7%	18.6%	14.4%	12.7%	100.0%
		여자	34.0%	20.3%	30.2%	9.0%	6.6%	100.0%
	Total		36.7%	17.6%	26.1%	10.9%	8.8%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29.0%	31.6%	10.4%	14.5%	14.5%	100.0%
		여자	12.0%	37.5%	8.6%	20.6%	21.3%	100.0%
	Total		20.2%	34.6%	9.5%	17.7%	18.0%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8.0%	33.7%	6.3%	18.9%	23.1%	100.0%
		여자	7.1%	28.6%	4.4%	23.8%	36.1%	100.0%
	Total		13.5%	31.6%	5.5%	20.9%	28.6%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1.778(a)	3	.620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2.810(b)	4	.012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8.373(c)	4	.0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25.390(d)	4	.000

부표62. 성별 \* 여성관련 문제 중 관심분야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여성관련 문제 중 관심분야							Total
			여성의 경제 참여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의 교육	여성의 복지	여성 단체 활동 및 문화 활동	여성의 인권 문제	관심 없다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33.3%		50.0%		100.0%
	Total		12.5%			37.5%		37.5%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2.7%	11.9%	10.2%	13.6%	5.9%	10.2%	35.6%	100.0%
		여자	5.7%	7.5%	9.0%	22.2%	10.4%	10.8%	34.4%	100.0%
	Total		8.2%	9.1%	9.4%	19.1%	8.8%	10.6%	34.8%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14.1%	8.6%	7.8%	18.2%	11.2%	17.5%	22.7%	100.0%
		여자	13.4%	8.9%	11.0%	25.1%	14.8%	17.2%	9.6%	100.0%
	Total		13.8%	8.8%	9.5%	21.8%	13.0%	17.3%	15.9%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7.7%	11.1%	6.9%	16.3%	11.4%	19.4%	17.1%	100.0%
		여자	17.5%	11.9%	7.5%	20.6%	9.1%	27.4%	6.0%	100.0%
	Total		17.6%	11.5%	7.1%	18.1%	10.5%	22.8%	12.5%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3	.21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0.989(b)	6	.089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1.013(c)	6	.002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21.245(d)	6	.002

부표63. 성별 \*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인지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인지여부		Total
학력별			모른다	알고 있다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83.3%	100.0%
	Total		25.0%	7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51.7%	48.3%	100.0%
		여자	61.3%	38.7%	100.0%
	Total		57.9%	42.1%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5.7%	54.3%	100.0%
		여자	40.9%	59.1%	100.0%
	Total		43.2%	56.8%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38.6%	61.4%	100.0%
		여자	36.9%	63.1%	100.0%
	Total		37.9%	62.1%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889(b)	1	.346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881(c)	1	.09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330(d)	1	.249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73(e)	1	.677		

부표64. 성별 \*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참여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여성, 시민단체의 여성관련 활동 참여여부		Total
학력별			없다	있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60.0%	40.0%	100.0%
	Total		66.7%	33.3%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75.4%	24.6%	100.0%
		여자	72.0%	28.0%	100.0%
	Total		73.4%	26.6%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87.0%	13.0%	100.0%
		여자	76.2%	23.8%	100.0%
	Total		81.1%	18.9%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85.1%	14.9%	100.0%
		여자	76.1%	23.9%	100.0%
	Total		81.3%	18.7%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600(b)	1	.439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09(c)	1	.647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6.043(d)	1	.014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4.883(e)	1	.027		

부표65. 성별 \*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모르겠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16.7%	50.0%	33.3%	100.0%
	Total				37.5%	37.5%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7%	3.4%	16.1%	53.4%	25.4%	100.0%
		여자	.9%	3.3%	21.2%	51.4%	23.1%	100.0%
	Total		1.2%	3.3%	19.4%	52.1%	23.9%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	4.1%	18.6%	54.6%	22.3%	100.0%
		여자	1.0%	.7%	22.7%	52.9%	22.7%	100.0%
	Total		.7%	2.3%	20.7%	53.8%	22.5%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1%	1.7%	17.4%	57.7%	22.0%	100.0%
		여자	.4%	1.2%	15.5%	59.5%	23.4%	100.0%
	Total		.8%	1.5%	16.6%	58.5%	22.6%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2	.108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607(b)	4	.807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9.036(c)	4	.06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798(d)	4	.773

부표66. 성별 \*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66.7%		100.0%
	Total		12.5%	25.0%		6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2.0%	33.1%	5.9%	28.0%	11.0%	100.0%
		여자	23.6%	25.0%	15.1%	25.9%	10.4%	100.0%
	Total		23.0%	27.9%	11.8%	26.7%	10.6%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15.2%	28.3%	1.5%	40.1%	14.9%	100.0%
		여자	14.8%	34.0%	3.8%	37.1%	10.3%	100.0%
	Total		15.0%	31.3%	2.7%	38.6%	12.5%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2.0%	24.0%	1.1%	44.0%	18.9%	100.0%
		여자	12.7%	31.0%	1.6%	40.1%	14.7%	100.0%
	Total		12.3%	26.9%	1.3%	42.4%	17.1%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3.733(a)	2	.155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7.372(b)	4	.118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6.912(c)	4	.141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4.932(d)	4	.294

부표67. 성별 \*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50.0%	16.7%	100.0%
	Total		12.5%	37.5%		37.5%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4.4%	23.7%	21.2%	29.7%	11.0%	100.0%
		여자	6.6%	29.2%	35.8%	17.9%	10.4%	100.0%
	Total		9.4%	27.3%	30.6%	22.1%	10.6%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14.5%	35.3%	4.5%	33.1%	12.6%	100.0%
		여자	9.3%	40.9%	7.6%	31.6%	10.7%	100.0%
	Total		11.8%	38.2%	6.1%	32.3%	11.6%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5.1%	35.1%	2.0%	33.1%	14.6%	100.0%
		여자	10.3%	43.7%	3.6%	32.1%	10.3%	100.0%
	Total		13.1%	38.7%	2.7%	32.7%	12.8%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3	.21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5.834(b)	4	.003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7.150(c)	4	.128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8.819(d)	4	.066

부표68. 성별 \*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  
이 필요하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미국과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주둔지위협정) 개정이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66.7%	100.0%
	Total			12.5%		25.0%	6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7.6%	13.6%	6.8%	22.0%	50.0%	100.0%
		여자	6.6%	10.4%	26.4%	25.5%	31.1%	100.0%
	Total		7.0%	11.5%	19.4%	24.2%	37.9%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4%	11.9%	2.2%	23.0%	55.4%	100.0%
		여자	2.7%	13.4%	2.7%	32.6%	48.5%	100.0%
	Total		5.0%	12.7%	2.5%	28.0%	51.8%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5.1%	11.7%	1.1%	26.9%	55.1%	100.0%
		여자	4.4%	10.7%	1.2%	29.4%	54.4%	100.0%
	Total		4.8%	11.3%	1.2%	27.9%	54.8%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3.733(a)	2	.155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3.345(b)	4	.00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2.431(c)	4	.014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663(d)	4	.956

부표69. 성별 \*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16.7%		33.3%	16.7%	100.0%
	Total		37.5%	12.5%		25.0%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1.0%	21.2%	5.1%	38.1%	24.6%	100.0%
		여자	15.1%	28.3%	11.3%	25.9%	19.3%	100.0%
	Total		13.6%	25.8%	9.1%	30.3%	21.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9.3%	26.8%	3.0%	34.9%	26.0%	100.0%
		여자	14.8%	30.6%	3.4%	32.6%	18.6%	100.0%
	Total		12.1%	28.8%	3.2%	33.8%	22.1%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8.6%	25.4%	2.6%	37.7%	25.7%	100.0%
		여자	7.9%	23.8%	1.2%	46.4%	20.6%	100.0%
	Total		8.3%	24.8%	2.0%	41.4%	23.6%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1.778(a)	3	.620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0.356(b)	4	.035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8.000(c)	4	.092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5.920(d)	4	.205

부표70. 성별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33.3%			33.3%	100.0%
	Total		37.5%	25.0%			37.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0.3%	30.5%	14.4%	22.9%	11.9%	100.0%
		여자	9.9%	25.9%	38.2%	15.1%	10.8%	100.0%
	Total		13.6%	27.6%	29.7%	17.9%	11.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16.0%	27.1%	7.4%	29.0%	20.4%	100.0%
		여자	7.9%	31.3%	15.8%	32.0%	13.1%	100.0%
	Total		11.8%	29.3%	11.8%	30.5%	16.6%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8.0%	28.9%	3.7%	29.7%	29.7%	100.0%
		여자	4.4%	30.2%	9.1%	33.3%	23.0%	100.0%
	Total		6.5%	29.4%	6.0%	31.2%	26.9%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889(a)	2	.641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3.725(b)	4	.00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1.871(c)	4	.0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3.308(d)	4	.010

부표71. 성별 \*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66.7%	16.7%	100.0%
	Total		12.5%	12.5%		62.5%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10.2%	18.6%	16.1%	34.7%	20.3%	100.0%
		여자	2.4%	13.2%	23.1%	35.8%	25.5%	100.0%
	Total		5.2%	15.2%	20.6%	35.5%	23.6%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7.4%	23.0%	6.7%	41.6%	21.2%	100.0%
		여자	2.4%	21.0%	6.2%	40.9%	29.6%	100.0%
	Total		4.8%	22.0%	6.4%	41.3%	25.5%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0.3%	26.3%	2.6%	41.7%	19.1%	100.0%
		여자	3.2%	15.9%	3.2%	40.5%	37.3%	100.0%
	Total		7.3%	21.9%	2.8%	41.2%	26.7%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3.733(a)	3	.292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3.136(b)	4	.011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1.514(c)	4	.021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35.689(d)	4	.000

부표72. 성별 \*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16.7%		33.3%	50.0%	100.0%
	Total		12.5%	12.5%		37.5%	37.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9.3%	13.6%	11.0%	44.9%	21.2%	100.0%
		여자	2.8%	9.4%	14.6%	43.9%	29.2%	100.0%
	Total		5.2%	10.9%	13.3%	44.2%	26.4%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4.5%	21.6%	1.5%	48.7%	23.8%	100.0%
		여자	1.0%	12.7%	2.7%	41.9%	41.6%	100.0%
	Total		2.7%	17.0%	2.1%	45.2%	33.0%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2.6%	14.9%	1.4%	50.3%	30.9%	100.0%
		여자		5.6%	1.6%	38.9%	54.0%	100.0%
	Total		1.5%	11.0%	1.5%	45.5%	40.5%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3	.21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10.010(b)	4	.04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28.437(c)	4	.0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41.555(d)	4	.000

부표73. 성별 \*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 학  
력별

% within 성별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은 가정주부이다"에 대해					Total
학력별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50.0%	33.3%		16.7%		100.0%
	Total		37.5%	37.5%		12.5%	12.5%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21.2%	36.4%	2.5%	19.5%	20.3%	100.0%
		여자	20.8%	32.1%	8.0%	19.3%	19.8%	100.0%
	Total		20.9%	33.6%	6.1%	19.4%	20.0%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29.0%	29.4%	2.6%	20.4%	18.6%	100.0%
		여자	46.7%	29.6%	2.1%	15.5%	6.2%	100.0%
	Total		38.2%	29.5%	2.3%	17.9%	12.1%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39.4%	36.6%	2.0%	14.0%	8.0%	100.0%
		여자	57.5%	23.4%	.8%	11.5%	6.7%	100.0%
	Total		47.0%	31.1%	1.5%	13.0%	7.5%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4.444(a)	3	.217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199(b)	4	.380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31.336(c)	4	.000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20.826(d)	4	.000

부표74. 성별 \*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33.3%	33.3%		16.7%	16.7%	100.0%
	Total		37.5%	25.0%		12.5%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42.4%	18.6%	14.4%	20.3%	4.2%	100.0%
		여자	40.6%	16.0%	24.5%	14.2%	4.7%	100.0%
	Total		41.2%	17.0%	20.9%	16.4%	4.5%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39.0%	19.7%	8.9%	27.1%	5.2%	100.0%
		여자	34.7%	27.8%	11.7%	19.2%	6.5%	100.0%
	Total		36.8%	23.9%	10.4%	23.0%	5.9%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34.9%	25.4%	3.4%	30.3%	6.0%	100.0%
		여자	34.5%	29.0%	4.4%	26.6%	5.6%	100.0%
	Total		34.7%	26.9%	3.8%	28.7%	5.8%	100.0%

##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1.778(a)	3	.620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5.890(b)	4	.208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9.801(c)	4	.044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1.770(d)	4	.778

부표75. 성별 \*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 학력별

( % within 성별)

학력별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필요하다"에 대해					Total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33.3%	66.7%	100.0%
	Total					25.0%	7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8.5%	16.1%	12.7%	32.2%	30.5%	100.0%
		여자	2.8%	16.5%	17.0%	36.8%	26.9%	100.0%
	Total		4.8%	16.4%	15.5%	35.2%	28.2%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3.0%	16.0%	3.0%	39.0%	39.0%	100.0%
		여자	3.1%	19.6%	5.2%	37.8%	34.4%	100.0%
	Total		3.0%	17.9%	4.1%	38.4%	36.6%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1.1%	18.3%	4.0%	44.9%	31.7%	100.0%
		여자	1.2%	17.1%	2.4%	38.5%	40.9%	100.0%
	Total		1.2%	17.8%	3.3%	42.2%	35.5%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889(b)	1	.346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6.690(c)	4	.153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3.529(d)	4	.474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6.146(e)	4	.189		

부표76. 성별 \*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정당, 정치인 후원단체에 가입여부		Total
			가입하고 있지 않다	가입하고 있다	
무응답	성별	남자	100.0%		100.0%
		여자	66.7%	33.3%	100.0%
	Total		75.0%	25.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97.5%	2.5%	100.0%
		여자	97.2%	2.8%	100.0%
	Total		97.3%	2.7%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94.8%	5.2%	100.0%
		여자	94.5%	5.5%	100.0%
	Total		94.6%	5.4%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94.9%	5.1%	100.0%
		여자	98.4%	1.6%	100.0%
	Total		96.3%	3.7%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889(b)	1	.346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024(c)	1	.878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024(d)	1	.877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5.261(e)	1	.022		

부표77. 성별 \* 가입단체여부 \* 학력별

			% within 성별		
학력별			가입단체여부		Total
			미가입	가입	
무응답	성별	남자	50.0%	50.0%	100.0%
		여자	50.0%	50.0%	100.0%
	Total		50.0%	50.0%	100.0%
중졸 이하	성별	남자	67.8%	32.2%	100.0%
		여자	72.6%	27.4%	100.0%
	Total		70.9%	29.1%	100.0%
고졸 이하	성별	남자	62.5%	37.5%	100.0%
		여자	65.3%	34.7%	100.0%
	Total		63.9%	36.1%	100.0%
대재 이상	성별	남자	62.6%	37.4%	100.0%
		여자	65.5%	34.5%	100.0%
	Total		63.8%	36.2%	100.0%

Chi-Square Tests

학력별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무응답	Pearson Chi-Square	.000(b)	1	1.000		
중졸 이하	Pearson Chi-Square	.863(c)	1	.353		
고졸 이하	Pearson Chi-Square	.488(d)	1	.485		
대재 이상	Pearson Chi-Square	.535(e)	1	.464		

부표78. 조사응답자의 직업별 \* 성별

단위:명, %

	남자	여자	Total
전문직	52(7.0)	53(7.0)	105(7.0)
공무원	20(2.7)	8(1.1)	28(1.9)
화이트칼라	154(20.8)	56(7.4)	210(14.0)
자영업	157(21.2)	113(14.8)	270(18.0)
판매/서비스	14(1.9)	18(2.4)	32(2.1)
블루칼라	55(7.4)	12(1.6)	67(4.5)
농림어업	42(5.7)	24(3.2)	66(4.4)
학생	100(13.5)	79(10.4)	179(11.9)
가정주부	3(0.4)	282(37.1)	285(19.0)
기타	67(9.1)	30(3.9)	97(6.5)
무직	64(8.7)	76(10.0)	140(9.3)
무응답	11(1.5)	10(1.3)	21(1.4)
Total	739(100.0)	761(100.0)	1500(100.0)



설 문 지

「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연구」 관련  
유권자 의식 조사

ID				
----	--	--	--	--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개발원에서는 이번에 치루어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는 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연구기관으로 대통령선거에 관한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내용은 통계적인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여성개발원 ·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선문 1. 거주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선문 2. 도시 규모

-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군지역(읍·면·리)

선문 3. 성별 (외모로 판단) (1) 남자 (2) 여자

선문 4. ○○님의 '연세'는 선거일인 12월 19일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 ※ 1982년 12월 20일 이전 출생자만 면접하세요 ]

선문 5. 면접지역

시/도                  구/시/군                  동/읍                  면/리

선문 6. 면접조사원 기재사항

이름 :                  연락처 :                  면접일시 :

## (1) 선거 공정성에 관한 질문

문1.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 ① 전혀 없었다                      ② 별로 없었다  
③ 조금 있었다                      ④ 매우 많았다

문2.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가 과거 선거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깨끗하게 치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혼탁했다                      ② 깨끗하지 못한 편이다  
③ 비슷했다                              ④ 다소 깨끗했다                      ⑤ 매우 깨끗했다

문3.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정부가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지키지 못했다                      ② 별로 지키지 못했다  
③ 대체로 잘 지켰다                      ④ 매우 잘 지켰다  
⑤ 무응답

## (2) 투표참여와 지지 후보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문4.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 ① 투표했다 <☞ 문5로 >                      ② 투표하지 않았다 <☞ 문7로 >

§ 다음의 문항은 투표한 분만 응답해 주십시오.

문5. (투표를 한 경우) 어느 후보를 찍으셨습니까?

- ① 이회창                      ② 노무현                      ③ 이한동                      ④ 권영길  
⑤ 김영규                      ⑥ 김길수                      ⑦ 장세동                      ⑧ 무응답

문6. 선생님께서는 지지 후보자 결정시 어떤 점을 가장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 ① 정책/공약                      ② 선거법 준수 여부  
③ 소속정당                      ④ 인물/능력(도덕성, 자질 등)  
⑤ 출신지역 등 개인적 연고                      ⑥ 정치경력  
⑦ 기타 (                      )                      ⑧ 무응답

§ 다음문항은 모든 분들이 응답해 주시는 공통문항입니다.

문7.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이라 알고 계십니까?

① 정답

② 오답

문8. 선생님께서 현재 살고계신 지역의 \_\_\_\_ 도지사, 또는 \_\_\_\_광역시장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① 정답

② 오답

### (3)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

문9. 선생님께서는 평소에 정치적 사건이나 선거에 관심이 많은 편이십니까?

전혀 없다

매우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문10.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호주·호적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호주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② 호주제를 유지하되 일부 개선한다

③ 모르겠다

④ 호주제를 크게 수정해야 한다

⑤ 호주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

문11. 선생님께서는 다음의 여성과 관련된 문제중 특히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까?

① 여성의 경제참여 ② 여성의 정치참여

③ 여성의 교육

④ 여성의 복지

⑤ 여성단체 활동 및 문화활동

⑥ 여성의 인권문제 ⑦ 관심없다

문12. 선생님께서는 각종 시민단체, 여성단체가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문14로

§ 안다고 응답한 경우만 답변해 주십시오.

문13.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러한 단체의 강연회, 교육 등 각종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4) 정책에 대한 질문

문14. 선생님께서는 “내가 투표한 한 표가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평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절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모르겠다                      ④ 그런 편이다                      ⑤ 정말 그렇다

§ 다음 질문내용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번호	내용	절대 반대	약간 반대	모르겠다 (읽어주지 말것)	약간 찬성	전적으로 찬성
문15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상관없이 민족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 많이 해야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기업이 스스로 개혁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정부는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7	미국과의 우호를 깨더라도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개정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18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여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9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0	국회의원 여성할당제는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조직의 장이나 주요 결정직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2	여성의 가장 적합한 역할 은 가정주부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3	대학의 기여입학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24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환경보전이 우선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25. 선생님은 국회의원 또는 선거출마 후보자 (정당, 정치인 등) 를 후원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 ㉠ 가입하고 있다.

## ■ 인구통계학적 질문

S1. 선생님의 교육정도는?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이하    ③ 대졸 이상    ④ 무응답

S2. 선생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천도교      ⑥ 원불교 ⑦ 기타(            )      ⑧ 없음

S3. 다음의 단체에 가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복수선택가능)

- ① 지역주민 자치회      ② 학교 자모회      ③ 청년회      ④ 노인회  
⑤ 농협 등 농림어업단체      ⑥ 노동조합  
⑦ 직업관련 경제단체      ⑧ 종교단체      ⑨ 취미 관련 동호회  
⑩ 소비자단체      ⑪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S4. 선생님 덕의 전체수입은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 ① 70-89만원      ② 90-119만원      ③ 120-149만원  
④ 150-199만원    ⑤ 200-249만원      ⑥ 250-299만원  
⑦ 300만원 - 399만원    ⑧ 400만원 이상    ⑨ 무응답

S5. 선생님의 출신지역은?

- ① 서울            ② 경기            ③ 강원            ④ 충청            ⑤ 전라  
⑥ 경상            ⑦ 제주            ⑧ 전북            ⑨ 해외

S6. 선생님의 직업은? 선생님이 가구주(주주입원)가 아닌 경우는 가구주의 직업도 같이 표시해 주십시오.

- 1) 본인( )      2) 가구주( )
- |           |        |         |         |
|-----------|--------|---------|---------|
| ① 전문직     | ② 공무원  | ③ 화이트칼라 | ④ 자영업   |
| ⑤ 판매/서비스직 | ⑥ 블루칼라 | ⑦ 농임어업  | ⑧ 학생    |
| ⑨ 가정주부    | ⑩ 기타   | ⑪ 무직    | 99. 무응답 |

2002 연구보고서 210-27

## 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

2002년	2월	7일	인쇄
2003년	2월	10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356-0070 (代)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313-7593 (代)

---

---

ISBN 89-8491-057 093340